

탈냉전기 일본의 국내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인쇄/1999년 12월 28일

발행/1999년 12월 31일

발행처/통일연구원

발행인/곽태환

편집인/국제관계연구소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7 팩시밀리 901-2543

© 통일연구원, 1999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 734-6818 · 사무실 : 394-0337

ISBN 89-87509-80-X

6,500원

연구총서 99-04

탈냉전기

일본의 국내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배 정 호

통일연구원

요약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국제사회가 21세기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향하여 진통을 겪게 될 때, 일본의 自民黨 장기정권 또한 제도적 피로와 정치개혁 능력의 한계성을 노출하면서 1993년의 7·18총선을 계기로 붕괴되었다. 그리고 일본 정치는 대지각변동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게 되면서, '21세기의 정치대국'과 이를 위한 '새로운 정치적 틀'의 형성을 지향하여 정치·역사적 의미를 지닌 진통을 겪기 시작하였다.

본서는 일본의 정치변동과 정계개편에 대한 조명을 위하여 일본 정치변동의 직·간접적 원인과 自民黨 정권의 한계성, 7·18총선 이후 일본정계의 재편과 권력게임, 10·20총선에 따른 自民黨정권의 부활과 '21세기 대비 국가개혁', 국정주도력 강화를 위한 보수대연합의 추진과 '自民·自由·公明黨' 聯政의 출범 등에 관해 정치과정론적 접근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증대와 대외정책의 변화에 대한 조명을 위하여 ① 정치변동과 대외정책노선의 변화, 신보수세력의 정치대국화 노선과 전략구도의 특징, ②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확대·발전과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 일본의 군사력의 질적 증강 및 법적·제도적 정비,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증대와 한반도 급변사태 등에 대해 전략적 접근을 통하여 분석을 하였고, ③ 탈 냉전기 북·일관계의 변천, 일본 대북한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등에 관해서는 정치과정론적 접근 및 전략적 접근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일본 국내 정치변동의 대외정책에로의 투영에 관하여 재조명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증대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분석하였고, 한국의 대응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1. 국내 정치변동과 정계개편

가. 自民黨정권의 한계성과 7·18총선에 따른 정치변동

전후 38년간 집권해 온 自民黨이 제도적 피로와 정치개혁 능력의 한계성을 노출하면서 일본 정치는 지각 변동을 겪기 시작하였다. 그와 같은 일본 정치의 일련의 지각변동은 ① 직접적으로는 정계의 부패, 정치개혁을 둘러싼 自民黨 내부의 갈등 및 여야간의 대립, 自民黨정권의 정치개혁 실패 등에 의한 것이고, ② 간접적으로는 일본사회의 변화, '정책-정치'공간의 확대와 自民黨정권의 한계성, 동서냉전체제의 붕괴 등에 의한 것이다.

일본의 정치변동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치루어진 1993년의 7·18총선 직후 제1당 자민당이 연립정권의 수립에 실패하고 38년만에 붕괴함에 따라, 일본정치는 일련의 정치변동 속에서 이합집산에 따른 정계개편의 진통을 겪게 되었다.

7·18총선 이후 일본의 정치는 ① '비자민 연립정권' 대 '야당 自民黨', ② '무라야마 사회당총리의 연립정권' 대 '통합야당 新進黨', ③ '오자와 신진당 당수' 대 '하시모토 自民黨 총리의 연립정권' 등과 같은 대립구도를 형성하면서 각 정파들의 합종연횡에 따른 정계개편을 겪게 되는데, 연립정권시대가 개막되도록 하였다.

정치변동에 따른 연립정권의 시대 즉 ① 호소가와 연립정권, ② 하타 연립정권, ③ 무라야마 연립정권, ④ 하시모토 연립정권을 거치면서 일본정치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나타내었다.

첫째, 共產黨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모두 연립정권에 참여하여 여당경험을 가지게 되는데, 그와 같은 일본정당의 여당화는 일본의

정치공간을 거의 보수·우경화로 변모시켰다. 특히 무라야마 연립내각의 출범과 더불어 社會黨은 현실노선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로써 共產黨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은 기본이념이나 정책노선에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되었다. 즉 1996년 1월에 치루어진 自民黨, 新進黨, 社會民主黨의 黨대회에서 제시된 정계개편 및 주요 정책에 대한 기본방침에는 명확한 정책의 대립이 나타나 있지 않았다.

둘째, 55년체제에서 제1야당이었던 社會黨이 연립정권시대를 거치면서 계속 침하함에 따라 일본의 정치구도는 ‘보수 대 혁신’의 구도에서 ‘보수 대 보수’의 구도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변화와 더불어 社會黨은 黨名을 ‘社會民主黨’으로 변경하였다.

셋째, 정계개편 등 일련의 정치적 변화 속에서 호소카와 모리히로, 오자와 이치로, 하타 쓰토무, 고노 요헤이, 하시모토 류타로, 하토야마 유키오, 간 나오토(菅直人) 등의 쇼와(昭和)세대가 일본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일본정계에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울러 신보수세력이 일본정계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10·20총선에 따른 自民黨정권의 부활과 정치변동

(1) 10·20총선과 하시모토 自民黨 단독내각의 등장

일본정치의 변화, 특히 일본 정치공간의 보수·우경화와 신보수세력의 등장은 1996년 10월 20일의 중의원 총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0·20총선은 과거의 증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2~6명 선출)가 아닌 소선거구·비례대표제 병립제(한 선거구에서 1명 선출, 비례대표는 11개 블록별로 정당득표에 따라 당선) 아래에서 처음으로 치루어진

선거였는데, 그 결과는 自民黨 승리(211→239), 新進黨 패배(160→156), 民主黨 현상유지(52→52), 共產黨 약진(15→26), 社民黨 몰락(30→15)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혁신계인 共產黨이 다소 약진하였다 하더라도 군소정당에 불과하므로, 일본사회의 ‘중보수화’ 분위기 속에서 신보수세력이 衆議院 의석의 절대 다수를 점하게 되는 선거였다.

10·20 총선후 自民黨은 社會民主黨과 新黨사키가케의 閣外협력으로 3년 3개월만에 自民黨정권을 부활시키게 되는데, 自民黨 단독집권의 부활을 실현시킨 하시모토 총리는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21세기 일본을 위한 국가개혁’을 추구하였다. 즉 하시모토 총리는 내각출범과 함께 21세기에 대비하는 ‘개혁과 창조’를 기치로 내걸고, ‘고비용-저효율’의 국가경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행정개혁을 비롯한 재정구조개혁, 경제구조개혁, 금융시스템의 개혁, 사회보장구조개혁, 교육개혁 등 6대 국가개혁을 추구한 것이다.

6대 국가개혁을 지향한 하시모토의 강력한 리더십은 自民黨의 지지를 확산되도록 하였고, 自民黨의 세력확대와 더불어 自民黨 장기집권시 권력운용의 핵심요체였던 파벌과 族(특정 정책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國會議員群)이 다시 부활되는 조짐을 나타내었다.

요컨대, 하시모토 총리의 국정운용은 21세기를 위한 개혁지향적 특징을 나타냈지만, 권력운용은 해체되었던 파벌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自民黨의 각 파벌들은 1993년 7·18총선을 계기로 自民黨이 야당으로 전락한 뒤, 1994년 11월 黨개혁 차원에서 내려진 해체결정에 응하여 일단 해체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平成研究會’(오부치派), ‘新政策研究會’(미즈즈카派), ‘木曜研究會’(미야자와派), ‘政策科學研究所’(와타나베派), ‘番町政策研究所’(고모토派) 등 정책연구회 형태로 전환하여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파벌의 존재는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의 전환, 파벌에 대한 정치헌금 금지 등으로 이전에 비해서 약화되었

지만, 각료 배분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 自民黨 단독정권의 부활과 더불어 재등장한 族은 衆議院의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전환되면서 종전과 다소 다른 측면을 나타내는 한편, 하시모토 내각의 행정개혁에 적지 않은 저항으로 영향력을 미쳤다.

(2) 보수대연합의 추진과 ‘自民·自由·公明黨’ 聯政의 출범

하시모토 총리의 퇴진으로 등장한 오부치 내각은 하시모토 내각의 유산인 국정개혁작업의 마무리, 불황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 미·일 신「방위협력지침」과 관련된 유사법제의 정비 등 많은 주요한 국정과제를 안고 출범하게 되었지만, 국민들로부터는 그다지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즉 오부치 총리의 리더십 결여와 그에 따른 국민들의 신뢰감 저하, 불황의 장기화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등으로 인하여 오부치 내각은 역대 정권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인 25~33%대의 저조한 지지율 속에 출범하였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국민들의 오부치 내각에 대한 낮은 지지율은 좀처럼 상승하지 않았고, 오히려 집권 3개월이 경과한 1998년 11월경에는 ‘정권위기설’의 유포와 함께 16~24%대로 더욱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오부치 총리와 自民黨은 국정운영의 주도력을 회복하고 이를 집권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① 제1단계로 ‘自民·自由黨 聯立政權’을 성립시켰고, ② 제2단계로 ‘自民·自由·公明 3黨 聯立政權’을 성립시켰다. 즉 ‘21세기 대비 국가체제의 정비’를 추구할 수 있는 집권기반이 강화된 것이다.

이와 같은 강화된 집권기반을 바탕으로 오부치 총리는 1999년 5월 24일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관련 3개의 법안 즉 「주변사태법」, 「자

위대법 개정안, 「미·일 물품 역무 상호제공협정(ACSA) 개정안」을 성립시켰고, 동년 7월 8일에는 행정개혁 관련 2개의 법안 즉 「政府組織 改編法」 및 「地方分權 整備法」을 성립시켰으며, 동년 7월 9일에는 히노마루·기미가요를 국가·국가로 공식화하는 「國旗·國歌法」을 성립시켰다. 또 동년 7월 29일에는 ‘憲法調査會’를 설치하자는 ‘改憲推進聯盟’의 「國會法改正案」이 가결되도록 하여 2000년 1월부터는 衆·參 兩院에서 개헌논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오부치 정권은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회의 정책심의 및 입법능력을 제고시키는 개혁을 추구하였고, 총리의 사적 자문기관인 ‘21세기 일본의 구상’간담회’를 발족시켜 ‘새로운 세기의 국가상’을 모색토록 하고 있다.

2.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증대와 대외정책의 변화

가. 정치변동과 대외정책노선의 변화

1990년 걸프전이 발발하여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 결성될 때 일본은 자위대 파병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정치’를 되풀이 하면서, 자위대의 파병 대신 130억 달러의 전쟁비용을 지불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130억 달러의 전쟁비용을 지불하고도 人的 공헌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하여 미국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데, 그와 같은 비난은 일본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 증대론’이 대두되도록 하였다.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 증대론’은 정치변동과 정계개편의 과정 속에서 公論化되기 시작하였는데, 정치변동기에 일본 정치의 핵심

세력으로 등장한 쇼와세대의 신보수세력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증대를 통한 정치대국화를 추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즉 대국주의(great power nationalism) 성향을 지닌 신보수세력의 대외정책노선은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공헌 및 역할 증대를 통하여 정치대국화를 추구하는 것인데, 신보수세력의 정치대국화 전략의 구도와 특징은 <표>와 같다.

<표> 정치대국화 전략의 구도와 특징

제1차원: 글로벌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 중시 전략 :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추구 - UN의 평화활동 적극 참여 - UN의 예산 분담
제2차원: 아시아·태평양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강대국 추구 - 미·일안전보장체제의 발전에 따른 일본의 전략적 역할증대와 더불어 일본의 독자적 영역 확대 - '親美入亞' 전략
제3차원: 국내적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적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리의 리더십 및 내각의 위기관리 기능 강화 - 정보분석능력의 강화 ○법적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법제의 정비 ○군사력의 질적 증강

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증대와 안보정책

탈냉전시대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은 고도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정치적·경제적 안정성은 높지만, 핵전력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력의 존재, 다수국가의 군사력의 증강, 한반도 긴장의 계속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요소가 잔존하고 있으므로, 미·일 양국은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과 더불어 확대·발전을 도모

하게 되었다.

미·일의 이와 같은 전략적 인식은 1992년 1월의 ‘東京宣言’을 통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차원(regional level) 및 글로벌 차원(global level)에서의 미·일 동반자의 관계로 표명되었다.

미국에 있어서 일본은 세계전략 및 아시아·태평양전략을 전개해 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전략적 파트너이며, 미국 역시 일본에게 있어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증대를 통하여 정치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미·일동맹체제를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일의 전략적 상호의존은 미국 국방부가 1995년 2월에 발표한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 관한 미국의 안전보장전략」(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1995)이나 동년 11월 일본이 발표한 「新防衛大綱」에서 그 중요함이 재차 강조되었고, 1996년 4월에 발표된 「미·일 안전보장 공동선언: 21세기를 향한 동맹」(Japan-U.S. Joint Declaration on Security - Alliance for the 21st Century) 통하여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확대발전으로 나타났으며,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확대발전에 따른 미·일의 군사적 협력 방안은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Guidelines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의 제정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의 가장 큰 특징은 ① 미·일 방위협력의 중점이 종래의 ‘일본 유사’ 및 ‘극동 유사’에서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주변 유사’로 이행한 것과 ② ‘주변지역 유사’의 범위를 지리적 개념이 아닌 ‘사태의 성질에 파악하는 개념’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인데, 이는 구체적으로 미·일이 양국의 방위협력을 종래의 ‘옛 소련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서 ‘중국 위협’이나 ‘대만 유사’ 그리고 ‘한반도 유사’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 안보상황에 따라 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를 시사하는 것이다. 즉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상황에 따라 탄력성을 가지고 확대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본은 이와 같이 확대된 군사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군사력의 질적 증강 및 법적·제도적 정비를 추구하고 있다. 즉,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상방공체제, 미사일방공체제, 정보·지휘·통신 능력의 강화를 지향하여 군사력의 하이테크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최고의 전함 이지스함의 보유, AWACS의 보유, 최신예 전투기 F2의 실전배치, 첩보위성의 독자개발, TMD연구에 참가, 공중급유기의 도입, 대형 수송함의 자체 개발, 신형 고속정의 건조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제도적 정비의 일환으로 종합기관인 정보본부를 발족시켰고, 방위정보회의를 설치하였으며, 내각 정보회의를 발족시켰다. 그리고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유사법제 즉 「주변사태법」, 「자위대법 개정안」, 「미·일 물품역무 상호제공협정(ACSA)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 관련 법안의 성립과 더불어 일본은 한반도 급변사태를 상정한 ‘주변사태’에 대비하여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 방위청은 1999년 8월 6~7일 제주도와 나가사키(長崎)縣 고토(五島) 열도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최초로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였고, 이어 동년 10월 27일~11월 9일에는 한반도 급변사태를 상정한 대규모 기동 해상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밖에 동년 11월 30일 북한 공작선의 영해 침범을 가정한 ‘선박 정선 훈련’을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공동훈련으로 실시하였고, 2000년 2월에는 ‘북한 기습남침에 따른 주변 급변사태’를 상정한 대규모 ‘미·일 합동 도상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이 대규모 ‘미·일 합동 도상훈련’에서는 본격적인 ‘지휘소 연습’이 실시될 예정인데, ‘지휘소 연습’은 북한의 남

침을 가상해 이를 '주변사태'로 판단한 뒤, ① 미군에 대한 병참지원 실시, ② 북한의 미사일 공격 및 무장 게릴라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 점거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도상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다. 국교정상화와 대북한정책

북·일관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냉전체제가 붕괴하고 탈냉전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한국의 북방정책이 전향적으로 전개하게 되자, 일본은 전후처리 외교차원에서 북·일수교를 지향한 대북한 '접근 및 대화'전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되었다. 정치권의 주도로 시작된 일본의 대북한 접근은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이 전개되면서 외무성을 통한 실무수준에서 추진되었다. 국교정상화 교섭은 여덟 차례의 수교회담을 가지게 되었는데, 미·북관계 등의 영향으로 좌절되게 되었다. 수교회담이 좌절된 이후, 북·일은 때로는 '수면 아래' 때로는 '수면 위'에서 접촉과 교섭을 벌여 왔다.

이와 같은 탈냉전기 북·일관계의 변천은 시기별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제1기: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국교정상화를 지향한

북·일의 전향적 접근

제2기: 정체상태의 북·일관계

제3기: 국교정상화의 환경정비를 위한 북·일의 접근

제4기: '갈등속의 접촉', '접촉속의 갈등'상태의 북·일관계,

일본의 대북한 '대화과 억제'전략의 병용 추진

이처럼 북·일관계는 '접근과 냉각'을 되풀이 하면서 변천해 왔는데, 일본의 대북한 접근정책과 관련하여 일본의 전략적 의도 및 이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북·일 국교정상화는 일본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전후처리 및 결산을 나타내는 것이다. 북·일수교가 이루어질 경우, 일본은 '20세기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를 '대외적 차원에서의 전후결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둘째, 북·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질 경우, 일본은 북한지역에 아시아 대륙 및 시베리아 진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는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증대로 귀결될 수 있고, 따라서 '21세기 정치대국 일본'을 위한 국가전략에도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의 대북한정책은 1998년 8월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사건을 계기로 하여 현상유지 수준을 탈피하여 보다 강·온 양면에서 적극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는데, 일본 정부가 일본내 대북한 위협론이 확산됨에 따라 북한 위협론의 확산에 대한 대응, 신뢰할 수 있는 대북한 채널 확보, 미·북관계의 진전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 신중하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한 '대화화 억지'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요컨대, 북한이 ① 대일본 관계개선을 위한 접근을 추구하여 '대화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②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잠재적 협박전략'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일본은 ① 군사적 역할 증대 및 군사력의 정비를 바탕으로 하는 대북한 강경조치를 취하고, ② 북한 미사일문제 등과 관련하여 '대북한 압박외교'를 추진하면서, ③ 접근과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 정책도 병행하여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북·일관계는 1999년 12월 1~3일 초당파 국회의원단의 방북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초당파 국회의원단과 북한 노동당은 ① 국교정상화 교섭의 조기 재개, ② 양국 정부의 협력아래 적십자사를 통한 인도적 문제의 협의·해결, ③ 교류와 왕래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는 동년 12월 20일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위한 ‘국장급 예비회담’을 베이징(北京)에서 개최하고 2000년초에 ‘대사급 본회담’을 개최하는 방침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식량지원, 납치의혹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북·일 적십자회담’을 ‘국교정상화 예비회담 및 본회담’과 동시에 개최하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일본 정부는 언론을 통하여 대북한 식량지원 금지의 해제조치를 세 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것을 시사하였고, 나아가 동년 12월 14일에는 대북한 제재조치를 전면 해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즉 일본 정부는 대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전향적 태도를 나타내면서도 ① 국교정상화 교섭과 인도적 문제의 협의를 병행하는 전략, ② 주요한 ‘교섭의 전략적 카드(bargaining chip)’ 가운데 하나인 식량지원과 연계시키려는 전략을 표명한 것이다. 이는 북·일관계가 주요 현안의 처리와 국교정상화를 향해 전향적인 자세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북한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잠재적 협박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일관계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채널’을 확보하는 이상의 수준으로 발전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3. 국내 정치변동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가. 일본 국내정치변동의 대외정책에로의 투영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국제정치와 국내정치가 連動하는 영역이 급격하게 증대되면서 국제정치와 국내정치간의 浸透현상도 급증하고 있다.

일본 정치도 탈냉전시대의 도래에 따른 국제환경 및 일본사회의

변화, '정책-정치'공간의 확대와 自民黨 정권의 한계성 등으로 인하여 커다란 변동을 겪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정치변동은 미시적 차원에서는 정계개편을 향한 권력게임의 산물이지만, 거시적 차원에서는 '21세기의 정치대국 일본'을 지향하여 새로운 정치적 틀, 국가체제를 형성해 가는 가운데 수반되는 정치적·역사적 의미를 지닌 진통이다. 즉 동서냉전시대의 55년체제가 '통상국가 일본'을 '경제대국 일본'으로 발전시켰다면,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7·18총선을 계기로 형성되는 새로운 체제는 '경제대국 일본'을 '정치대국 일본'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따라서 정치변동 속에서 '강한 일본'을 주창하면서 부상한 '쇼와세대의 신보수세력'은 21세기의 도전에 대비하여 국가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신보수세력의 정치대국화를 위한 전략에 따라 ① 일본의 대외정책은 ㉞ 글로벌 차원의 전략, 즉 유엔 중시 전략에 따라 유엔개혁·예산분담·PKO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꾀하고 있고, ㉟ 아시아·태평양 차원에서는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발전에 따른 증대된 일본의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의 영향력 확대와 더불어 독자적 영역의 확보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리고 ② 일본의 국내정치는 확대된 대외활동 및 군사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정비 및 군사력의 질적 증강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국내정치와 대외정책이 연계되는 부문이며, 국내정치의 변동이 대외정책의 변화에 투영되는 부문이기도 하다.

'국내정치의 변동과 대외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정책의 연관에 관하여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부분이 주목되는 특징이다.

첫째, 自民黨정권이 붕괴하고 연립정권의 시대가 전개되면서 공산

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당이 여당 경험을 가지게 되는데, 그와 같은 일본정당의 국정운영의 경험은 현실적인 정책지향형 정당을 추구하도록 하면서, 정치공간에서의 보수·우경화 부문이 확대되도록 하였다. 이는 일본이 정치대국화와 더불어 국제사회에서의 군사적 역할의 증대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정치적 환경의 조성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7·18총선 이후 일련의 정치적 변화 속에서 쇼와세대의 신보수세력이 일본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신보수세력의 '21세기 정치대국 일본'을 지향하는 정치노선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론'의 제시와 더불어 일본의 대외정책에 투영되고 있다.

셋째, 10·20총선후 自民黨정권이 부활하게 되면서 신보수세력은 自民黨을 중심으로 재결집하게 되는데, 이는 집권기반의 강화와 더불어 '21세기의 정치대국 일본'을 지향할 수 있는 법적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自民·自由黨 聯政의 수립과 더불어 그 동안 미해결의 난제로 남아 있던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관련 세 개의 법안 즉 「주변사태법」, 「자위대법 개정안」, 「미·일 물품 역무 상호제공 협정(ACSA)」이 국회에서 가결되도록 하였고, 히노마루·기미가요를 국가·국가로 공식화하는 「國旗·國家法」을 성립시켰으며, 아울러 행정개혁·정치개혁 관련 법안인 「정비조직 개편법」·「지방분권 정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였다. 「정비조직 개편법」의 성립으로 총리의 리더십 및 내각의 위기관리 기능이 강화되게 되었고,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관련 세 개 법안의 성립과 더불어 한반도 유사시 및 일본 주변 유사시를 상정한 대책이 일본, 한·일협력, 미·일협력 수준에서 활발하게 강구되고 있다.

넷째, 신보수세력은 1998년 8월 북한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

이후 일본내 확산되고 있는 북한 위협론을 ① 직접적으로는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관련 새 개법안의 성립, 군사력의 질적 증강, 등을 추구하는 데 전략적으로 활용하였고, ② 간접적으로는 보수세력의 결집을 도모하는 데 활용하였다. 아울러 ③ 대북한 ‘대화과 억지’ 병용 정책이 ‘억지를 바탕으로 한 대화’정책으로 질적 전환이 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특징들은 ① 일본의 국내 정치변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신보수세력이 일본정계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하였고, ② 일본정치의 주도세력인 신보수세력이 21세기 일본의 진로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국내 정치변동이 대외정책에 투영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국내외 환경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지도자의 리더십과 결단력, 정치주도세력의 비전 및 정책수행 의지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 정책적 함의

(1) 21세기를 주도할 개혁세력의 구축

국내외 환경의 전환기적 변화 속에서 일본이 21세기를 위한 개혁과 체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① 일본의 정치 주도세력인 신보수세력의 21세기를 향한 비전과 의지, ② 조정형 리더십에도 불구하고 내려지는 총리의 결단, ③ 21세기를 향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와 국론형성 등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도 21세기를 향한 개혁을 주도해 갈 수 있는 ① 개혁철학, 비전, 의지를 지닌 ‘국정운영 주도세력’을 형성·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② 통합시스템의 운영·강화와 더불어 ③ 지도자의 합리적이고도 민주적인 리더십이 발휘되는 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2)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과 6자회담

미·일안전보장체제의 확대·발전에 따른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증대는 ① ‘미·일 대 중국의 대립구도’의 조성에 의한 동북아지역의 갈등조장, ② 동북아지역의 갈등·대립에 따른 남북한관계의 불안정, ③ 한국 안보의 일본에 대한 의존과 더불어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증대로 귀결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북·일관계도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잠재적 협박전략’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북아지역은 역내 군사적 갈등요인 즉 중·일 군사력 경쟁,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다자간 안보협력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과의 안보대화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중국·러시아와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군사교류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미·일·중·러와의 양자간 차원에서 조성되는 신뢰관계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시스템의 창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즉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 틀 내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아울러 중국, 일본 등 관계국가들의 군사력 및 국방정책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 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역내 국가들간의 인적 교류, 정보교류, 안보관련 세미나의 개최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군사력 및 군사정책의 투명성 제고, 신뢰조성 및 구축에 기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과 병행하여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력을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동북아지역에서 다자간 경제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할 경우, 이는 동북아 다자간 경제협력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안보협력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을 절실하게 인식하게 되고, 따라서 다자간 안보협력 시스템의 구축을 촉진시키는 '축매 기능'을 할 것이다. 즉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신기능주의적 접근을 하는 것이다.

최근 한·일 양국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6자회담도 21세기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다자간 협력 시스템의 구축'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은 6자회담을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하여 일본이 역할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로 간주하고 있는데, 한국으로서는 일본으로 하여금 ① 동북아 다자간 협력 시스템의 구축과 ②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환경조성이라는 양차원에서 6자회담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동북아 다자간 협력 시스템의 구축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환경조성' 차원에서 6자회담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한국 통일외교의 주요한 과제이다. 즉 6자회담을 통하여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다자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북한에게 ① 동북아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場을 제공하고, 아울러 ②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되는 데, 이는 남북관계, 북·일 및 북·미 양자간 관계의 한계성을 극복토록 해 주는 것이다.

(3) 대북한 공조체제의 강화와 공통이익의 개발·확대

'국내 정치변동의 대외정책에로의 투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미국과 일본에서 야기되는 국내정치의 변동은 한·미·일 공조체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2000년의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일본의 대북한정책 및 한국의 대북한 포용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정부가 대북한 강경정책을 취하

게 되고 이로 인해 북·미간에 갈등이 야기될 경우, 한·미간의 입장 차이와 더불어 한·미·일 공조체제에 갈등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는 한국은 일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한·미·일 공조체제의 갈등을 극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즉 한국은 일본과의 공조체제를 강화시키고, 북한과 관련된 한·일 공통의 이익을 개발하며, 이를 확대시키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한·일간에는 북한의 도발 및 한반도의 급변사태의 발발에 대한 억지력 강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처, 대량의 해상난민에 대한 대책, 조총련에 대한 대책 등 상호협력을 필요로 하는 주요한 현안들이 있다. 아울러 한·일간에는 2000년 월드컵 공동개최에 따른 상호이익의 도모, 대북한 투자환경의 개선 및 투자시 한·일 컨소시엄의 형성, 환동해 경제협력권의 형성과 상호이익 확대, 동북아 다자간 협력 시스템의 구축과 6자회담 등 공통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과제들이 있다.

(4)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강화와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설립

21세기와 새 천년의 도래, 즉 전환기의 시대는 국제관계를 ‘과거의 갈등’에만 얽매이는 ‘부정적 사고’보다는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오늘의 협력과 내일의 발전’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보도록 하고 있으며, 남북한관계도 ‘냉전적 사고’보다도 ‘화해와 협력을 통한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한반도 경영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 있어서 21세기의 도전과 변화는 ‘포괄적 안보’ 또는 ‘총합안보’(comprehensive security)를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 즉 탈냉전시대 21세기의 도래와 더불어 국가의 생존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안보영역이 다양화되고 있고, 안보수단 역시 다각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에 대해 감정적 차원의 대응에서 벗어나, 일본의 국력과 전략에 관한 냉철하고도 총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知日, 用日, 克日 차원에서 대응하여야 할 것이며, 공동이익의 개발과 더불어 대칭적 상호의존관계를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에 주요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국가전략 차원에서 대응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대북한 전략도 ① 한반도 경영 및 ② 민족발전을 지향하는 국가전략(Grand strategy) 차원에서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전략 차원의 통일정책 및 대북한정책은 ① 국제적 차원, ② 국내적 차원, ③ 남북한 차원, ④ 자조적 차원에서 전개된다.

이와 같은 국가전략을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강화되어야 하며, 국가경영전략을 연구하는 연구원의 설립이 필요하다. 즉 ① 21 세기의 도전과 변화 속에서 한민족의 발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국가전략의 수립과 더불어, ② 국가전략의 틀 속에서 각 부처의 정책들이 정합성과 총합성을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부처관련 연구기관들을 조정·총괄하면서, ③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정책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좌하는 국가경영연구원의 설립이 필요하며, 포괄적 안보를 추구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강화가 필요한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II. 국내 정치변동과 정계개편	4
1. 일본의 정치변동과 自民黨정권의 한계성	4
가. 정치변동의 직접적 원인과 自民黨의 한계성	4
나. 정치변동의 간접적 원인과 自民黨의 한계성	7
2. 7·18총선에 따른 自民黨 장기정권의 붕괴와 정치변동	9
가. 7·18총선과 정치변동	9
나. 정치변동과 정계개편	12
3. 10·20총선에 따른 自民黨정권의 부활과 정계개편	37
가. 10·20총선과 하시모토 自民黨 단독내각의 등장	37
나. 보수대연합의 추진과 ‘自民·自由·公明黨’聯政의 출범	46
III.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와 대외정책의 변화	59
1. 정치변동과 대외정책노선의 변화	59
2.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증대와 안보정책	62
가.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확대·발전과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	62
나. 일본의 군사적 활동의 증대와 군사력의 질적 증강	76
다. 확대된 군사활동의 지원과 법적·제도적 정비	80
3. 국교정상화와 대북한정책	85
가. 탈냉전기 북·일관계의 변천	86
나. 일본의 대북한정책: ‘대화과 억지’정책의 병용	101

IV. 결 론	115
1. 일본 국내정치변동의 대외정책에로의 투영	115
2.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 증대와 한반도	118
3. 정책적 함의	120
가. 21세기를 주도할 개혁세력의 구축	120
나.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과 6자회담	121
다. 대북한 공조체제의 강화와 공통이익의 개발·확대	122
라. 국가안전보장회의 강화와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설립	123
참고문헌	125

표 목 차

<표 1> 하시모토와 오자와의 비교	34
<표 2> 3당의 정계개편 및 주요 정책에 관한 기본방침	36
<표 3> 6대 개혁의 주요 내용	39
<표 4> 自民·自由·公明 3黨의 立場 差異	52
<표 5> 自民·自由·公明 3黨의 주요 정책합의 사항	52
<표 6> 自民黨내 파벌 현황(1999년 10월 시점)	53
<표 7> 일본의 주요 정당구도	54
<표 8> 「정부조직 개편법」의 특징 및 주요 내용	57
<표 9> 「지방조직 분권법」의 특징 및 주요 내용	58
<표 10> 정치대국화 전략의 구도와 특징	61
<표 11> 자민당 분류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 분야	69
<표 12> 新·舊 방위협력지침의 비교	71
<표 13> 한반도 급변사태시 일본 자위대의 역할	76
<표 14> 미·일 新 방위협력지침 관련 3개 법안의 주요 내용 ...	82
<표 15> 5개 차원의 국내의 환경과 전후 북·일관계	85
<표 16> 제1~8차 회담까지 일본·북한의 주장과 대립점	90
<표 17> 「정부간 대화」에 임하는 북·일 양측의 입장	101
<표 18> 북·일관계의 다차원적 인식과 제약요인	120
<별첨 1> 일본주변 유사시 협력대상이 되는 기능·분야 및 협력항목	83

I. 서론

냉전체제가 붕괴하고 탈냉전시대가 도래하면서 국제정치와 국내정치가 連動하는 영역이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고, 아울러 국제정치와 국내정치간의 浸透현상도 급증하고 있다.¹⁾

일본 역시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국제사회가 21세기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향하여 진통을 겪게 될 때, 정치적 대지각 변동을 겪게 되었다. 즉 전후 38년간 집권해 온 自民黨 정권이 제도적 피로와 정치개혁 능력의 한계성을 노출하면서 1993년의 7·18총선을 계기로 붕괴됨에 따라, 일본 정치는 '21세기의 새로운 정치적 틀'의 형성을 지향하여 진통을 겪기 시작하였다.

일본정치는 1993년의 7·18총선을 계기로 55년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① 非自民·非共産의 8정파에 의한 非自民 연립정권, ② 自民黨과 社會黨의 연립정권을 경험하게 되었고, 1996년의 10·20총선 이후에는 自民黨정권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었다. 나아가 '21세기 대비 국가체제 정비'을 준비하게 되면서 보수대연합의 自民·自由·公明 3黨 연립정권이 1999년 10월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치적 변화 속에서 ① 공산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일본의 정당은 국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② 거의 모든 정당의 집권경험, 사회당의 정책노선 전환, 보수대연합 등의 영향으로 정치공간은 보수우경화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③ 쇼와세대의 신보수세력은 일본정치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④ 쇼와세대의 신보수세력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를 통하여 '21세기 정치대국'을 추구하면서 국가체제의 개혁 및 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

1) 花井等, 「新外交政策論」(東京: 東洋經濟新報社, 1998).

2 탈냉전기 일본의 국내 정치변동과 대외정책의 변화

그러므로 탈냉전시대에 들어와 일본에서 전개된 일련의 정치적 변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하도록 한다.

첫째, 일본 정치변동의 직·간접적 원인은 무엇이며, 7·18총선 이후 일본정계의 재편과 권력게임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둘째, 7·18총선 이후의 정치변동 속에서 신보수세력은 어떻게 일본 정치의 주도세력으로 부상하였으며 그들이 지향한 정치노선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셋째, 10·20총선을 계기로 自民黨정권이 재차 부활하게 된 배경 및 요인은 무엇이며, 自民黨정권의 부활과 더불어 파벌, 族정치도 재차 정권운용의 주요한 존재로 부활하게 되었는가.

넷째, 自民黨정권은 재차 집권하게 되면서 '21세기 대비 국가체제의 정비'를 추진하였는데, 주요 내용 및 특징은 어떤 것인가.

다섯째, 탈냉전시대에는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浸透現象이 급증함과 더불어 국내정치의 대외정책에로의 투영이 주목되고 있는데, 신보수세력의 부상, 정치공간의 보수화, 自民黨을 중심으로 한 보수대연합의 결성 등 일본의 국내정치변동은 대외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투영되었는가.

여섯째, '21세기의 정치대국'을 지향하는 일본은 미국의 세계전략 및 아시아·태평양전략에 응하여 미·일 안전보장체제를 한층 강화·확대시키면서 군사적 역할을 확대시키고 있는데, 미·일 전략적 상호관계의 특징은 어떤 것이며, 일본은 어떻게 군사력의 질적 증강, 법적·제도적 정비를 추구하고 있는가.

일곱째, 북·일관계의 개선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냉전체제가 붕괴하고 탈냉전시대가 도래하게 되자, 북·일 양국은 국교정상화를 지향하여 '접근과 냉각'을 되풀이 하고 있는데, 탈냉전기 북·일관계는 어떻게 변천해 왔으며, 일본은 대북한정책을 어떻게 추구하고 있는가.

이상과 같은 문제제기는 본서의 연구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연구시기를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일본의 정치가 변동하게 되는 1993년 7·18 총선의 전후시기로부터 1999년 10월 ‘自民·自由·公明黨’ 聯政의 출범과 더불어 동년 12월 1~3일 무라야마 초당파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는 시기까지로 하였다.

본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II장 일본의 정치변동과 정계개편’에서는 일본 정치변동의 직·간접적 원인과 自民黨 정권의 한계성, 7·18총선 이후 일본정계의 재편과 권력게임, 10·20총선에 따른 自民黨정권의 부활과 ‘21세기 대비 국가개혁’, 국정주도력 강화를 위한 보수대연합의 추진과 ‘自民·自由·公明黨’ 聯政의 출범 등에 관하여 정치과정론적 접근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III장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증대와 대외정책의 변화’에서는 ① 정치변동과 대외정책노선의 변화, 신보수세력의 정치대국화 노선과 전략구도의 특징, ②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확대·발전과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 일본의 군사력의 질적 증강 및 법적·제도적 정비,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증대와 한반도 급변사태 등에 대하여 전략적 접근을 통하여 분석을 하였고, ③ 탈냉전기 북·일관계의 변천, 일본 대북한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등에 관해서는 정치과정론적 접근 및 전략적 접근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IV장 결론’에서는 일본 국내정치변동의 대외정책에로의 투영에 관하여 재조명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 증대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분석하였고, 한국의 대응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II. 국내 정치변동과 정계개편

1. 일본의 정치변동과 自民黨정권의 한계성

전후 38년간 집권해온 自民黨이 제도적 피로와 정치개혁 능력의 한계성을 노출하면서 일본 정치는 대지각 변동을 겪기 시작하였다.

그와 같은 일본 정치의 일련의 지각변동은 ① 직접적으로는 정계의 부패, 정치개혁을 둘러싼 自民黨 내부의 갈등 및 여야간의 대립, 自民黨정권의 정치개혁 실패 등에 의한 것이고, ② 간접적으로는 일본사회의 변화, '정책-정치'공간의 확대와 自民黨정권의 한계성, 동서 냉전체제의 붕괴 등에 의한 것이다.

가. 정치변동의 직접적 원인과 自民黨의 한계성

최근 일본정치를 동요시킨 금권정치에 의한 정치부패의 사례로는, 다케시다(竹下) 내각을 붕괴시킨 1988년의 리쿠르트사건, 1991년의 철도가공회사 '교와사건', 그리고 가네마루 신(金丸信) 前 自民黨 부총재를 구속시키고 自民黨의 분열을 가져온 '도쿄 사가와큐빈 운송회사의 거액 탈세사건'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정치부패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自民黨정권을 비롯한 정치권은 정치개혁의 의지를 천명하고 '부패방지법', '정치윤리법', '정치자금 규정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여야간의 대립이나 여당내부의 갈등만을 노출시킨 채 성사시키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치불신만 심화시켰다.

1988년의 리쿠르트사건을 계기로 당시의 다케시다 노보루(竹下登)

총리는 정치의 최우선 과제로서 정치개혁을 주창하였는데, 이에 대해 야당측은 自民黨이 정치개혁의 명분아래 유리한 소선거구제 도입을 시도하려 한다고 비판을 가하였다. 그후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총리가 정치개혁에 전력을 다할 의향을 표명하였는데, 그에 따라 선거제도 심의회가 1990년 4월에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를 골자로 하는 答申을 제출하였고, 내각은 1991년 8월에 '정치개혁 관련 3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衆議院 심의과정에서 야당의원은 물론 자민당의원 가운데에서도 일부는 '소선거구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따라서 자민당 지도부는 '정치개혁 관련 3법안'의 입법추진을 단념하게 되고, 마침내 衆議院의 '政治改革 特別委員會'에서 폐안을 결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1년 10월 가이후 내각은 '정치개혁 관련 3법안'의 폐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직하였다.

'衆議院 選舉制度'의 개혁문제는 '정치개혁 관련 3법안'의 폐안과 후임수상 선출문제로 인하여 다소 주춤하다가 1992년 도쿄 사가와큐빈 사건을 계기로 다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가이후 내각을 계승하여 등장한 미야자와 내각에서는 1993년 4월 自民黨 정치개혁본부가 마련한 '단순 소선거구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치자금 규정법 개정안', '정당보조법안', '衆議院 의원 선거구 확정 위원회 설치 법안' 등 '정치개혁 관련 4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맞서 社會黨과 公明黨은 국회에 '소선거구 병용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사항으로 하는 '정치개혁 관련 6법안'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衆議院에서는 自民黨이 제출한 '정치개혁 관련 4법안'과 社會黨 및 公明黨이 제출한 '정치개혁 관련 6법안'이 심의되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自民黨의 '단순 소선거구제'와 社會-公明黨의 '소선거

구 병용형 비례대표제'의 대립이었다.

衆議院 選舉制度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속에서 自民黨은 야당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표결로 대응하려는 방침을 세우게 되며, 自民黨의 표결방침에 반발한 社會黨·公明黨·民社黨은 1993년 6월 17일 국회에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야당의 내각 불신임안은 自民黨 하타派 의원들의 동조에 힘입어 가결되었다.²⁾ 미야자와 내각의 불신임안이 가결된 직후인 6월 18일 밤에 衆議院은 해산되고, 自民黨에서는 탈당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다케무라 마사요시(武村正義)를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은 탈당하여 '新黨사키가케'를 결성하였고, 이어 하타派 소속 의원들이³⁾ 탈당하여 '新生黨'을 결성하였다. 즉 일본정치는 정치개혁과 권력게임⁴⁾속에서 중요하기 시작한 것이다.

요컨대 自民黨의 분열 및 탈당사태에 의한 지각변동은 정치부패 스캔들과 국민들의 정치불신, 다케시다 파벌의 분열 및 파벌간의 권력투쟁, 정치개혁을 둘러싼 내부갈등과 자민당의 한계성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일어난 것이다.

2) 미야자와 내각의 불신임안 표결은 찬성 255표, 반대 220표로 가결되었는데, 자민당 의원들의 투표동향을 보면 하타파 소속 의원 35명중 34명과 그외 5명이 야당에 동조하여 내각불신임안에 찬성하였고 16명(이 가운데 1명은 하타파 소속의원)이 표결에 불참하였다. 그리고 내각불신임안 가결 직후 自民黨을 탈당하여 新黨 사키가케를 결성한 다케무라 마사요시를 비롯한 自民黨 의원들은 내각불신임안 표결에 8명이 반대표를, 1명이 내각불신임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3) 衆議院의원 36명, 參議院의원 8명, 無派閥에서 衆議院의원 1명 합류.

4) 自民黨의 하타파가 야당에 동조하여 미야자와 내각에 불신임안을 가결시킨 것은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한 自民黨 파벌간의 권력투쟁의 산물로도 파악될 수 있다.

나. 정치변동의 간접적 원인과 自民黨의 한계성

일본정치의 지각변동은 간접적으로 일본사회의 변화, '정책-정치'공간의 확대와 自民黨정권의 한계성, 동서냉전체제의 붕괴 등과 관련되어 있다.

일본사회의 변화라는 관점에서는 新中間 大衆의 등장에 따른 일본사회의 保身化, '지지정당 없는 층' 즉 '無黨派'의 증대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일본사회에서의 신중간 대중은 계층의식 또는 계급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계층 혹은 계급시스템의 비구조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후 경제발전의 귀결로서 나타났는데, 경제적 생활상의 중류의식을 가지고 있는 일본국민의 대부분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중간 대중은 자신들의 기득권익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保身性을 나타내었는데, 정치적으로는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하는 계급정치를 쇠퇴시키고 일상적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이익정치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그러므로 일본사회에서는 신중간 대중이 등장한 후 사회당의 지지를 하락과 더불어 지지정당이 없는 無黨派層의 증대가 나타났고 아울러 自民黨에 대한 지지도 정치적 무관심 속에서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일본사회의 변화 속에서 발생한 정치스캔들과 정치개혁의 실패는 일본국민들의 정치불신에 따른 정치적 무관심을 한층 증대시켰고,⁵⁾ 나아가 自民黨정권의 기반을 한층 취약케 하였다. 즉 일본사회에서의 신중간 대중의 등장과 지지정당 없는 無黨派層의 증대는 정치변동의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5) 1993년 7월 18일에 치루어진 제 40회 衆議院선거의 투표율은 그때까지의 전후 총선거 가운데 최저인 67.26%를 기록하였다.

또 정치변동의 간접적 원인으로 '정책-정치'공간의 확대와 이에 대응하는 自民黨정권의 한계성을 지적할 수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 경제의 자유화, 사회의 고령화, 국제화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정책과제들이 계속해서 대두하기 시작하였는데, 그와 같은 정책과제들은 '省際行政' 즉 중앙부처간의 협력·조정을 필요로 하는 복합적인 성향의 과제였으므로, '정책-정치'공간을 확대시키면서 아울러 自民黨정권으로 하여금 정책능력의 강화를 도모토록 하였다.

따라서 自民黨정권은 '정책-정치'공간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시스템을 관료주도의 정책시스템에서 '自民=관청 혼합체'라는 自民黨 및 관청주도의 정책시스템으로 전환시키면서 黨의 정책기관인 政務調査會를 활성화시켰고, 나아가 소위 '族'(특정 정책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國會議員群)정치를 전개시켰다.⁶⁾

族정치의 전개는 自民黨이 利益指向型 包括政黨으로서 '政-經-官'의 3각구조하에서 利益誘導型 政治를 펼치고 나아가 政策志向型 政黨을 추구하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부처간의 행정조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노출되는 族의 한계성은 自民黨정권의 '정책-정치'능력의 한계성으로 비쳐졌고, 더우기 '政-財-官'의 3각구조하에서 族의 각종 이권개입은 정치비리, 정치부패의 주요한 원인이 되면서 自民黨정권의 정치적 부패로 귀결되었다. 요컨대 族정치의 부정적인 측면 즉 정책과정에서의 族의 이권 개입 활동으로 일어난 여러 문제들은 일본 정치변동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동서냉전체제의 붕괴도 일본정치의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 대립의 붕괴는 일본 국

6) 佐藤誠三郎/松崎哲久, 「自民黨政權」(東京: 中央公論社, 1986).

내정치에서 ‘보수 대 혁신’의 대결구도가 붕괴되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예컨대, 社會黨을 비롯한 혁신계 정당들의 지지기반 침화, 진보세력들과 보수세력들과의 연대 등과 같은 정치적 변화가 초래되는 데 간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 7·18총선에 따른 自民黨 장기정권의 붕괴와 정치변동

가. 7·18총선과 정치변동

집권여당인 自民黨이 정치스캔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자민당의 최대 파벌인 ‘經世會’의 내분이 표면화되어 하타派가 自民黨을 탈당하고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가 日本新黨을 결성하여 새로운 정당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1993년의 7·18총선은 치루어졌다.⁷⁾

7·18총선에서 自民黨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고 나아가 연립정권의 수립에 실패하게 되면서, 일본의 정치는 일련의 대지각변동에 따른 진통을 겪게 되었다.⁸⁾ 즉 7·18총선 이후, 55년체제는 붕괴되고 새로운 정치적 틀을 형성하기 위한 정치의 대지각변동이 전개되었는데, 전후 일본정치사에서 1995년이 55년체제의 형성으로 분기점이 되는 해이라면, 1993년 역시 7·18총선으로 한 획을 긋는 정치적 의의가 큰 해인 것이다.

7·18총선의 정치적 의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7) 호소카와 모리히로는 「日本新黨 責任ある變革」(東京: 東洋經濟新報社, 1993년 4월)을 통하여 그리고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는 「日本改造計劃」(東京: 講談社, 1993년 5월)을 통하여 각기 자신의 정치철학과 개혁방안을 제시하면서 정권교체를 주장하였다.

8) 7·18총선에 따른 衆議院의 議席 분포 상황

첫째, 7·18총선 그 자체가 일본의 정치변동을 직접적으로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지만, 自民黨이 연립정권의 구성에 실패할 경우 커다란 정치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즉 7·18총선의 결과는 自民黨의 과반수 의석 획득 실패, 社會黨의 대참패, 3개의 새로운 보수정당의 약진에 전반적인 특징이 있다.

둘째, 과거 일본정치의 경우, 즉 社會黨에서 이탈한 民社黨이나 自民黨에서 탈당한 新자유클럽의 경우 그 직후의 총선에서 대참패를 하였다. 그러나 7·18총선에서는 自民黨이 현상유지를 하는 가운데 自民黨을 이탈한 新生黨이나 新黨사키가케가 약진을 하였고, 아울러 自民黨을 외부에서 비판하면서 ‘개혁정치’를 주장하였던 日本新黨은 급부상하였다. 그리고 중도정당인 民社黨이나 公明黨은 현상유지를 하였지만, 社會黨은 64석이나 잃는 대참패를 하였다. 즉 새로운 정치가

선거전 의석	정당
222	자민당
134	사회당
36	신생당
45	공명당
13	민사당
4	사회민주연합
0	일본신당
10	신당 사키가케
16	공산당
15	무소속
2	기타
497	

- * 선거전 무소속은 自民黨系 8명이었고 非自民黨系는 7명이었다.
그리고 衆議院 定數는 512명이었으나 15명이 결원이었다.
- * 무소속 당선자 30명 가운데 自民黨系가 10명이고 非自民黨系는 20명이다.

요구되는 상황에서 혁신계인 사회당은 대참패를 하였고, 신보수계의 정당들은 두드러진 약진을 한 것이다. 이는 전후의 정치체제 즉 自民-社會의 양당체제 및 保革대결의 구도를 근간으로 출발해서 1960년대 이후 보수·중도·혁신의 다당체제 아래에서 발전해 왔던 55년체제가 한축인 혁신계의 몰락으로 붕괴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보수·혁신의 대결구도의 붕괴에 따라 社會黨의 변모 또한 일본정치의 변화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셋째, 自民黨을 비판하면서 정치개혁을 주창하였던 새로운 보수정당들이 약진한 것은 自民黨에 커다란 자극이 됨과 동시에 질적 변화를 추구하도록 할 것이다. 즉 自民黨으로 하여금 ‘정치개혁과 세대교체’를 축으로 하는 당내 변화를 꾀도록 할 것이다.

네째, 7·18총선을 통하여 젊은 정치인들이 정계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게다가 호소카와 모리히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하타 쓰토무(羽田),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등 쇼와(昭和)세대가 일본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일본 정계에 세대교체가 이루어 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울러 쇼와세대의 신보수세력이 일본정계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쇼와세대의 신보수세력은 ① 전후 민주교육을 받은 세대로서 그 이전의 세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과거사 및 대미 콤플렉스를 덜 가지는 특징을 나타내었고, 그러므로 ② 과거의 일본 군국주의가 일으킨 전쟁에 대하여 반성과 사죄를 표명함으로써 전후 총결산을 단행하고 아울러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 강화론을 주창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대국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요컨대, 일본정치는 이상과 같은 정치적 의미를 지닌 7·18총선을 계기로 하여 일련의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① 연립정권 구성 실패에 따

른 自民黨정권의 붕괴와 더불어 ② 비자민 연립정권의 등장이라는 변화를 나타내었고, 아울러 ③ 그러한 정치변화 속에서 쇼와세대의 신보수세력이 일본 정치의 핵심세력으로 등장하는 변화를 나타내었다.

나. 정치변동과 정계개편

일본의 정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7·18총선 후 제1당 자민당이 연립정권의 수립에 실패하고 38년만에 붕괴함에 따라 일련의 정치변동속에서 이합집산에 따른 정계개편의 진통을 겪게 되었다. 즉 7·18총선 이후 일본의 정치는 ① ‘非自民 연립정권’ 대 ‘야당 自民黨’, ② ‘무라야마 사회당 총리의 연립정권’ 대 ‘통합야당 新進黨’, ③ ‘오자와 신진당 당수’ 대 ‘하시모토 自民黨 총리의 연립정권’ 등과 같은 대립구도를 형성하면서 각 정파들의 합종연횡과 함께 정계개편이 전개되었다.

(1) ‘非自民 연립정권’ 대 ‘야당 自民黨’

(가) 7·18총선과 ‘호소카와 非自民 연립내각’의 등장

7·18총선 직후 ‘自民 대 非自民’이라는 대립구도 아래에서 혁신계, 중도계, 신보수계 정당간의 정권교체를 위한 세력규합이 이루어 졌다. 즉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을 주창하던 신보수 세력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社會黨을 비롯한 기존야당들이 自民黨정권의 종식과 정권교체를 명분으로 참가함에 따라 非自民·非共産의 8黨派에 의한 비자민 연립정권인 호소카와 연립내각이 同年 8월 9일 등장하게 된 것이다.

호소카와 연립내각은 일본국민들의 높은 지지와 기대 속에서 정치개혁을 슬로건으로 표방하면서 출발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

타내었다.⁹⁾

첫째, 연립 7당(參議院 민주개혁연합은 제외)의 당수 전원이 입각 하였으므로 주 2회의 閣議는 연립여당 당수 회담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는 연립여당 각당의 연대책임을 한층 더 강조하여 연립정권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지만, 반면 연립정권의 취약성을 쉽게 노출시킬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연립정권의 세력들 간에 정국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합의가 있다하더라도, 정책 각론에 따라서는 노선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그 경우 각 당수들은 최종적인 정책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당수들이 연립내각의 각료로 모두 직접 참가하였다는 것은 정책조율의 여유를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책조정에 있어서도 불협화음을 쉽게 표면화시켜 노출시킬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제5당의 당수이자 衆議院의 조선의원이 총리로 지명되었다는 것은 전후 일본정치사에서 前例가 없는 일이다. 오자와 이치로 新生黨 대표간사의 비자민 연립정권의 구상전략에 따라 日本新黨과 新黨 사키가케의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호소카와 日本新黨 대표가 총리로 지명된 것이다.¹⁰⁾

셋째, 自民黨을 이탈하여 정계개편을 도모하고 정권교체에 주도적 역할하였던 新生黨 소속 의원들이 연립내각의 주요 요직에 포진하였다. 즉 하타 쓰토무 당수가 부총리겸 外相직을 취임한 것을 비롯하여 新生黨소속 의원들이 재정 및 예산을 총괄하는 大藏相, 산업과 통상을 총괄하는 通産相, 農林水産相, 防衛廳 長官 등을 차지하였다. 이는

9) 일본 국민들은 8黨派로 구성된 非自民 연립정권의 통치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지만, 정치개혁을 통하여 급권정치, 밀실정치 등이 타파되고 깨끗한 정치의 실현과 정책논쟁을 통한 정치가 전개될 것을 기대하면서 높은 지지를 보냈다. 요컨대 정권교체야말로 일본을 책임있게 변혁시킬 수 있는 역량결집인 동시에 최대의 정치개혁이라고 일컬어지는 만큼, 호소카와 정권은 국민들의 높은 지지하에서 정치개혁정권으로 출범한 것이다.

10) 「朝日新聞」, 1994. 6. 9.

연립내각이 新生黨 내각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나타내는 것인데, 오자와 이치로 新生黨 대표간사에게 있어서는 막후 실력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권력기반의 조성이기도 하였다.

네째, 호소카와 총리는 연립내각의 소위 ‘안살림’을 통괄하면서 내각 운영의 실무에서 총리에 협력할 수도 있고 견제할 수도 있는 관방장관직에 다케무라 마사요시 新黨사키가케 당수를 임명하고, 관방 부장관직에는 新黨사키가케 소속의 하토야마 유키오 의원을 기용하였다. 新生黨이 관방장관직을 차지하려는 의욕을 보였지만, 호소카와 수상은 수상실에 대한 新生黨의 직접적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기 위하여 자신과 二人三角관계에 있는 盟友 다케무라 新黨사키가케 대표를 임명하였다. 즉 호소카와 총리는 다케무라 관방장관과 新黨사키가케로 하여금 오자와 新生黨 대표간사 및 新生黨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이는 다케무라 관방장관과 오자와 新生黨 대표간사와의 관계가 연립정권 및 정국의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다섯째, 야마하나 사다오(山花貞夫) 사회당 위원장이 신설된 政治改革擔當相을 맡고, 사토 간주(佐藤觀樹) 사회당 의원이 自治相에 임명되었다. 이 人事는 호소카와 총리가 社會黨 내부에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반대의견을 무마하고 정치개혁에 사회당을 동참시키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취한 인사인데, 연립정권의 최대공약이 정치개혁이며 아울러 호소카와 연립내각의 최대과제가 정치개혁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여섯째, 하타 쓰토무 外相을 제외하고는 호소카와 총리를 비롯하여 모두 처음 입각하는 신참 각료들이다. 더우기 사회당, 公明黨, 民社黨, 社民連 등 출신의 각료들은 自民黨이 장기집권을 하는 동안 야당 정치인들로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관료들과의 정책네트워크를 형성

못한 상태에 있었다. 이는 호소카와 연립정권이 관료기구에 대해 통솔력을 발휘하는데 한계성을 가지게 하였다.

일곱째, 55세의 호소카와 수상을 비롯하여 연립내각의 평균 연령은 59.4세이다. 이는 쇼와(昭和)세대가 일본 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일본정계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덟째, 사회당을 비롯한 기존야당들의 정권참여는 정치공간에서 보수적 부분을 한층 확대시키는 전기가 되었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지닌 호소카와 연립내각의 출범으로 정권교체를 통한 정계개편은 시작되었고, 일본정계는 '非自民 연립정권 대 제1당 自民黨'이라는 대립구도로 재편되었다.

따라서 호소카와 총리는 '非自民 연립정권 대 제1당 自民黨'의 대립구도 아래에서 국민들의 높은 지지와 기대를 배경으로 제도적 차원에서의 정치개혁을 추진하였다.

일본에서의 정치개혁문제는 '정치개혁과 정치부패'라는 내용의 정치스캔들 문제에서 시작하였으나 부분적 개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차원을 넘어 근본적 개혁을 추구해야 하는 문제로 급속하게 팽창·확대되었다. 근본적인 정치개혁은 국민적 차원에서 정치와 돈을 둘러싼 국민들의 비판과 정치불신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고, 지도층의 차원에서는 기성정치의 유효성 저하를 해결하는 것이다.¹¹⁾

日本新黨과 호소카와 대표도 自民黨에 도전하여 정권을 추구하면서 新黨運動을 전개할 때에 일본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정치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일본신당 책임있는 변혁」(「日本新黨責任ある變革」, 1993)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11) 佐佐木毅, “日本の政治改革と五五年體制の終焉”(제4회 한국 정치세계학술대회, 1994. 7. 19~20) 발표논문.

첫째, 전후 일본의 정치체제는 세계냉전체제에 편입되어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 대립을 전개해 왔지만, 세계냉전구조의 붕괴와 더불어 일본 국내 정치도 '중앙정권 대 지방분권', '생산자 중심의 정치 대 생활자 중심의 정치'를 기축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日本新黨은 그 기본노선으로 지방분권과 생활자 중심의 정치를 지향한다. 즉 지방분권의 정치를 추구하겠다는 것은 중앙의 종적 행정에 의한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행정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일본정치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치 행정개혁을 지향하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생활자 중심의 정치전개는 국민적 차원의 정치개혁을 추구하는 것인데 정치자금의 공개 투명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의 공적 조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선거를 통하여 우수한 정치인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여야 한다. 즉 정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셋째, 정치개혁 차원에서 자질개선과 더불어 정치지도자의 리더십 개혁도 이루어져야 한다.

즉 日本新黨과 호소카와 대표는 이상과 같은 내용의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自民黨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였고, 아울러 '책임있는 변혁'을 위한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역설한 것이다.

이처럼 일본을 변혁시킬 수 있는 정치개혁의 실현은 호소카와 내각의 최대 과제인 동시에 日本新黨과 호소카와 대표의 정치생명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었으므로, 호소카와 총리는 정치개혁에 강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즉 호소카와 총리는 1993년 8월 10일의 총리 취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내각을 '정치개혁 내각'으로 규정한 뒤, 정치적 책임을 지고 연내에 정치개혁 법안을 성립시키겠다

고 천명하였다.¹²⁾

따라서 호소카와 총리는 좌절과 정치적 위기, 타협 속에서 제도적 수준의 정치개혁을 추진하였고, 정치개혁 법안을 성립시켰다. 즉 호소카와 연립내각은 정치개혁 법안을 둘러싼 내부의 갈등과 반발로 인하여 參議院 본회의에서 좌절하게 되고¹³⁾ 내각 총사직 또는 중의원 해산이라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自民黨과의 타협을 통하여¹⁴⁾ 정개혁법안을 성립시킴으로써 위기를 극복한 것이다.

1994년 1월 29일 衆·參議院 兩院 본회의에서 가결된 호소카와 내각의 '정치개혁 관련 4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② 총정수 500명으로 소선거구 300, 비례대표 200, ③ 비례대표 선거단위는 11개 지역, ④ 기업과 단체로부터 수령하는 정치현금의 취급은 정당 정치자금단체에 더하여 정치가의 정치단체 1개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것 등이었다.

이와 같은 호소카와 내각의 정치개혁에 대한 일본국민들의 여론은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의 조사에 따르면 약 66%가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내었다. 아울러 호소카와 내각에 대해서도 74%의 지지율을 보여 주었다.¹⁵⁾ 호소카와 연립내각은 내각 총사직 또는 衆議院 해산

12) 「朝日新聞」, 1993. 8. 11.

13) 衆議院을 통과한 정부안의 수정 정치개혁 법안은 1994년 1월 21일 參議院 본회의에서 찬성 118, 반대 130으로 부결되었다. 정치개혁 법안이 부결된 가장 주된 요인은 연립정권 내의 균열에 기인하는 것인데, 특히 사회당 지도부가 사회당 내부 분열을 수습하지 못한 데 있다. 사회당은 3명 불참하고 1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14) 自民黨도 개혁 신중파가 參議院 표결에서 의석수 99석 가운데 94명의 반대표가 나온 것을 계기로 '정부안의 여당 수정 정치개혁 법안'을 폐기시킬 것을 주장하였지만, 개혁 추진과의 이탈을 우려하여 타협에 임해야 했다. 도이 타카코 衆議院 의장의 중재로 호소카와 수상과 고노 자민당 총재는 1994년 1·28회담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수뇌회담에서 호소카와 수상은 고노 자민당 총재에게 상당 부분을 양보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5) 「朝日新聞」, 1994. 2. 1.

이라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개혁법안을 성립시킴으로써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어서 정치개혁법안의 성립은 연립정권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었던 공동목표의 상실이기도 하였다. 공동목표의 상실은 연립정권의 운영기반이 취약해 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아울러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고 균열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즉 정치개혁의 추진과정에서 노출된 내부갈등이나 분열들은 그 진전에 따라 또 다른 정계개편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었다.

정계개편이라는 관점에서 정치개혁의 전개과정과 그 성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정치개혁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社會黨과 自民黨은 상당한 내부 진통을 겪었다. 社會黨은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 비례대표병립제'로 전환될 경우 사회당의 의석이 대폭 감소하고 그에 따라 정계가 보수양당체제 중심으로 재편성될 것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사회당은 먼저 부패방지과 정치윤리의 확립을 위한 입법화를 주장하면서 선거제도의 변경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¹⁶⁾ 自民黨도 개혁추진파와 개혁신중파로 분열되어 갈등과 대립을 보였다.

둘째, 정치개혁 법안을 성립시키는 과정에서 오자와 新生黨 대표간사는 자민당의 분열을 유도하면서 밀어 붙이는 강경노선을 추구하였고, 다케무라 관방장관은 가능한 한 원활하게 성사시키기 위하여 自民黨과의 협조노선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정부안의 수정 개혁법안'이 參議院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을 때, 오자와 이치로 新生黨 대표간사와 이치가와 유우이치(市川雄一) 公明黨 서기장간에 형성된 소위 '이치

16) 선거제도의 개혁에 대한 사회당 내부의 불만은 參議院 본회의에서의 반란 표 20표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정계개편의 성향에 따라서 사회당의 좌우파가 분열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치'(一·一)路線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아울러 오자와 新生黨 대표간사와 다케무라 관방장관의 대립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것은 연립정권내의 신보수세력의 균열이기도 하다.

셋째, 오자와 新生黨 대표간사는 정치의 효율성이 있는 국가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적의식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에 누구보다도 강한 의욕을 나타내 보였고 아울러 막후실력자로서 정치개혁 법안 성립과 정에서는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정부안의 '여당 수정 개혁정치 법안'이 參議院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호소카와 연립정권이 커다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도, 오자와 新生黨 대표간사는 계속해서 재추진할 것을 주장하였고, '호소카와·고노 수뇌회담'에 참석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¹⁷⁾

네째, 정치개혁 법안의 성립으로 중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로 바뀌게 되었다. 소선거구제의 도입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의 분할은 각 정파간에, 의원 각자들간에 이해관계의 충돌을 가져올 수 있고 따라서 또다른 정계개편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 같이 호소카와 연립내각은 정치개혁 법안의 성립을 계기로 공동목표의 상실에 따른 정권유지의 구심력이 약화되었고, 그에 따라 내부갈등을 드러내면서 균열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즉 일본정계에서는 제2의 정계개편을 향한 권력게임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호소카와 총리는 정치개혁을 달성한 것에 힘입어 세계개혁을 시도하려 하였고, 1999년 1월의 '施政方針演說'을 통하여 경제개혁과 행정개혁의 추진을 표명하였지만, 권력게임의 소용돌이 속에서

17) 이는 정치개혁 법안의 성립 이후, 정국운영에서 오자와 新生黨 대표간사의 영향력이 더욱 더 커질 것임을 예상케 하며, 아울러 오자와 新生黨 대표간사와 호소카와 총리간의 협조관계의 발전에 따라 호소카와 다케무라의 '二人三角'관계에 변화가 나타날 것임을 예상케 하는 것이다.

세계개혁, 경제개혁, 행정개혁 그 어느 것도 이룩하지 못하고 리더십의 한계성을 노출하면서 돌연 사임하게 되었다. 동년 4월 8일 호소카와 총리의 전격 사임과 더불어 그 다음날 내각도 총사직하게 되었다. 즉 호소카와 연립정권은 8개월 남짓만에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정치개혁 법안의 성립이후부터 호소카와 내각의 총사직에 이르기까지 연립정권 내부의 갈등이나 권력게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호소카와 총리의 정국운영은 정치개혁 법안이 성립되기 전까지 오자와·이치가와의 강경노선과 다케무라의 협조노선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였으나, 정치개혁 법안의 성립 후에는 오자와·이치가와의 강경노선으로 경도되었다.¹⁸⁾ 이에 다케무라 관방장관은 호소카와 총리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취하게 되었고, 아울러 오자와 新生黨 대표간사와의 갈등도 한층 깊어지게 되었다. 정치개혁 법안의 성립 후 '오자와 대 다케무라'의 대립구도가 한층 명확해진 것이다.

둘째, 정치개혁 법안의 성립 이후, 연립정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면서 표출된 것이 '국민복지세 파문'이다. 국민복지세의 구상과 도입을 둘러싼 정책과정은 호소카와 연립정권의 '이중적 권력구조'에 의한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¹⁹⁾ 호소카와 연립정권의 정책결정구조는 당수회의와 대표자회의라는 이중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표자회의가 실질적으로 연립정권의 최고 정책결정기관의 기능을 하는 것이었고,²⁰⁾ 오자와 新生黨 대표간사와 이치가와 公明黨

18) 岩見降夫, "平成戦国時代: 第二回," 「中央公論」(1994년 4월호).

19) 武村正義, "私が政權と訣別した眞の理由," 「文藝春秋」(1994년 6월호).

20) 대표자회의는 각 정당의 서기장, 간사장, 대표간사들이 참석하는 회의인데 新生黨 대표간사, 公明黨 서기장, 民社黨 서기장, 社會黨 서기장, 국회 통일회파 '사키가케-日本新黨'의 대표간사 등 5인으로 구성되었다. 즉 연립내각의 조정역인 다케무라 관방장관의 참석은 배제되었다.

서기장에 주도되었다. 따라서 國民福祉稅 구상도 주무대신이나 관방장관도 모르는 상태에서²¹⁾ 오자와 신생당 대표간사 주도 아래 일반적으로 이루어졌고, 게다가 호소카와 총리에 의해 일반적으로 발표되었다. 그 결과 파문으로 끝났는데,²²⁾ 이를 계기로 호소카와 총리와 다케무라 관방장관은 결별하게 되었다.

셋째, ‘다케무라 대 오자와’의 대립구도 아래에서 전개되는 권력게임은 ‘내각 개조’ 소동으로 나타났다.²³⁾ 헤프닝으로 끝난 호소카와 총리의 내각 개조론은 연립여당내의 불협화음을 재차 노정시킨 것이며, 아울러 호소카와와 오자와의 제2의 정계개편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즉 호소카와 총리와 오자와 新生黨 대표간사는 연립정권내의 ‘다케무라 대 오자와’의 대립구도속에서 다케무라 관방장관과 新黨사키가케를 배제하고, ‘국회 통일회파 사키가케-日本新黨’을 해체하는 대신, 新生黨이 중심이 된 새로운 新黨을 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네째, 연립여당 내부가 國民福祉稅 구상과 내각개조 문제로 분극화

- 21) 후생대신, 자치대신, 관방장관 등은 정부 여당 수뇌회의에 참석하기 전까지는 몰랐다고 하였다. 武村正義, 앞의 글; 岩見降夫, 앞의 글.
- 22) 오자와 新生黨 대표간사에 의해 주도된 국민복지세 구상은 다케무라 관방장관 및 사회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1994년 2월 3일 호소카와 총리에 의해 발표되었다가 34시간만에 백지화되었다.
- 23) 오자와 新生黨 대표간사의 다케무라 관방장관 경질 요구에 동의한 호소카와 총리는 ‘연립내각내의 미묘한 세력균형 관계때문에 의사결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명분으로 1994년 2월 14일 연립정권의 간부들에게 내각개조 의향을 표명하였다. 즉 호소카와 총리로서는 다케무라와 오자와·이치가와 가운데 오자와·이치가와쪽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社會黨, 民社黨, 新黨 사키가케는 다케무라 관방장관의 경질을 목적으로 한 내각개조에 대하여 강한 반발을 나타내었고, 다케무라 관방장관은 社會黨, 民社黨, 新黨 사키가케의 대오자와·이치가와노선에 대한 공동 투쟁을 지지기반으로 하여 호소카와와 오자와에 대하여 정치적 공세를 폈다. 社會黨, 民社黨, 新黨 사키가케가 연립여당을 이탈할 경우, 연립정권은 분열하여 와해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연립정권이 내부의 권력게임 속에서 결정적인 균열을 보이며 중요하게 되자 호소카와 총리의 내각개조에 대해서 公明黨도 신중론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에 호소카와 총리는 동년 3월 2일 밤 연립여당의 결속강화를 명분으로 하여 내각개조 단념을 표명하였다.

되어짐에 따라 호소카와 총리와 오자와 新生黨 대표간사는 연립여당이 일체화되지 않으면 自民黨에 승리할 수 없다고 역설하면서 연립여당의 정책통일을 추진하였고 아울러 주도권 장악을 꾀하였다. 즉 호소카와 총리와 오자와 新生黨 대표간사는 제2의 정계개편을 향하여 政策研究會 결성 → 統一會派 결성 → 새로운 新黨 결성이라는 전략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호소카와 총리의 사임표명과 함께 ‘국회 통일회파 사키가케-日本新黨’도 해체되었다. 즉 호소카와 총리와 다케무라 관방장관이 결별한 것이다. 이것은 호소카와 총리의 사임 후, 연립정권의 내부에 ‘오자와 대 다케무라’의 대립과 더불어 ‘日本新黨·新生黨·公明黨 對 社會黨·民社黨·新黨사키가케’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어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이 호소카와 정권은 정치개혁이라는 최우선과제를 달성하였지만, 연립정권을 결속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공통의 과제를 개발하지 못한 채 제2의 정계개편을 향한 권력게임의 전개 속에서 통치능력의 한계성을 노정하면서²⁴⁾ 8개월만에 막을 내린 것이다.²⁵⁾

(나) 호소카와 총리 사임 이후의 오자와 전략과 하타내각

호소카와 연립정권이 성립된 후 일본정치에서는 오자와 이치로 新生黨 대표간사를 비롯한 新生黨 세력이 주요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7·18총선 직전에 집권여당인 自民黨으로부터 이탈하였던 오자와 이치

24) 猪口孝, “新族議員待望論,” 『中央公論』 (1994年 3月號).

25) 호소카와 수상은 대립과 타협속에서 제도적 차원에서의 정치개혁만을 이룩하고, 생활자 중심의 개혁정치, 지방분권화를 위한 개혁정치는 전혀 추진하지 못한 채 도쿄 사가와 규빈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의혹을 받게 되자 1994년 4월 8일 오후 돌연 사임 표명을 한 것이다.

로와 新生黨 세력이 정치의 대지각변동 속에서 전개된 정계재편에서 위축·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 세력을 증대시키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첫째, 非自民 연립정권은 오자와 이치로의 주도 아래에서 성립되었고, 또 호소카와 총리는 제5당의 당수 출신으로 衆議院의 초선의원이었으므로, 정국운영에 있어서 중앙정계의 거물인 오자와 이치로의 정치력에 상당히 의존하였다.

둘째, 정권교체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新生黨 소속 의원들이 연립내각의 주요 요직에 포진하였다. 즉 하타 쓰토무 당수가 부총리 겸 外相직을 취임한 것을 비롯하여 新生黨 소속 의원들이 재정 및 예산을 총괄하는 大藏相, 산업과 통상을 총괄하는 通産相, 그 외에 農林水産相, 防衛廳 長官 등 내각의 핵심부를 차지하였다. 이는 연립내각이 新生黨 내각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고, 아울러 오자와 이치로가 막후 실력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권력기반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오자와 이치로는 연립정권의 정책결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호소카와 연립정권의 정책결정 구조는 ‘당수 회의’와 ‘대표자 회의’라는 이중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오자와 新生黨 대표간사와 이치가와 公明黨 서기장에 의하여 주도되는 ‘대표자 회의’에서 실질적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²⁶⁾

이와 같이 호소카와 정권에서 권력의 증추에 위치하게 된 오자와 이치로는 호소카와 총리의 사임후에는 연립정권의 틀을 유지한 채 新生黨의 하타 쓰토무 대표를 새 총리로 옹립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호소카와 총리의 사임후, 일본정계는 새 총리의 인선을 둘러

26) 岩見降夫, 앞의 글; 武村正義, 앞의 글.

싸고 혼미를 거듭하면서 제2의 정계개편이 야기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연립정권은 ‘기존 틀을 유지할 것인가, 분열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는데, 연립정권의 내부는 그 동안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하여 ‘日本新黨·新生黨·公明黨’ 대 ‘社會黨·民社黨·新黨 사키가케’로 나누어졌다. 또 自民黨 역시 이탈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정국의 혼란기에 오자와 新生黨 대표간사는 제1단계 전략으로서 연립정권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自民黨의 분열을 꾀하였다. 즉 오자와 新生黨 대표간사는 하타 쓰토무 新生黨 대표를 후임총리로 옹립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정치전략적 차원에서 자민당의 와타나베 미치오 前 부총리를 영입하려는 안을 제기하였다.

오자와 新生黨 대표간사의 ‘와타나베 前 부총리 총리옹립안’은 하타 新生黨 대표의 총리 옹립이 실패로 끝났을 경우에 사용할 대안인 동시에, 연립정권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자민당의 분열을 도모하는 戰略案이었다. 사실 와타나베 前 부총리가 1994년 4월 17일 新生黨과의 연대를 기대하면서 자민당 탈당 의향을 표명하였고,²⁷⁾ 가키자와 고지(柿澤弘治) 議員을 비롯한 7명의 와타나베派 議員이 20일 탈당하였다.²⁸⁾ 와타나베 前 부총리의 自民黨 탈당 의향 표명과 7명의 와타나베파 議員들의 탈당사태는 社會黨, 新黨사키가케에 상당한 자극이 되었다. 따라서 社會黨과 民社黨은 다시 야당이 되는 것에 불안을 느끼면서 와타나베 영입 반대를 조건으로 하타 총리 옹립 지지로 선회하였다. 新黨사키가케는 하타총리의 옹립은 지지하되 연립내각에는

27) 와타나베 전 부총리는 1994년 4월 18~19일의 고노-와타나베회담에서 탈당을 포기하게 된다.

28) 자민당을 탈당한 7명의 와타나베派 議員은 새로운 정당 ‘自由黨’을 결성하였다.

불참하는 閣外협력을 할 것을 표명하였다. 결과적으로 오자와 新生黨 대표간사의 의도대로 연립정권을 유지한 채 하타 新生黨 대표가 총리로 옹립되고, 自民黨은 동요하면서 분열현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1994년 4월 25일 하타 新生黨 대표가 새로운 총리로 선출되자, 오자와 新生黨 대표간사는 곧 제2단계 전략을 추진하였다. 제2단계 전략은 연립정권으로부터 反오자와 세력을 축출하고 총리회파를 결성하여 정권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오자와 新生黨 대표간사는 하타 新生黨 대표가 衆·參議院의 兩院에서 총리로 지명된 직후, 오우치 게이고(大內啓伍) 民社黨 위원장을 내세워 新生黨, 日本新黨, 民社黨, 自由黨 등이 참여하는 국회 통일회파 ‘改新’을 결성시켰다. 즉 국회 통일회파 ‘改新’은 하타 내각의 출범 직전 新生黨을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들에 의하여 社會黨, 新黨사키가케를 배제한 채 총리회파로서 결성된 것이다.

국회 통일회파 ‘改新’이 결성된 후 1994년 4월 28일 하타내각은 연립정권의 제2기 내각으로서 출범하였다. 그러나 新黨사키가케가 閣外협력의 방침에 따라 연립내각에 불참하고 게다가 ‘改新’ 결성에 반발한 社會黨이 연립내각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²⁹⁾ 하타 연립내각은 衆議院 총의석수의 1/3이 약간 넘는 소수 여당으로서 출범하여야만 하였다.

하타 연립정권의 내각 구성에는 오자와 이치로 新進黨 대표·이치가와 유우이치 公明黨 서기장의 ‘이치·이치’(一一)라인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반영되었는데, 내각 구성의 주요 특징은 ① 社會黨의 연립정권 탈퇴와 더불어 ② 社會黨에 안배되었던 6개의 각료직이 다른

29) 1994년 4월 28일 아침 하타 총리는 임명장을 받은 뒤 무라야마 사회당 위원장을 만나서 연립내각 참여를 위한 정책합의회담을 가졌으나 회담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여당에 배분됨에 따라 총리를 포함하는 21개의 각료직 가운데 新生黨(9명), 公明黨(6명)이 15개의 각료 자리를 차지하게 된 점이다. 즉 新生黨은 하타 신임 총리를 비롯하여 오자와의 측근인 구마가이 히로시(熊谷弘) 前 通商相과 기타무라 나오토(北村直人) 衆議員을 각각 관방장관과 부관방장관으로 임각시켰고, 나아가 法相, 大藏相, 通産相, 農水相 등의 경제관련 부처의 요직을 독차지하였다. 公明黨도 이시다 고시로(石田幸四郎) 위원장의 총무청 장관 재임명을 비롯하여 建設相, 運輸相, 郵政相 등 자민당 정권 시절 '利權 포스트'라고 일컬어 지던 實業官廳의 각료직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신임 外相직은 1994년 4월 20일 自民黨으로부터 탈당하여 自由黨을 결성하고 당수가 된 가키자와 고지(柿澤弘治)가 맡게 되었다.³⁰⁾

요컨대 하타 연립내각은 오자와가 주도하는 '新生-公明' 내각인 것이다. 이와 같은 하타 연립내각의 출범과 더불어 일본정계의 주요 세력은 ① 연립여당, ② 自民黨, ③ 社會黨·新黨 사키가케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일본 정치세력의 3分化는 연립여당이 거대야당에 포위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즉 소수여당인 하타 연립내각은 야당이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할 경우 결정적인 정치적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자와 그룹과 연립여당이 그와 같은 정치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하여 국회에서의 과반수세력의 회복을 도모할 경우 일본정계는 정계개편을 향한 권력게임 속으로 휘말려 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자민당 또는 사회당의 분열에 기인하는 정계개편이 일어나기 전에 하타 연립내각은 소수여당으로서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예상하였던 것처럼 1994년 6월 23

30) 가키자와 신임 외상은 오자와의 '보통 국가론'에 가까운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일 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자민당이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에 社會黨은 자민당과의 연계전략을 구사하면서,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연립정권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하타 내각의 자발적인 총사직을 요구하고 나왔다. 이제 社會黨이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이다. 실로 하타 연립내각으로서의 출범한 지 2개월도 못 넘기고 ‘衆議院 해산이나, 총사직이나’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

그런데 하타 연립내각은 社會黨과의 협의가 결렬되고 자민당의 내각불신임안 가결될 것으로 예상되자 오자와 新生黨 대표간사의 권고에 따라 가결을 기다리지 않고 동년 6월 25일 총사직을 선택하게 되었다.³¹⁾ 즉 하타 총리는 6월 25일의 기자회견에서 ‘정책노선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안정된 정권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였다’고 언급하면서 내각 총사직을 표명한 것이다.

이로써 일본 정국은 하타 연립내각의 총사직에 따라 후임 총리선출과 내각구성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권력게임으로 인하여 또 다시 안개정국이 되었다.

요컨대 ‘非自民 연립정권 대 야당 自民黨’이라는 대립구도 아래에서 일본 정치의 주요 세력은 ① 연립여당, ② 自民黨, ③ 사회당·新黨사키가케로 재편되었다. 즉 연립여당 및 自民黨의 보수세력이 일본의 주도적 정치세력이 되었고, 社會黨은 新黨사키가케와의 제휴에 의해서만 겨우 제3극을 이룰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 약화되었다.

(2) ‘무라야마 社會黨 총리의 연립정권’ 대 ‘통합야당 新進黨’

非自民 연립정권의 출범 이후 정국을 주도해 온 연립여당의 실력

31) 岩見降夫, “平成戰國時代(第6回),” 「中央公論」(1994年 8月號).

자 오자와 新生黨 대표간사는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衆議院 解散과 總選舉 실시’와 ‘내각 총사직’이라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타 총리에게 총사직을 권고하였다. 중선거구제 아래에서 선거가 치루어질 경우 연립여당은 日本新黨과 民社黨의 의석 격감과 더불어 연립야당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오자와 新生黨 대표간사는 연립정권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제3기 연립내각을 구성한다는 전략을 구사하려 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타 연립내각이 총사직을 하자, 오자와 新生黨 대표간사는 연립정권의 제3기 내각을 발족시키기 위한 合縱連衡의 권력게임을 전개하였다. 즉 오자와 新生黨 대표간사는 ①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는 自民黨과 社會黨의 제휴는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② 정치이념과 정책노선을 같이하는 ‘보수중도 연합’을 주창하면서 하타 총리를 새로운 연립정권의 총재로 재추대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하여 自民黨 인사를 총리로 추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③ 연립여당의 결속과 社會黨의 연립여당 복귀를 추진하면서 자민당의 분열을 도모하였다.

이에 다케무라 新黨사키가케 대표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사회당 위원장을 새로운 총리로 추대할 것을 주창하고 自民黨과 社會黨의 제휴에 결정적 매개역할을 하면서 오자와 전략에 대응하였다.

고노 요헤이 自民黨 총재는 정권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무라야마 총리 옹립’을 수용하였고, 무라야마 社會黨 위원장은 당초에는 연립정권으로의 복귀를 지향하였으나 1994년 6월 29일의 ‘8당 연립협약’가 결렬됨에 따라 自民黨, 新黨사키가케와 제휴하게 되었다.

自民黨, 社會黨, 新黨사키가케는 무라야마 社會黨 위원장의 총리 옹립을 결정하였고, 오자와 新生黨 대표간사는 親오자와 관계에 있으며 新生-公明-自民탈당파의 保守大聯合을 주장해 온 自民黨의 가이

후 도시키 前 총리를 총리후보로 내세웠다. 일본정국이 ‘自民 對 非自民’의 대결구도에서 ‘오자와 대 反오자와’의 대결구도로 전환한 가운데 새로운 총리선출을 둘러싸고 무라야마 도미이치 사회당 위원장과 가이후 도시키 前 총리가 대결하게 된 것이다.

1994년 6월 29일 밤 衆·參兩院의 본회의에서 총리지명 투표가 행하여졌고, 그 결과 自民黨, 社會黨, 新黨사키가케가 지지한 무라야마 社會黨 위원장이 선출되었다.³²⁾ 즉 오자와의 정치전략이 한계성을 드러내면서 작년의 7·18총선 이후 출범한 非自民 연립정권은 1년을 채 못 넘기고 붕괴하게 되고, 그 대신 1947년 가타야마 내각 이후 47년 만에 社會黨 총리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는 일본정치의 지각변동을 실감케 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권교체와 더불어 등장한 무라야마의 自民-社會-사키가케 연립내각은 1994년 6월 30일 조각을 완료하였는데 연립내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³³⁾

첫째, 총리를 포함한 21개의 각료직은 自民黨에 13개, 社會黨에 6개, 사키가케에 2개직이 배분되었다.

둘째, 自民黨은 양적으로 전체 각료직의 약 62%에 해당하는 13개의 각료직을 배분받았을 뿐 아니라 質적으로 부총리 겸 外相, 通産相, 法務相, 防衛廳 長官, 自治相 등의 주요 각료직을 차지하였는데, 이것은 社會黨 총리에 대한 국내외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방어적 효과를 가지기 위한 것이다. 즉 社會黨 총리정권의 취약점을 自民黨

32) 사회당내 우파가 중심이 된 ‘데모크라츠’와 자민당내 와타나베派는 오자와 新生黨 대표간사가 자민당 분열을 노리면서 내세운 가이후 도시키 후보를 지지하였다.

33) 무라야마 연립정권의 주요 과제는 ① 정책조정능력의 제고에 따른 내각의 응집력 강화, ② 정책시스템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 ③ 정치개혁에 이은 세계개혁, 행정개혁, 경제개혁의 달성이다.

이 보완하는 내각인 것이다.

세째, 社會黨의 이가라시 고조(五十嵐廣三) 議員이 총리를 보좌하면서 내각을 조정하는 관방장관직을 맡고, 고노 요헤이 자민당 총재가 부총리 겸 外相을, 다케무라 마사요시 新黨사키가케 대표가 大藏相을 맡게 된 것도 주목되는 점이다. 이가라시 고조 議員은 自民-社會-사키가케의 聯政 구성에 다소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던 社會黨의 위원장 후보였는데, 그가 관방장관직에 취임하였다는 것은 社會黨의 결속과 더불어 정권의 안정감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³⁴⁾ 고노 自民黨 총재는 오자와 노선을 군사-정치적 역할의 증대를 도모하는 국가주의 노선으로 비판하는 한편, 외교의 계속성을 주장하는 입장에 있었으므로 그의 外相 취임은 오자와 노선과는 달리하면서도 외교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社會黨 총리 정권의 등장에 따라 군사대국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겠지만, 대외정책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다케무라 新黨사키가케 대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호소카와 前 총리의 國民福祉稅 구상에 강하게 반발한 바가 있으므로, 그의 大藏相 취임은 앞으로의 세계개혁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지닌 무라야마 연립내각의 출범은 정치변동과 정계개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일본정치에서 保革이데올로기의 정치구도를 완전히 붕괴시킴과 동시에 제2의 정계개편을 본격적으로 전개시키게 된 것에 정치적 의의가 있다. 즉 제1의 정계개편이 ‘自民對 非自民’의 대결구도 속에서 7·18총선을 계기로 自民黨 장기정권의 붕괴와 더불어 비자민 연립정권을 탄생시킴으로써 전개되었다면, 제2의 정계개편은 ‘오자와 대 反오자와’의 대결구도 속에서 본격적으로

34) 무라야마 총리는 처음에 가장 신뢰 할 수 있는 노사카 고젠 議員을 관방장관으로 임명하려 했으나 노사카 議員이 건강상의 이유로 고사했다.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오자와 대 反오자와’의 대결구도 아래에서 무라야마 연립정권은 연립정권의 분열을 막기 위하여 黨派간의 화합과 정책조율을 통하여 협조체제를 정비·강화하고자 하였다. 즉 연립정권을 탄생시킨 무라야마 총리(사회당 위원장)와 고노 外相(자민당 총재), 다케무라 大藏相(新黨사키가케 대표) 3인은 ‘야합정권의 단명’이라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하여 매주 월요일 정례모임을 갖고 정책에 대한 의견 조율을 한 것이다. 그 귀결로서 自民-社會-사키가케 연립정권은 다소 예상하였던 것보다는 비교적 유연한 정책조정 능력을 보여 주었고, 게다가 社會黨은 自民黨의 양보에 응하여 책임정당으로서 기본정책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였다.³⁵⁾ 社會黨의 정책전환 즉 ① 자위대 合憲 인정, ② 히노마루 및 기미가요의 일본 국기 및 국가 인정, ③ 미·일 안보조약의 견지, ④ 원자력 발전소의 신설 및 증설 등의 黨論 결정은 일본 정치의 또 다른 변모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한데,³⁶⁾ 무라야마 총리와 사회당 집행부는 권력기반의 구축과 더불어 1996년 10월의 제41회 衆議院 총선거를 겨냥하여 생존전략으로서 현실노선을 택한 것이다.

한편 야당으로 전략한 新生黨, 公明黨, 日本新黨등의 舊 연립여당은 自民-社會-사키가케 연립여당에 대항하고 나아가 내년의 소선거구 비례대표제 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新黨 결성을 도모하였다. 1994년 6월 30일 日本新黨, 民社黨, 自由黨의 대표자가 새로운 新黨을 향한 준비협의를 개시하였고, 동년 7월 7일에는 가이후 도시키, 호소카

35) 사회당은 호소카와정권에 참여했을 때 사회당의 정책과 연립정권의 합의에 따른 정책을 별개의 것으로 구별했다. 즉 사회당은 연립정권과 별개로 독자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36) 1994년 7월 28일의 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는 ① 자위대 합헌 인정, ② 히노마루 및 기미가요의 일본 국기 및 국가 인정, ③ 미·일 안보조약의 견지 ④ 원자력 발전소의 신설 및 증설을 新基本政策을 결정했고, 동년 9월 3일의 임시 당대회에서는 新基本政策을 당의 정책노선으로 확정했다.

와 모리히로, 하타 쓰토무 등 전직 총리 3명이 회동하여 통합야당을 결성할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동년 8월 8일의 5당 대표회의에서는 하타 前 총리를 비롯하여 이시다 고시로 公明黨위원장, 호소카와 모리히로 日本新黨 대표, 요네자와 다카시 民社黨 위원장, 가이후 도시키 前 총리 등이 참석하여 통합야당 결성을 구체화시켰다. 마침내 동년 9월 28 일 야당 각 당파는 衆議院 統一會派 ‘改革’(187명)을 결성하고 衆參議員 225명이 참가하는 ‘新黨 準備會’를 발족시켰다. 새로운 新黨의 모체가 될 ‘新黨 準備會’는 1996년 10월의 소선거구 비례대표제 선거에 대비하여 新黨 창당작업에 착수하면서, ① 總會, ② 각 정당의 黨首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首腦會議, 그리고 ③ 각 당파의 대표간사와 서기장급으로 이루어지는 實行委員會를 구성하였다. 오자와 新生黨 대표간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實行委員會는 6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黨의 기본정책을 입안하면서 統一會派 ‘改革’을 총괄하는 것이었다. 이는 야당통합에 있어서도 오자와 新生黨 대표간사가 여전히 실력자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요컨대 야당은 統一會派 ‘改革’과 ‘新黨 準備會’의 발족으로 말미암아 통합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는데, 日本新黨은 1994년 10월 30일 당대회에서 당해체를 결정하였고, 新生黨, 公明黨, 民社黨 등도 동년 12월 9일까지 당을 해체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거대 보수야당 新進黨은 1994년 12월 10일 衆參兩院 214명의 議員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결성되게 되었다. 즉 新生黨, 公明黨, 民社黨, 日本新黨, 自由黨 등이 통합되어 결성되게 되었는데, 가이후 도시키 前 총리를 당수로 하고 오자와 이치로를 간사장으로 하는 新進黨은 1955년 보수합동에 의한 自民黨의 결당 이래 처음으로 200여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참가하여 결성된 정당이기도 하다. 新進黨의 등장으로 일본정치는 ‘무라야마 社會黨 총리의 연립내각 對 新進黨’이라

는 대립구도 아래에서 보수정당인 自民黨과 新進黨을 두 축으로 하는 2.5극 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무라야마 연립내각의 출범에 따른 社會黨의 현실노선으로의 전환은 일본의 정치공간을 거의 보수화로 변화시켰다.

(3) '오자와 新進黨 당수' 대 '하시모토 自民黨 총리의 연립정권'

7·18총선을 계기로 非自民 연립정권의 성립과 더불어 호소카와 내각, 하타 내각이 등장하였고, 非自民 연립정권이 붕괴된 후에는 무라야마 연립내각이 등장하였지만, 정치변동기에 등장한 이들 내각들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리더십의 부족과 더불어 한계성을 노출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소카와 연립내각은 대립과 타협 속에서 제도적 차원의 정치개혁만을 이룩하고 '생활자 중심의 개혁'이나 '지방분권화를 위한 개혁정치'는 전혀 추진하지 못한 채, 도쿄 사가와 규빈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자 국민들의 높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8개월의 단명으로 끝났다. 이어 등장한 하타 연립내각도 소수여당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2개월을 채 넘기지 못하였다.

그리고 '정치적 야합'이라는 비난 속에서 등장한 무라야마 연립내각은 국민들의 낮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1년 8개월 동안 유지되었지만, 1994년에 발생한 고오베 대지진이나 옴진리교의 독가스 살포사건 등을 대처하는데 있어서 위기관리능력의 한계성을 보여 주었다. 社會黨 출신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의 리더십은 실로 취약한 것이었다.³⁷⁾

그러므로 일본 국민들은 경기불황을 타파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경

37) 무라야마 연립내각은 '정치적 야합'이라는 비판으로 인하여 국민지지 35%라는 낮은 지지에서 출발하였는데, 계속해서 부지율이 지지율을 상회했다. 1995년 7월에는 부지율이 50%를 돌파했다.

제개혁,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고, 아울러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의 정치'를 요망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상황은 1995년 9월 하시모토 류타로를 自民黨의 당수로, 그리고 동년 12월 오자와 이치로를 新進黨의 당수로 등장시켰다. 오자와 이치로나 하시모토 류타로는 강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서 신보수세력의 대표적인 정치가이다.

<표 1> 하시모토와 오자와의 비교

	하시모토 류타로	오자와 이치로
당시 나이	58세	53세
학 별	慶應大 法學部 政治學科	慶應大 經濟學科, 日本大 大學院 中退
경력 (각료·당료)	厚生省·運輸省·大藏省, 通産省 大臣, 自民黨 幹事長·政務調査會 會長·總裁	自治省 長官, 官房副長官, 自民黨 幹事長, 新生黨 代表幹事, 新進黨 幹事長·黨首
선거구	岡山縣	岩手縣
당선횟수	11회 (1963년 26세에 첫당선)	9회 (1969년 27세에 첫당선)
부친	하시모토 류고(橋本龍伍) 厚生省·文部省 大臣, 行政改革廳 長官 역임	오자와사에키(小澤佐重喜) 運輸省·郵政省·建設省 大臣, 行政管理 長官, 自民黨 政務調査會 會長 역임
파벌 (자민당내)	佐藤-田中-竹下- -舊小淵派	田中-竹下-羽田派
후원조직	유족회, 의사회	創價學會
외교안보	유엔의 PKO활동참가 불가결 및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전수방위 준수	유엔경찰부대 창설, 해외파견 자위대 재편성

하시모토와 오자와는 무라야마 후임의 '총리지명선거'에서 경합하게 되는데, 결과는 하시모토의 승리로 끝났다.³⁸⁾ 즉 1996년 1월 11일

의 衆議院 총리지명선거에서 오자와가 167표를 얻은 데 비해, 하시모토는 과반수(245표)보다 훨씬 많은 288표를 획득하여 당선된 것이다.

하시모토의 총리 당선으로 自民黨정권은 2년 5개월 여만에 부활되었는데, 제1기 하시모토 연립내각은 보수세력의 대연합을 주창해 온 가지야마 세이로쿠(梶山靜六)의 관방장관 입각을 비롯하여 보수주의의 색채가 강화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하시모토 연립내각의 등장과 더불어 일본정계의 권력게임은 '하시모토 연립정권 對 오자와의 新進黨'이라는 대립구도 아래에서 '하시모토 對 오자와'의 대결을 축으로 전개되어 갔다. 즉 하시모토의 총리 취임은 비록 연립정권이지만 自民黨 정권의 부활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일본 정계개편의 방향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본정치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일본정치는 정치변동에 따른 연립정권의 시대 즉 ① 호소가와 연립정권, ② 하타 연립정권, ③ 무라야마 연립정권, ④ 하시모토 연립정권을 거치면서 다음과 같은 변화를 나타내었다.

첫째, 共產黨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모두 연립정권에 참여하여 여당경험을 가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일본정당의 여당화는 일본의 정치공간을 거의 보수·우경화로 변모시켰다. 특히 무라야마 연립내각의 출범과 더불어 社會黨은 현실노선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로써 共產黨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은 기본이념이나 정책노선에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되었다. 즉 1996년 1월에 치루어진 自民黨, 新進黨, 社會民主黨의 黨대회에서 제시된 정계개편 및 주요 정책에 대한 기

38) 讀賣新聞社는 하시모토가 총리로 선출된 직후인 1996년 1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였는데 전국 유권자의 약 66%가 하시모토 총리에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하시모토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가였기 때문이었다. 「讀賣新聞」, 1993. 1. 13.

본방침은 <표 2>과 같은데, 이 표를 살펴 보면, 3당간의 대립축은 명확하지 않고 대체로 불투명하다. 또 朝日新聞社가 1996년 1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케이트 조사에서도 정당간의 뚜렷한 정책의 대립이 나타나지 않았다.³⁹⁾

<표 2> 3당의 정계개편 및 주요 정책에 관한 기본방침

	自民黨	新進黨	社會民主黨
집권전략	3당연립정권을 유지해 온 신뢰관계를 중요시 하면서 이념, 정책의 실현을 추구한다.	총선거 태세를 하루라도 확립하고 당에 조기해산을 요구한다.	연립시대에 집권이 가능한 민주리버럴 정치세력을 결집하여 신당을 결성한다.
政敎분리	종교법인의 운영에 민주성, 투명성을 높이고, 정교분리를 추구한다. 헌법20조의 해석을 포함한 논의를 계속한다.	자민당이 획책하고 있는 헌법 20조의 해석을 검토하고, 정교분리법의 제정을 반대한다.	특정의 종교단체에 지배되는 정당에 공천을 맡길 수 없다.
안전보장	미·일 안전보장을 중시	미·일 안전보장체제를 견지하고 전수방위의 범위내에서 질이 높은 방위력을 보유한다	UN 중심의 총합안보체제를 확립한다.
헌법	1996년도 운동방침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해석개헌 등은 하지 않고 45년에 걸쳐 신헌법을 국민과 논의한다.	헌법에 담겨져 있는 주권재민, 항구평화, 기본적 인권, 국제협조의 이념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킨다.

둘째, 55년체제에서 제1야당이었던 社會黨이 연립정권시대를 거치면서 계속 침하함에 따라 일본의 정치구도는 '보수 대 혁신'의 구도에서 '보수 대 보수'의 구도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변화와

39) 「朝日新聞」, 1996. 1. 11.

더불어 社會黨은 黨名을 ‘社會民主黨’(이하 社民黨으로 약칭)으로 변경하였다.⁴⁰⁾

셋째, 정계개편 등 일련의 정치적 변화 속에서 호소카와 모리히로, 오자와 이치로, 하타 쓰토무, 고노 요헤이, 하사모토 류타로, 하토야마 유키오, 간 나오토(菅直人) 등의 쇼와(昭和)세대가 일본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일본정계에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울러 신보수세력이 일본정계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10·20총선에 따른 自民黨정권의 부활과 정계개편

가. 10·20총선과 하시모토 自民黨 단독내각의 등장

일본정치의 변화, 특히 일본 정치공간의 보수·우경화와 신보수세력의 등장은 1996년 10월 20일의 衆議院 총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0·20총선은 과거의 중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2~6명 선출)가 아닌 소선거구·비례대표제 병립제(한 선거구에서 1명 선출, 비례대표는 11개 블록별로 정당득표에 따라 당선) 아래에서 처음으로 치루어진 선거였는데, 그 결과는 自民黨 승리(21→239), 新進黨 패배(160→156), 民主黨 현상유지(52→52), 共產黨 약진(15→26), 社民黨 몰락(30→15)이었다.

10·20총선의 결과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혁신계인 共產黨이 다소 약진하였다 하더라도 군소정당에 불과하므로, 일본사회의 ‘총보수화’ 분위기 속에서 신보수세력이 衆議院 의석의 절대 다수를 점한 것이다.

40) 사회당은 1996년 1월 19일 東京에서 개최된 제64차 정기 당대회에서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당명을 ‘社會民主黨’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10·20총선결과와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보수정당인 自民黨이 비록 과반수 획득은 못하였지만, 1996년 11월 7일 社民黨과 新黨사키가케의 閣外협력⁴¹⁾으로 하시모토 총리의 집권 2기 1차 내각(2차 개각)을 구성함으로써 3년 3개월만에 自民黨정권을 부활시켰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自民黨 단독집권의 부활 실현시킨 하시모토 총리는 국민들의 높은 지지⁴²⁾를 바탕으로 '21세기 일본을 위한 국가개혁'을 추구하게 되었는데, 개혁을 지향한 하시모토의 강력한 리더십은 自民黨의 지지가 확산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일본정치는 自民黨의 세력확대와 더불어 自民黨 장기집권시 권력운용의 핵심요체였던 파벌과 族(특정 정책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國會議員群)이 다시 부활되는 조짐을 나타내었다.

(1) 하시모토 정권의 국가개혁

하시모토 총리는 내각출범과 함께 21세기에 대비하는 '개혁과 창조'를 기치로 내걸고, '고비용-저효율'의 국가경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즉 하시모토 총리는 1997년 1월 20일의 施政方針演說을 통하여 행정개혁을 비롯하여 재정구조개혁, 경제구조개혁, 금융시스템 개혁, 사회보장구조개혁, 교육개혁 등 6대 국가개혁을 발표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명백히 하였다.

41) 閣外協力は 내각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42) 1996년 11월 하시모토 내각출범시 국민들의 지지도는 매우 높은 56.6%였다.

<표 3> 6대 개혁의 주요 내용

6대 개혁	주요 내용	실시일정 예정
행정개혁	행정의 간소화·효율화 중앙부처 개편, 총리의 리더십 강화, 지방분권시스템 구축	2001년부터 실시
경제구조개혁	규제완화·철폐에 따른 시장 경쟁의 활성화, 특수법인의 개혁·민영 화로 경쟁력 강화, 신규산업의 창조, 매력있는 투자환경의 창조	2001년까지 완성
금융시스템개혁	금융시장의 활성화 (free, fair, global)	2001년까지 완성
재정구조개혁	세출억제	2003년까지 적자국채 해결
사회보장제도개혁	효율적·안정적인 사회 보장제도, 고령화사회 대비	介護保險 2000년 도 입
교육개혁	도전정신이 있는 진취적 인재육성	

6대 국가개혁 가운데에서 행정개혁은 1996년 10·20 총선시 자민당을 비롯한 거의 모든 정당에 의해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즉 관료기구의 비대화·경직화를 타파하고, 국가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의 간소화·투명성의 제고를 추구하는 행정개혁이 주창되었다.

그러나 행정개혁은 현실적으로 중앙부처(省廳)·族·관련 이익단체들의 이해가 얽혀 있어 가장 어려운 개혁으로 지적되었다.⁴³⁾

그러므로 하시모토 총리는 내각출범 이후 곧 '정부조직 개편'과 '지

43) 그 이전의 총리들도 행정개혁에 착수하였지만, 대체로 실패로 끝났다.

방분권 실현'을 최우선 개혁과제로 선정하고, 아울러 6대 국가개혁의 발표 이전에 이미 총리직속기구로서 「행정개혁회의」(1996. 11, 본부장: 하시모토 총리)를 설치함과 더불어, 행정개혁작업에 착수하였다.⁴⁴⁾

행정개혁의 지향 내용은 경직된 관료제를 타파하기 위해 중앙부처의 개편 즉 중앙부처의 관료가 가지고 있는 권력·권한을 정치·지방·시장의 세 분야에 분권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분권화 작업의 사전작업으로서 정치·지방·시장에 대한 신뢰성 회복은 분권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정치로의 분권」을 위해서는 총리권한 및 보좌가능 강화, 행정의 간소화 및 효율화 등을 지향하는 행정기구의 개혁, 국회개혁, 정당개혁을 추구하여야 하였고, 「지방으로의 분권」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정부로의 이양, 지방정부의 역량에 따른 「지방→지방」으로 권한 이양 등을 추구하여야 하였으며, 「시장으로의 분권」을 위해서는 규제완화 및 철폐, 민영화 등을 추구하여야 하였다.

이와 같은 행정개혁을 지향하고자 하였던 하시모토 내각의 「행정개혁회의」는 1997년 9월에 「행정개혁 중간보고」, 동년 12월에 「행정개혁 최종보고」를 발표하였다. 「행정개혁 최종보고」는 ① 현재 22개 중앙부처(1府 12省 9廳)의 13개 중앙부처(1府 12省廳)로의 축소, ② 내각기능 및 총리권한의 강화, ③ 정부기능의 구분과 더불어 중앙정부는 정책기획업무만 담당, 기타 집행업무는 外廳(agency)으로 이관 ④ 정책평가제도의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하시모토 내각의 행정개혁에 대한 의욕적인 추진은 내각의 지지도가 상당히 상승되도록 하였다.⁴⁵⁾

44)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무라야마 연립내각때 설치되었다(1995. 7. 3).

45) 하시모토 내각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駐페루 일본대사관 인질 사건」(1996. 12)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였으나, 1997년 9월에 행정개혁 중간보고안이 발표되는 등 개혁작업이 구체화되면서 56.1%라는 높은 지지를 나타내었다.

(2) 하시모토 정권의 집권강화와 自民黨 정치의 부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0·20총선 이후 하시모토 2차 내각은 社民·新黨사키가케와의 각외협력을 바탕으로 自民黨 단독내각으로 출범 하였으나, 원내 과반수 미달로 인하여 정국 운영에 한계성을 노정하였다.

따라서 하시모토 정권은 군소정당의 일부 의원, 야당 新進黨의 탈당과 및 무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입작업을 계속 추진하였다. 그 결과 自民黨 재집권 10개월만에 단독 과반수를 확보하게 되었다. 즉 1997년 9월 5일부터 自民黨은 단독 과반수를 확보하게 되었는데, 衆議院 정당별 의석분포는 自民黨 251, 新進黨 131, 民主黨 52, 共產黨 26, 社民黨 15, 太陽黨 10, 新黨사키가케 2, 무소속 13 등이었다. 自民黨의 단독 과반수 확보는 하시모토 총리가 정국을 주도할 수 있도록 안정된 원내 정치기반을 제공하였고, 하시모토 정권의 집권기반이 한층 강화되도록 하였다.

하시모토 총리는 自民黨의 단독 과반수 확보와 더불어 집권기반이 강화됨에 따라 1997년 9월 11일 집권 제2기 2차 개각(3차 개각)을 단행하였다. 제2기 2차 내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 동안 개혁작업을 담당해 온 실세들이 대거 기용되었다. 즉 행정개혁을 위하여 사토 고코(佐藤孝行) 自民黨 행정개혁 추진 본부장이 總務廳 長官, 사회보장 개혁을 위하여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이 厚生省 大臣, 경제구조 개혁을 위하여 호리우치 미츠오(堀内光雄)이 通産省 大臣, 교육개혁을 위하여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이 文部省 大臣에 기용되었고, 재정구조 및 금융체제 개혁을 위하여 미즈즈카 히로시(三塚博)가 大藏省 大臣에 유임되었다.

둘째, 自民黨의 내부는 社民·新黨사키가케와의 정책협력을 중시하

는 ‘연립정권파’와, 新進黨 등 야당내 보수세력과의 결집을 추구하는 ‘보수연합파’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동안 하시모토 총리 및 내각은 ‘연립정권파’와 ‘보수 연합파’의 세력균형 위에 존립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각에서는 ‘보수연합파’의 대표적 인물인 가지야마 세이로쿠(梶山靜六) 관방장관이 교체되는 대신, YKK그룹 즉 가토-야마자키-고이즈미를 중심으로 하는 ‘연립정권파’는 계속 중용되었다.

셋째, 전체적으로 보면, 당 3역 즉 가토 고이치(加藤纈一) 간사장, 야마자키 다쿠(山崎拓) 정무조사회장,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무회장의 유임과 더불어 당내 파벌안배에 치중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즉 파벌배분은 오부치派 8명(총리 포함), 미츠즈카派 4명, 미야자와派 4명, 와타나베派 4명, 무파벌 1명이다.

요컨대, 하시모토 총리의 제2기 2차 개각(3차 개각)은 국정운영면에서는 21세기를 위한 개혁지향적 특징을 나타내지만, 권력운영면에서는 해체되었던 파벌이 다시 부활되는 조짐을 가시화시키는 것이었다.

自民黨의 각 파벌들 즉 ‘오부치派’, ‘미츠즈카派’, ‘미야자와派’, ‘와타나베派’, ‘고모토派’ 등 5대 파벌은 1993년 7·18총선을 계기로 自民黨이 야당으로 전락한 뒤, 1994년 11월 黨개혁 차원에서 내려진 해체 결정에 응하여 일단 해체되었다.

그러나 파벌은 실질적으로는 ‘平成研究會’(오부치派), ‘新政策研究會’(미츠즈카派), ‘木曜研究會’(미야자와派), ‘政策科學研究所’(와타나베派), ‘番町政策研究所’(고모토派) 등 정책연구회 형태로 전환하여 존재하였다. 따라서 파벌은 운영면에서도 기존 파벌 영수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아울러 세력확대를 위한 활동도 ‘수면 아래’에서 여전히 전개되었다.⁴⁶⁾

46) ‘와타나베’派는 파벌 회장인 와타나베 미치오가 1995년 9월 사망함에 따라, 나카소네야 스테로 前 총리의 중재로 무토 前 외상이 1995년 10월 신입회

이와 같은 파벌의 존재는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의 전환, 파벌에 대한 정치헌금 금지 등으로 이전에 비해서 약화되었지만, 1996년 10·20총선을 계기로 自民黨 단독정권이 성립되면서 재차 '수면 위'로 가시화되는 조짐을 나타내었다. 즉 각 파벌은 해체 결정이후 중단하였던 수련회 개최 등을 통하여 결속력 강화, 세력 확대를 추구하였는데, 파벌의 영향력은 제2기 1차 내각(2차 내각)의 구성에 가시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제2기 2차 내각(3차 내각)의 구성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벌안배'라고 지적될 정도로 강하게 작용하였다.

또 自民黨 단독정권의 재등장은 특정정책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國會議員群인 族의 부활을 초래하였다. 族의원은 정책전문가로서 관료의 한계성을 보완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政-財-官'의 3각 구조하에서 각종 이권개입과 더불어 정치비리를 야기하는 부정적인 활동 때문에 1993년 7·18총선 이후 호소카와 非自民 연립정권의 출범과 함께 정치개혁이 추진되는 와중에 극히 약화되었다. 그러나 1996년 1월 무라야마 연립정권에 自民黨이 참여하면서 族은 서서히 소생하기 시작하였고, 동년 11월 하시모토 自民黨 단독정권이 탄생하게 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상당히 회복하게 되었다. 族은 衆議院의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전환되면서 종전과 다소 다른 측면을 나타내기도 하였는데,⁴⁷⁾ 하시모토 내각의 행정개혁에 적지 않은 저항으로 영향력을 미쳤다.⁴⁸⁾

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47) 중선거구에서 소선거구로 전환되면서 정치인들은 선거 때문에 종전보다 지역의 민원에 대해 한층 강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는 정치인들을 이전보다 小粒化되도록 하였고 大局의 시각보다 눈앞의 개별 이익에 집착하도록 하였다. 族의원의 경우도 지역의 다양한 요구 때문에 때때로 자기 분야 이외에서 활동을 하여야 했고, 대국적 차원보다 개별적 이해관계 차원에서 활동하여야 했다.

48) 郵政族의 반발이 가장 심하였고, 建設族과 農林族도 강하게 반발하였다.

요컨대, 1996년 10·20총선을 계기로 自民黨 단독집권이 부활되고, 自民黨의 세력확대가 전개되면서 自民黨 장기집권시 권력운용의 핵심요체였던 파벌과 族이 재차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3) 야권의 변동과 하시모토 총리의 퇴진

10·20총선에서 패배한 제1야당 新進黨은 自民黨 단독정권의 출범에 따른 위기감 속에서 오자와 이치로 당수의 독선적인 당운영에 대한 불만의 누적, 계파간 불협화음의 증폭 등으로 인하여 분열 조짐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1997년 6월의 東京都 의회선거에서 新進黨 후보자 전원(11명)이 낙선하게 되자, 당내는 오자와 당수의 지도력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면서 한층 중요하게 되었다. 이처럼 분열 상태에 있던 新進黨은 오자와 당수가 재선되는 과정에서 표출된 계파간 갈등으로 인하여 마침내 창당 3년만에 해체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즉 1997년 12월 18일 당수로 재선된 오자와는 당내 계파간 갈등과 균열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게 되고 아울러 당 해체와 더불어 '일본 재건 구상'을 골격으로 하는 신 보수정당의 결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新進黨은 1997년 12월 27일 당 해체를 공식적으로 결정하게 되고 이듬해 1월에는 自由黨, 新黨友黨, 新黨平和, 改革클럽, 黎明클럽, 국민의 소리 등 6개의 정파로 분열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일본의 정당 구도는 술한 군소정당이 난립하는 다당적 구도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리고 붕괴된 新進黨을 대신하여 간 나오토(菅直人)가 이끄는 民主黨이 제1야당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야권의 구심세력이 된 민주당은 야당 입장의 독자노선을 견지하기 위해 대여 공세의 강화 등 선명성 부각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정권정

당을 지향하여 반보수세력 중심의 야권통합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그 결과 1998년 4월 27일 새로운 중도정당인 '民主黨'(衆議院 93명, 參議院 38명)을 결성하게 되었다. 즉 舊 '民主黨', 民政黨, 新黨 友愛, 民主改革聯合이 통합하여 제1야당 新 '民主黨'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야권의 이합집산과 더불어 통합작업은 1998년 7월의 參議院 선거를 겨냥하면서 추진되었다.

한편, 自民黨의 단독 과반수 확보와 더불어 집권기반이 강화된 상태에서 등장한 하시모토 집권 제2기 2차 내각은 국민들의 행·재정개혁 등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국민지지율이 50%를 상회하는 높은 지지속에서 출범하였으나, '록히드사건'에 연루되었던 '사토고코'(佐藤孝行)의 총무청 장관 입각·사퇴 파문을 계기로 하락세로 반전되기 시작하였다. 즉 하시모토 내각의 지지율은 9월 개각 파동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었고, 관료 및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따른 각종 개혁정책의 미흡에 대한 불만, 경기침체의 심화,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 하시모토 총리의 중국 정보기관 여성과의 밀회설 등으로 급락하게 되었다. 1997년 12월경에 이르러 30%대로 하락하였고, 參議院 선거전 후인 1998년 7월에는 20%대로 하락하였다.

따라서 하시모토 총리의 정국 주도력은 약화되게 되었고, 1998년 7월의 參議院 선거는 自民黨의 패배로 끝났다. 自民黨의 參議院 선거 패배로 인하여 參議院의 구도는 衆議院과 달리 與小野大(與 104, 野 148)를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하시모토 총리는 參議院 선거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였다.

나. 보수대연합의 추진과 ‘自民·自由·公明黨’ 聯政의 출범

(1) 오부치 내각의 등장

하시모토 총리의 퇴진으로 그 후임을 둘러싸고 自民黨내에서는 ‘오부치 게이쥔 대 가지야마 세이로쿠’의 대결을 중심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고노 요헤이 등이 경합을 벌이다가 오부치가 자민당 총재 겸 총리후보로서 선출되었다.

따라서 1998년 7월 30일의 衆·參議院의 총리 선거에서는 自民黨의 오부치 게이쥔 총재와 民主黨의 간 나오토 대표가 경합하게 되었다. 그 결과 衆議院에서는 오부치 게이쥔이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여 총리로 선출되었고, 參議院에서는 간 나오토가 2차 결선투표에서 총리로 선출되었다.⁴⁹⁾ 즉 衆·參議院에서 서로 다른 총리가 선출된 것이다.

이에 衆·參議院은 곧 兩院 협의회를 소집하여 총리 지명을 위한 의견 조정을 하게 되는데, 협의회 합의 도출이 실패하게 됨에 따라 衆議院 우월원칙에 따라 오부치 게이쥔(小淵惠三)이 총리로 지명되게 되었다. 이로써 ‘경제희생’ 및 ‘21세기 국가체제 정비’를 기치로 내건 오부치 정권이 1998년 7월 30일 출범하게 되었다.

오부치 내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었다.

첫째, 총리 경험자인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前 총리가 大藏相

49) 제143차 임시국회 개회(1999. 7. 30~10. 7)와 함께 실시된 총리 선거 결과, 衆議院에서는 오부치 게이쥔 自民黨 총재가 제1차 투표에서 총투표수(497표)의 과반수를 상회하는 268표를 획득하여 164표를 획득한 간 나오토 民主黨 대표를 누르고 총리 선출되었다. 그러나 參議院에서는 제1차 투표에서 오부치 게이쥔이 103표, 간 나오토가 98표를 획득함으로써 과반수 획득에 실패함에 따라(총투표수 248표) 2차 결선투표에 돌입하게 되었는데, 상위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2차 투표에서는 공산당을 포함한 쉰 야당이 공동으로 지지한 간 나오토 민주당 대표가 142를 획득하여 103표를 획득한 오부치 게이쥔 自民黨 총재를 누르고 총리로 선출되었다.

에 중용되었고,⁵⁰⁾ 민간인 실물경제전문가인 사카이야 다이치(堺屋太一)가 경제기획청 장관으로 기용되었는데, 이는 오부치 내각이 '경제 재생 내각'으로서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을 전향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도를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 각료직은 양적 차원에서는 파벌간 역학구조에 따라 오부치派 5명, 미야지와派 5명, 미츠즈카派 3명, 와타나베派 3명, 고모토派 2명, 무파벌 1명, 민간인 1명으로 배분되었는데, 질적 차원에서는 大藏相, 官房長官, 방위청 장관 등의 요직은 오부치派와 미야지와派에 의해 장악되었다. 즉 오부치派와 미야지와派가 주요 각료직의 확보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한 것이다.

셋째, 內政의 핵심인 경제분야와 대외정책의 역할 분담을 도모하였다. 예컨대, 오부치 총리는 경제는 미야자와 大藏相에게 일임하는 대신, 외교는 자신이 外相 재직시 외무차관을 맡았던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를 外相에 기용함으로써 親政體制를 구축을 꾀한 것이다.

넷째, 參議院의 구도가 與小野大이므로, 오부치 내각의 집권기반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편이었다.

이와 같은 오부치 내각은 하시모토 내각의 유산인 국정개혁작업의 마무리, 불황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 미·일 신방위협력지침과 관련된 유사법제의 정비 등 많은 주요한 국정과제를 안고 출범하게 되었지만, 국민들로부터는 그다지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즉 오부치 총리의 리더십 결여와 그에 따른 국민들의 신뢰감 저하, 불황의 장기화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등으로 인하여 오부치 내각은 역대 정권중 세번째로 낮은 수준인 25~33%대의 저조한 지지율 속에 출범하였다.⁵¹⁾ 그리고 그와 같은 국민들의 오부치 내각에 대한 낮은 지지율은

50) 戰前에는 총리를 역임한 다카하시(高橋)가 1927년 4월에 다나카(田中) 내각의 大藏相에 취임한 예가 있다.

좀처럼 상승하지 않았고, 오히려 집권 3개월이 경과한 동년 11월경에는 '정권 위기설'의 유포와 함께 16~24%대로 더욱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2) 국정 주도력 강화를 위한 정계개편과 보수 대연합

- '自民·自由·公明黨'聯政의 출범 -

오부치 총리는 낮은 국민 지지도, 參議院 與小野大에 따른 집권기반의 구조적 취약성 등으로 인하여 국정운영의 주도력을 장악하지 못한 채, 야당의 대역공세에 밀리기만 하였다. 게다가 오부치 정권은 '短命 약체 정권', '11월 위기설'의 유포와 더불어 가중되는 정치적 어려움을 겪어야 하였다.

따라서 집권 自民黨은 국정운영의 주도력을 회복하고 이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부심하다가, 舊 '公明黨'계 세력이 중도노선 표방과 더불어 통합되어 1998년 11월 7일 원내 제3세력인 '公明黨'으로 등장하게 되자,⁵²⁾ 정책성향이 유사한 公明黨 및 自由黨과의 정책연대 즉

51) 1998년 8월 2일자 「讀賣新聞」의 조사 발표에 따르면 오부치 내각의 지지율은 33.15%였는데, 역대 내각 발족 직후의 지지율로서는 우노 내각의 22.8%, 후쿠다 내각의 27.3%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이다. 또 동년 8월 3일자 「朝日新聞」의 조사 발표에 따르면, 오부치 내각의 지지율은 32%인데 이 역시 우노 내각 및 후쿠다 내각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지지율이다. 그리고 동년 8월 4일자 「每日新聞」의 조사 발표에 따르면, 오부치 내각의 지지율은 22% 지지율의 우노 내각에 이어 두 번째로 저조한 25%이다.

52) 公明黨은 1993년 8월에 호소가와 非自民 연립정권에 참여한 후 新生·民社黨 등과 함께 1994년 12월에 통합 야당인 新進黨에 합당함으로써 해체되었다. 그러나 舊公明黨계는 당 해체 이후에도 지방조직을 '公明'으로 존속시키는 등 명백을 유지하여 왔는데, 新進黨이 계파간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6개의 정파로 분열하게 되자 衆議院은 新黨平和로, 參議院은 黎明클럽(公明으로 통합됨)으로 각각 독립되어 분당하였다. 그런데 創價學會와 지방조직을 중심으로 세력 단일화 요구가 분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8년 6월 29일 '新黨 準備委員會'가 결성되고, '新黨 準備委員會'는 동년 10월 12일 '新黨平和'가 '公明'에 합류하는 형식으로 새로운 公明黨을 재결정할 것을 결정하였

‘自民·自由·公明黨 3黨 連帶’를 모색하게 되었다.

그러나 公明黨이 自民黨의 ‘自民·自由·公明黨 3黨 連帶’ 제안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표명함에 따라,⁵³⁾ 오부치 정권은 오자와 이치로가 이끄는 自由黨과 연립정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自民黨과 自由黨간의 정책합의 즉 각료수 삭감(20명→18명), 유엔 평화활동 적극 참여 등의 정책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自民·自由黨 聯政’이 1999년 1월 14일 출범하게 되었다. 즉 전체 각료수가 20명에서 18명으로 감소되고, 自由黨의 노다 다케시(野田毅) 간사장이 自治相으로 입각하는 自民·自由黨 연립내각이 발족한 것이다.

이와 같은 ‘自民·自由黨 聯政’의 실현을 계기로 오부치 정권은 ① 自由黨과의 聯政에 따른 원내기반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고, 아울러 ② ‘自民·自由黨 聯政’을 주장해 왔던 가자야마 前 관방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비주류파의 지지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③ 公明黨과도 사안별로 정책연대를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보다 안정된 집권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오부치 총리는 自民·自由黨 聯政 및 公明黨과의 정책연대를 통하여 주요 현안들을 원만하게 처리하면서 국정 주도권을 장악해 갔다. 즉 1999년 3월 17일에는 ‘99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였고, 5월 24일에는 마·일 신 「방위협력지침」과 관련된 3개의 법안을 성립시켰으며, 7월 8일에는 「政府組織 改編法」 및 「地方分權 整備法」을 성립시켰다.

이와 같은 오부치 총리의 정국 주도권 장악과 그에 따른 국정운영은

다. 이에 ‘新黨平和’와 ‘公明’이 동년 11월 7일 ‘公明黨’ 합당대회를 개최하고 집행부 및 기본정책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公明黨은 당 해체 3년 10개월만에 국회의원 65명(衆議員 42, 參議員 23) 규모의 원내 제3세력으로 부활하게 된 것이다.

53) 公明黨은 自民黨의 ‘自·自·公 連帶’ 제안에 대하여 3당 연대에는 참여하지 않고 일단 自民黨과 사안별로 협력하는 ‘부분연합’노선의 추구를 표명하였다.

내각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계속 상승되도록 하였다. 오부치 보수 연립 내각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自民·自由黨 聯政의 출범 이후 상승세로 반전되어 계속 올라가다가 1999년 5월부터 40%를 상회하게 되었다.⁵⁴⁾

그러나 自民·自由黨 聯政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與小野大(여 116, 야 136)의 參議院 구도는 타파되지 않았으므로, 오부치 총리는 정권 기반의 구조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위적 정계개편 즉 公明黨의 여권 편입을 재차 강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오부치 총리는 1999년 6월 28일에 公明黨과의 聯政수립 의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면서 정책협약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였고, 동년 7월 7일에는 聯政 파트너인 오자와 이치로 自由黨 당수로부터 公明黨의 聯政 참여에 대한 양해를 구한 뒤 公明黨에게 '自民·自由·公明 3黨 聯政' 참가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오부치 총리의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인 '自民·自由·公明 3黨 聯政'수립 제의에 대해 公明黨의 간자키(神崎武法) 대표 등 집행부도 '대안 없는 야당'의 이미지를 벗고 '정책 실현 정당'으로 거듭난다는 판단 아래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태도를 표명하였다. 즉 동년 7월 19일의 公明黨 중앙간부회의에서는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합의형 정치가 필요한 만큼 정권에 참여하여 연립정권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운동방침안을 채택하였고,⁵⁵⁾ 나아가 7월 24일의 公明黨 임시 당대회에서는 聯政 참여 방침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이로써 自民·自由·公明 3黨은 聯政 수립을 위해 <표 4>와 같은 3당의 입장 차이를 본격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리고 동년 9월 21일 오부치 게이조의 자민당 총재 재선과 더불어

54) 1999년 7월 10~11일 『毎日新聞』은 오부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했는데 국민지지율은 43%였다. 『毎日新聞』, 1999. 7. 13.

55) 『朝日新聞』 1999. 7. 20; 『毎日新聞』, 1999. 7. 20.

어 ‘自民·自由·公明 3黨 聯政’은 가속적으로 추진되어 10월 4일 3黨간의 정책합의가 <표 5>와 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동년 10월 5일 ‘自民·自由·公明 3黨 聯政’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自民·自由·公明 3黨 聯政’ 新 내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自民·自由·公明 3黨 연합내각의 18명 각료에는 自民黨 15명, 自由·公明黨 각 1명, 민간인 1명이 인선되었다. 自民黨내 파벌 현황은 <표 6>과 같은데, 파벌 안배로는 오부치派, 가토派, 모리派, 에도·가메이派에 각각 3명씩, 야마사키派, 舊고모토派, 고노그룹에 각각 1명씩 배분되었다. 즉 파벌간 각료 안배를 통하여 學黨 협력체제의 구축을 도모하면서도 3당 聯政에 반대한 ‘가토 고이치’나 ‘야마자키 다쿠’가 추천한 인사는 완전히 배제되었다.⁵⁶⁾ 또 自由黨 몫으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가 運輸相 및 北海島 장관으로 기용되었고, 公明黨 몫으로 츠즈키 쿠니히로(續訓弘)가 總務廳 장관에 기용되었다.

둘째, 미야자와 大藏相, 사카이야 經濟企劃廳 長官 등 경제부처 장관들을 유임시킴으로써 ‘경제희생 내각’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셋째, 오부치派로서 다케시다 노보루(竹下登) 前 총리의 측근이자 聯政파트너인 自由·公明黨과 유대관계가 깊은 아오키·미키오(青木幹雄)를 관방 장관으로 기용하였다. 즉 오부치 총리는 ‘黨-모리’, ‘내각-아오키’ 중심체제를 구축한 것이다.⁵⁷⁾

넷째, 고노 요헤이 前 자민당 총재가 外相으로 기용되었는데, 이는 오부치 총리가 경제는 미야자와 大藏相, 외교는 고노 外相에게 일임

56) 가토派의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大藏相, 니와 유야(丹羽雄哉) 厚生相, 가와라 츠토무(瓦力) 방위청 장관은 파벌영수인 가토 고이치의 추천과는 무관하며 경륜, 전문성 등이 높이 평가되어 기용되었다. 또 야마자키派의 후카야 通産相도 당 총재선거에서 오부치를 지지하며 야마자키 다쿠의 출마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57) 오부치 총리는 개각에 앞서 10월 1일 단행된 黨인사에서 9월의 총재선거시 자신을 지지해 준 모리派의 領袖 모리 요시로를 간사장에 유임시켰다.

함으로써 親政體制 및 국정 주도권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표 4> 自民·自由·公明 3黨의 立場 差異

구 분	自民黨	自由黨	公明黨
衆議院 비례구 정원감축	衆議院 비례구 정원을 감축을 自·自·公 3黨 협의로 금년 가을 임시의국회에 초반에 처리	정원 50명 감축 법안을 금년 가을 임시국회 초반에 처리	중선거구제도(정원 3명, 150개 선거구) 부활로 정원을 50명 감축
看病 보호제도	사회보험료 방식으로 2000년 4월부터 실시. 보험료의 市町村 격차 및 저소득층의 부담 경감을 검토	2000년 4월 실시하되, 향후 전액 소비세로 충당하는 稅方式으로 이행	2000년 4월 실시. 在宅 看病은 보험료 방식으로, 施設 看病은 세금으로 충당
연금제도	기초연금은 재정방식 등을 검토. 2004년까지 財源을 확보하고 국고부담비율을 현재의 1/3에서 1/2로 인상	기초연금은 향후 소비세로 충당하는 稅方式으로 이행	기초연금의 사회보험료방식을 유지하고 국고 부담율을 1/2로 인상
선박검사	주변사태에 한해 UN 결의를 조건으로 선박검사를 인정. 경고사격은 불허	주변사태시 UN결의가 없어도 선박검사를 인정. UN결의가 있는 경우 공해 상 경고사격을 용인	주변사태에 한해 UN 결의를 조건으로 선박검사를 허용. 경고사격 불허

<출처> 「日本經濟新聞」, 1999. 8. 14.

<표 5> 自民·自由·公明 3黨의 주요 정책방안의 사항

교육	「교육개혁 국민회의」(가칭) 설치
안전보장	자위대의 UN 평화유지군(PKF) 참가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정비
사회보장	연금제도 재원은 당면 보험료로 조달하는 현행 사회보험 방식을 유지하되 장래 소비세로 충당하는 稅 방식으로 전환
정치개혁	衆議院 정원(소선거구 300명, 비례대표 200명)을 50명 삭감하되 먼저 차기 임시국회에서 비례구 정원 20명을 삭감하고 이후 소선거구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30명을 삭감

<출처> 「朝日新聞」, 1999. 10. 5, 참조하여 작성

<표 6> 自民黨내 파벌 현황(1999년 10월 시점)

파 별	세력(명)	파 별	세력(명)
오부치派	93	가토派	71
에토·가메이派	63	모리派	63
야마자키派	31	구고모토派	17
고노그룹	16	無파벌	17

이상과 같은 '自民·自由·公明 3黨 聯政'의 新 내각이 출범하게 됨에 따라, 오부치 정권은 參議院 여소야대의 구도를 극복하게 되었다. 현재 일본 정당정치의 구도는 <표 7>과 같은데, 自民·自由·公明 3黨의 聯立政權은 전후 일본정치사에서 최초로 衆議院 70%(348/500석), 參議院 50%(141/252석)이상을 장악한 거대정권이다.

그러나 自民·自由·公明 3黨 聯立政權의 출범에 대해 일본 국민들은 종교단체인 創價學會를 지지모체로 하는 公明黨을 연정에 편입시킨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나타내었다.⁵⁸⁾ 따라서 自民·自由·公明 3黨 聯立政權의 新 내각에 대한 지지율 그 자체는 역대 정권의 집권 1-2년 후 개각을 통한 新 내각 출범시 지지율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1999년 1월 自民·自由黨 聯立政權의 출범 이후 계속 상승세를 보이던 지지율이 하락세로 반전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⁵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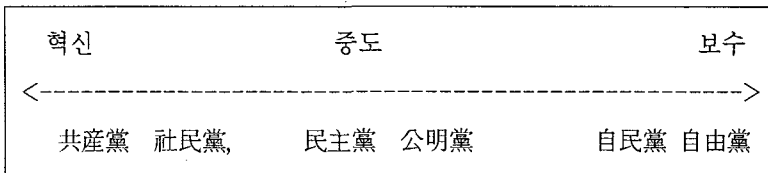
58) <3黨 聯政에 대한 평가>

구 분	긍정적인 견해	부정적인 견해	무응답 및 기타
「共同通信」(10. 7)	12%	39%	49%
「朝日新聞」(10. 11)	29%	45%	26%
「産經新聞」(10. 11)	28%	62.8%	9.2%

59) 1999년 10월 7일 발표된 「共同通信」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47.1%로 前回 조사시(동년 7월 발표, 57%)보다 10% 하락하였고, 동년 10월 11일에 발표된

요컨대, 自民·自由·公明 3黨 연립정권의 장래는 ① 주요 정책에 대한 3당간의 정책조율과 불협화, ② 오부치 총리의 리더십과 정책추진력, ③ 自由黨의 위상 및 입지 약화에 따른 自民·自由黨간의 합당문제, ④ 2000년 총선 결과 등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⁶⁰⁾

<표 7> 일본의 주요 정당구도



(3) 오부치 정권의 '21세기 대비 국가체제 정비'

參議院 여소야대에 따른 오부치 정권의 취약한 집권기반, '평범한 인물' 오부치 총리의 리더십 부재 등으로 인하여 오부치 내각은 국정 개혁 작업의 추진은 커녕 단명으로 끝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오부치 총리와 내각은 '21세기 대비 국가체제 정비'를 위하여 1998년 6월 23일 '政府組織 改革 推進本部'(본부장: 오부치 총리)를 설치하고 하시모토 내각에서 착수하였던 행정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하였다. 아울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부치 총리는 '自民·自由黨 聯政'의 수립 및 公明黨과의 정책연대를 추구하여 국가체제 정비 작업을 추진시킬 수 있는 집권기반을 강화하였다.

「朝日新聞」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46%로 前回 조사시(동년 9월 발표, 51%)보다 5% 하락하였다.

60) 일본국민들이 3黨 聯立政權에 기대하는 정책으로는 ① 경기대책과 고용확보(59%), ② 연금 등 사회보장정책(44%), ③ 세제문제(23%), (4) 유사입법 등 안보정책과 헌법개정 문제(10%) 順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집권기반을 바탕으로 오부치 총리는 1999년 5월 24일 마·일 신 「방위협력지침」 관련 3개의 법안 즉 「주변사태법」, 「자위대법 개정안」, 「마·일 물품 역무 상호제공협정(ACSA) 개정안」을 성립시켰고 (구체적인 내용은 III장에서 상술), 동년 7월 8일에는 행정개혁 관련 2개의 법안 즉 「政府組織 改編法」 및 「地方分權 整備法」을 성립시켰으며(<표 7>, <표 8> 참조), 동년 7월 9일에는 히노마루·기미가요를 국가·국가로 공식화하는 「國旗·國歌法」을 성립시켰다. 또 동년 7월 29일에는 「憲法調査會⁶¹⁾」를 설치하자는 「改憲推進聯盟⁶²⁾」의 「國會法改正案」이 가결되도록 하여 2000년 1월부터는 衆·參 兩院에서 개헌논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오부치 정권은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회의 정책심의 및 입법능력을 제고시키는 개혁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일본 국회는 국회개혁의 노력의 일환으로 1999년 7월 26일 「총리·야당 당수간 국회토론 정례화」, 「정부위원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심의 활성화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로써 2000년 1월 정기국회부터 衆·參議院 합동심의회 즉 「國家 基本政策 審議會」를 국회에 신설하게 됨에 따라 ① 총리와 야당 당수는 매주 1회 정례적으로 국정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되었고, 아울러 ② 종래 총리가 국회에 출석하여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모두 듣고 난 뒤, 일방적으로 일괄 답변함에 따라 실질적인 정책 공방이 이루어지 못하는 폐단을 시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관료가 각료를 대신하여 국회에서 답변하는 제도인 「政府委員制度」가 1999년 정기국회

61) 衆·參議院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헌법조사회」는 의안 제출권이 없는 5년 기간의 한시적 기구이다(衆議院 의원 50명, 參議院 의원 45명).

62) 1997년 5월 共產黨, 社民黨을 제외한 초당파 의원(衆·參議員 366명)으로 결성된 「改憲推進議聯」은 개헌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이다.

(1. 19~8. 13)를 끝으로 폐지됨에 따라 1999년 가을 임시국회부터는 각료와 정무차관이 직접 답변에 나서게 되었다.⁶³⁾ 이는 직접적으로는 책임과 전문성을 겸비한 국회답변을 위한 것이고 간접적으로는 '관료 주도의 정책-정치'를 '정치가 주도의 정책-정치'로 전환함과 더불어 정치가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2001년 1월부터 「정부조직 개편법」이 시행되면, 현행 政務次官은 副大臣과 政務官으로 대체되므로 副大臣과 政務官이 국회 답변을 하게 되는 것이다.⁶⁴⁾

또 오부치 총리는 21세기에 대비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1999년 5월에 총리의 사적 자문기관인 「21세기 일본의 구상」 간담회」를 발족시켰다. 「21세기 일본의 구상」 간담회는 다섯 개의 분과회 즉 '제1분과회 「세계에 통용되는 일본」', '제2분과회 「윤택함과 활력」', '제3분과회 「안심되고 정감 있는 생활」', '제4분과회 「아름다운 국토와 안전한 사회」', '제5분과회 「일본인의 미래」'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년 8월 6~7일에 '새로운 세기의 국가상 모색'을 위하여 합숙토론을 벌였다. '새로운 세기의 국가상 모색'에 대한 각 분과별 합숙토론에서는 역사적인 발본적 개혁이 불가결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주요 논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⁶⁵⁾

63) 단, 전문·기술적 사안에 대해서는 관료가 정부 참고인으로서 답변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64) 副大臣은 각료와 사무차관의 중간지위로서 3·4선 경력의 의원중에서 임명되며, 省廳의 정책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다. 그리고 政務官은 초·재선의 소장의원들 가운데 충원되며, 각료가 지시한 특정 프로젝트를 담당한다.

65) 오부치 총리도 이 합숙토론에 참가하였다.

<표 8> 「정부조직 개편법」의 특징 및 주요 내용

특징	주요 내용
1.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조직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22개 중앙부처(1府 12省 9廳)를 13개 중앙부처(1府 12省廳)로 축소, - 각 부내 단위 부서는 부처당 10개국을 초과하지 못함, - 공무원 정원 2010년까지 25% 감원 ○정책업무의 구분과 「獨立行政法人」제도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기능을 정책기획업무와 집행업무로 구분하고, - 중앙부처는 기획업무만 담당, - 90개의 집행기관을 「독립행정법인」으로 개편, 정부조직에서 분리시킴
2. 총리의 국정주도권 및 내각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리의 국정주도권 및 정책조정 능력의 강화, 총리보좌기능의 대폭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內閣府」 설치, - 긴급사태시 총리가 각료회의를 거치지 않고도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내각부」내 「經濟財政諮問會議」(의장: 총리)를 신설하여, 총리가 예산편성을 포함한 경제·재정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경제관련 부처간 조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였음 ○「副大臣」제도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당 2명 정도의 副大臣을 기용케 함으로써 정치인들의 관료사회 진출을 확대 추구 - 현행 정무차관직은 副大臣 및 政務官으로 대체됨 ○「特命擔當大臣」직의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키나와 문제, 북방 4개섬 반환문제 등 매우 중요한 사안, 복수의 부처와 연관된 안건을 담당하는 「特命擔當大臣」직을 신설함으로써, 총리 보좌기능의 대폭 보강을 도모, - 特命擔當大臣 밑에는 副大臣(3명), 政務次官(3명) 및 事務次官(1명) 등을 둘 수 있음
3. 행정의 투명·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평가제도」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정책이나 실시중인 정책을 각 성청의 정책평가 전문부서나 총무성이 각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

<표 9> 「지방조직 분권법」의 특징 및 주요 내용

특 징	주 요 내 용
1.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p>○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종래의 '상하·주종'관계에서 '대등·협력'관계로 재조정한다는 원칙 아래, 중앙정부가 지휘·감독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시켜 온 '기관 위임사무'를 폐지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自治業務'와 중앙정부가 실시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法定 委託事務'로 재편 - 현재 '기관위임업무'는 광역단체인 都道府縣 업무의 80%, 기초단체인 市町村 업무의 40%를 차지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 확립	<p>○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地方債 발행을 종래의 허가제에서 2006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하였음</p> <p>○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세' 과세권도 현행 허가제에서 '事前 協議制'로 완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확립코자 하였음</p>
3.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 마련	<p>○ 권력 이양과정에서 중앙-지방정부간 분쟁발생시, 중립적 입장에서 중재·조정하는 제3자 기관 즉 「國家·地方 紛爭處理 委員會」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행정관여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심사·조정토록 하였음</p> <p>○ 동 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를 상대로 高等法院에 제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음</p>

Ⅲ.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와 대외정책의 변화

1. 정치변동과 대외정책노선의 변화

1990년 걸프전이 발발하여 미국주도의 다국적군이 결성될 때 일본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일본은 1973~74년의 제4차 중동전쟁시 제1차 석유위기가 일본경제에 미친 영향을 되새기면서 걸프전의 후유증이 일본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졌고 자위대 파병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정치'를 되풀이 하였다.

일본은 걸프전에 대해서 자원, 에너지 안전보장 차원에서 대응하려는 의도가 강하였고 미국 주도의 걸프전 수행에는 다국적군에 자위대를 파병하는 대신 130억 달러의 전쟁비용을 지불하였다. 그런데 일본은 130억 달러의 전쟁비용을 지불하고도 人的 공헌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하여 미국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비난은 일본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 증대론'이 대두되도록 하였다.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 증대론'은 정치변동과 정계개편의 과정속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는데, 무라야마 社會黨 위원장의 총리 취임과 더불어 집권정당이 된 社會黨은 현실노선으로 전환하여 1994년 7월 28일 중앙위원회에서 ① 자위대 合憲 인정, ② 히노마루 및 기미가요의 일본 국기 및 국가 인정, ③ 미·일 안보조약의 견지, ④ 원자력 발전소의 신설 및 증설 등을 黨論으로 결정하였고, 고노 요헤이 外相의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추진에 동조하였다. 또 정치변동기에 일본 정치의 핵심세력으로 등장한 쇼와세대의 신보수세력은 '리더십 부재의 정치'를 비판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증대를 통한 정치대국화를 추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예컨대 호소카와 모리히로는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증대와 관련하여 UN산하의 국제상설부대를 창설하고 일본국내에도 자위대와는 별개의 'UN평화협력대'를 조직할 것을 주창하였다. 즉 호소카와는 그의 저서 「日本新黨 責任있는 變革」(1993)에서 금전으로만 국제공헌을 하는 것을 비판하고 국제평화유지활동(PKO)에 본격적으로 참가할 것을 주장하면서 UN산하의 국제상설부대 및 UN평화협력대를 창설할 것을 제시한 것이다. 또 오자와 이치로는 그의 저서 「日本改造計劃」(1993)에서 국제국가 일본의 국제공헌을 생존전략으로 주장하였고 아울러 'UN 중시의 평화전략'과 '미일을 기축으로 하는 평화유지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오자와 이치로는 신국제질서의 구축에 적극적으로 參劃하는데 있어서 자위대가 핵심적인 수단이라는 인식아래에서 수동적인 전수방위전략에서 능동적인 평화창출전략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자위대를 재편성해야 하고 UN대기군을 창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⁶⁾ 이와 같은 오자와의 주장은 1995년 12월 新進黨 당수출마 때에도 나타났다. 즉 新進黨 당수에 출마한 오자와는 미·일안보장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미·일동맹관계를 강화할 것을 역설하였고 아울러 UN경찰부대를 창설하여 UN평화유지활동에 종사토록 하자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하시모토 류타로는 「일본의 비전」(VISION OF JAPAN)(1993)에서 '환경보전 선진국' 일본으로서의 국제공헌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로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대외정책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⁷⁾ 하시모토 류타로는 1995년 9월의 자민당 총재선거에서도 ① 미·일관계를

66) 小澤一郎, 「日本改造計劃」(東京: 講談社, 1993. 5).

67) 橋本龍太郎, 「VISION OF JAPAN」(東京: KKベストセラーズ, 1993. 11). 아시아·태평양 국가로서 이 지역에 적극적으로 공헌하여야 한다는 하시모토의 주장은 그의 또 다른 저서 「政權奪回論」(東京: 講談社, 1994. 4)에서 재차 강조되었다.

기축으로 하면서 아시아를 거점으로 하는 외교, ② UN의 PKO활동 참가 불가결, ③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진출 등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들은 신보수세력들의 대외정책노선을 대체로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대국주의(great power nationalism) 성향을 지닌 신보수세력의 대외정책노선은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공헌 및 역할 증대를 통하여 정치대국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0> 정치대국화 전략의 구도와 특징

제1차원: 글로벌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 중시 전략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추구 - UN의 평화활동 적극 참여 - UN의 예산 분담
제2차원: 아시아 태평양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강대국 추구 - 미-일안전보장체제의 발전에 따른 일본의 전략적 역할증대와 더불어 일본의 독자적 영역 확대 - '親美入亞' 전략
제3차원: 국내적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적 정비 - 총리의 리더십 및 내각의 위기관리 기능 강화 - 정보분석능력의 강화 ○법적 정비 - 유사법제의 정비 ○군사력의 질적 증강

신보수세력의 정치대국화 전략은 <표 9>와 같이 글로벌 차원, 아시아-태평양 차원, 국내적 차원에서 전개되는데, 이와 같은 정치대국화 전략은 동서냉전시대의 55년체제가 '통상국가 일본'을 '경제대국 일본'으로 발전시켰다면, 탈냉전시대의 7·18총선을 계기로 형성되는 새로운 체제는 '경제대국 일본'을 '정치대국 일본'으로 성장시키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2.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증대와 안보정책

탈냉전시대를 맞이하여 미·일 안전보장체제가 미국의 세계전략 및 아시아·태평양전략에 의하여 한층 발전되고, 미·일의 군사협력이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군사적 역할은 증대되게 되었다. 즉 '21세기의 정치대국'을 지향하는 일본은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발전에 따른 증대된 일본의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의 영향력 확대와 더불어 독자적 영역의 확보를 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확대된 군사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군사력의 질적 증강을 추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제도적·법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가.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확대·발전과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

(1) 미·일의 전략적 상호의존과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확대·발전

1970년대 후반 소련의 극동지역 군사력이 질·양의 양면에서 증강되고,⁶⁸⁾ 게다가 1979년 12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소련군의 군사적 개

68) 소련이 1978년부터 IRBM SS-20 및 델타급의 SSBN 잠수함, 1979년부터 백파이어 전폭기를 극동지역에 배치함에 따라, 일본열도는 극동소련의 거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사정권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일본으로서는 일본주변의 해상교통로의 안전확보 및 방공능력의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미국의 핵역지력에 신빙성을 높어야만 했다. 일본의 소련 군사력에 대한 인식을 보면 1979년도 「防衛白書」에서부터 소련의 군사력이 위협에 가까운 존재라는 인식을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1980년도 「防衛白書」부터는 소련의 군사력을 잠재적 위협의 중대로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와같은 대소 위협론의 인식은 1980년대의 「防衛白書」를 통하여 계속해서 나타났다. 즉 일본은 1980년대의 「防衛白書」를 통하여 소련은 극동방면에서 군사력을 量·質의 양면에서 모두 증강시키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안전

입으로 국제정세가 '신냉전 상황'으로 악화되자, 미·일 양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협력을 강화하였다. 즉 미·일 양국은 1978년 11월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제정하였고, 일본은 '미·일 운명공동체 노선'에 따른 일본의 Sea Lane 방위전략을 추진하였다.⁶⁹⁾ 이와 같은 소련에 대응하는 미·일 안전보장체제는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따라서 1989년 동유럽에서의 공산주의의 몰락이라는 지각변동에 이어 1991년 말 소련의 몰락으로 탈냉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일본 국내에서는 '냉전의 산물'인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무용론'과 '오키나와기지 철수 요구'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탈냉전시대를 맞이하여 미·일 양국은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강조하면서 확대·발전을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즉 탈냉전시대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은 고도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정치적·경제적 안정성은 높지만, 핵전력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력의 존재, 다수국가의 군사력의 증강, 한반도 긴장의 계속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요소가 잔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재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미·일의 이와 같은 전략적 인식은 1992년 1월의 '東京宣言'을 통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차원(regional level) 및 글로벌 차원(global level)에서의 미·일 동반자의 관계로 표명되었다.⁷⁰⁾

미국에 있어서 일본은 세계전략 및 아시아·태평양전략을 전개해 가

보장에 잠재적 위협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대소 위협론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하여 대소 위협론을 나타내지 않게 된 것은 1990년도 「防衛白書」부터이다.

69) 배정호 "국제환경의 변화와 일본의 방위전략 - 1980년대의 일본의 방위전략 -," 「한국정치학회보」, 제26집 1호(1992).

70) 부시 미국대통령은 1992년 1월 8일 미일정상회담을 가진 뒤 9일 발표된 「東京宣言」을 통하여 미·일간의 "세계적 동반자의 관계"를 수립할 것을 천명하였다.

는데 아주 주요한 동반자인데,⁷¹⁾ 일본의 전략적 존재가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은 미국이 세계전략 및 아시아-태평양전략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재정적 지원자이다. 일본은 UN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이면서도 미국 이외의 상임이사국보다도 더 많은 통상예산을 분담하고 있다. 즉 일본의 UN 통상예산 분담률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인 것이다.⁷²⁾ 또 일본의 주일미군 지원금을 보면, 1995년도에 45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였고 1995년 이후 5년 동안에는 약 250억 달러를 지원하였다고 한다.⁷³⁾

둘째,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전략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일본은 地戰略적으로 중앙거점이다. 따라서 주일미군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전략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략기조 보고서 1992」(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1992)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은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태평양지역의 동맹국이며 아울러 미국의 전진배치 안보전략의 주춧돌이다.

세째, 미국은 미·일동맹체제를 통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보다

71) 미국 국무부 윈스턴 로드 東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차관보는 “책임분담의 성숙된 균형에 바탕을 둔 글로벌차원의 동반자관계”를 형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Economist*, April 3, 1993, pp. 34~35.

72) UN 통상예산분담률

	국명	1995	1996	1997
1	미국	25.00%	25.00%	25.00%
2	일본	13.95%	15.4350%	15.65%
3	독일	8.94%	9.0425%	9.06%
4	프랑스	6.32%	6.4075%	6.42%
5	러시아	5.68%	4.4500%	4.27%
6	영국	5.27%	5.3150%	5.32%

<출처> 「外交靑書 1997」(東京: 大藏省印刷局, 1997), p. 371.

73) 일본은 주일미군 군인 및 군속의 인건비와 잠운영 유지비를 제외한 주둔비용을 사실상 전액 지원하고 있다.

깊이 연결되어 있다. 즉 미·일동맹체제는 미국이 아시아국가로서 보다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나아가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행동능력을 높여 주고 있다.⁷⁴⁾

네째, 미국이 세계전략 및 아시아·태평양전략차원에서 중국을 견제하여 봉쇄하거나 또는 포용할 경우에 일본은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적 파트너이다.

미국 역시 일본에게 있어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증대를 통하여 정치대국으로 성장하는데 미·일동맹체제를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즉 일본은 UN의 깃발아래 미국의 세계전략 및 아시아·태평양전략에 응하여 미국과의 책임분담을 이행하면서 아시아를 거점으로 삼아 정치대국으로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일의 전략적 상호의존은 미국 국방부가 1995년 2월에 발표한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 관한 미국의 안전보장전략」(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1995)⁷⁵⁾이나 동년 11월 일본이 발표한 「新防衛大綱」에서 그 중요함이 재차 강조되었고, 1996년 4월에 발표된 「미·일 안전보장공동선언: 21세기를 향한 동맹」(Japan-U.S. Joint Declaration on Security - Alliance for the 21st Century)⁷⁶⁾(이하 「미·일 신 안보공동선언」이라 약칭함)통하

74) 후나바시 요이치, “나이(NYE) 이니셔티브의 내막,” 「사상」 (1996년 여름호), p. 218.

75) U.S.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Washington, D.C. : Government Printing Office, Feb. 1995.

76) “Japan-U.S. Joint Declaration on Security - Alliance for the 21st Century”의 전문(全文)은 Mike M. Mochizuki, ed., *Toward A True Alliance*.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7)에 게재된 것을 참조.

여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확대발전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확대발전에 따른 미·일의 군사적 협력방안은 미·일 「방위협력지침」(Guidelines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 1978. 11)의 개정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2) 미·일 신 안보공동선언과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

(가) 미·일 신 안보공동선언과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일본국내에서 냉전의 산물인 미·일 안전보장체제가 분기점을 맞고 있는 가운데 1995년 9월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미군병사의 일본소녀 성폭행사건으로 인하여 反주일미군 여론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그와같은 反美 분위기를 진화시키면서 미·일 안전보장체제를 확고하게 再定義시켜야 하였다. 즉 1996년 4월 14~15일 페리(Perry) 미국 국방장관은 일본을 방문하여 하시모토 총리, 우스이 방위청 장관과 회담을 갖고 미·일 안전보장체제가 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의 기반임을 확인하였고,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996년 4월 17일 동경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안전보장체제가 탈냉전시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본틀이라고 규정하면서 1996년 4월 동경정상회담에서 미·일 신 안보공동선언을 채택, 발표하였다.

미·일 신 안보공동선언에서는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핵심적 요소인 주일미군에 대해서 일본국민의 지지와 이해가 불가결하다는 인식을 나타내면서 미·일 안전보장체제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을 위한 기초임을 재차 강조하였고, 아울러 미·일간의 정책조정 필요성과 더불어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1978년에 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작업은 미·일 신 안보 공동선언의 후속조치로서 시작된 것이다. 이는 걸프전과 북한 핵 개발문제의 대응에 미·일의 실질적 협력이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21세기의 새로운 정치·안보 환경에 적절하게 조정된 미·일의 전략적 협력 체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우기 새로운 안보공동선언인 미·일 신 안보공동선언을 통하여 구축되는 미·일 안전보장체제가 양국의 협력범위를 기존의 '필리핀 이북의 극동'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미·일 양국간에는 방위협력을 위한 투명하고도 효과적인 지침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일본자체 방위에 중점을 둔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주는 주변유사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으로 개정하려는 작업이 1996년 6월부터 착수되었다.

이와 같은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작업은 미·일 양국의 국익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⁷⁷⁾

미국은 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안보비용의 경감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책임 및 역할분담을 통하여 대중국 견제능력의 강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영향력을 확보하여 정치·경제·군사적 역할을 주도해 나갈 수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②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틀 속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본으로서는 ① 북한의 핵 미사일, 중국의 패권주의 추구 및 군사력 증대 등 주변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미국과의 안보 협력이 필요하고, ②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우려가 크므로 일본이 정치대국화를 지향하여 국제사회에서 군사적 역할의 증대를 추구하는 데 미·일 안보협력이라는 명분이 필요한 것이다.

77) 배정호, “미·일안전보장체제의 광역화에 따른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와 한반도 급변사태,” 『한국정치학회보』, 32집 1호 (1998, 봄).

(나)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의 주요 내용과 특징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제1차 중간보고안이 1996년 9월 19일, 제2차 중간보고안이 1997년 6월 8일, 최종보고안이 1997년 9월 23일 발표되었다. 따라서 제1차, 제2차, 최종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특징에 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A) 제1차 중간보고안

1996년 9월 19일 미국 국무성에서 '외무, 방위각료에 의한 안보협의회(2 + 2)'⁷⁸⁾가 개최되어 '미·일 방위협력 소위원회'가 작성한 방위협력지침 개정의 제1차 중간보고안을 승인하였다.

제1차 중간보고안은 미·일간의 주요한 연구협의사항을 ① 평시의 협력, ② 일본에 대한 무력침공시의 대처능력, ③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주변의 유사사태에 대한 협력이라는 세 가지 항목으로 대별하였다. 즉 현행 방위협력지침의 '극동'이라는 표현대신 '일본주변'이라는 용어를 채택함으로써 미·일의 협력범위가 확대되었음을 나타낸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78) 「미·일 방위협력 소위원회」(SDC)의 참가자

일본측	미국측
방위청 방위국장(공동의장) 외무성 북미국장(공동의장) 통합막료회의 대표	국방차관보(국제안전보장정책 담당, 공동의장) 국무차관보(동아시아 담당, 공동의장) 통합참모본부 태평양군의 대표

(B) 제2차 중간보고안

1997년 6월 7일 하와이의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미·일 방위협력 소위원회’는 방위협력지침 개정의 제2차 중간보고안⁷⁹⁾을 결정하고 발표하였다.

방위협력지침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역점을 둔 제2차 중간보고안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은 물론 일본주변지역에서의 유사에 대한 미·일 협력의 기본구상을 제시하였는데, 미·일 방위협력의 중점이 종래의 ‘일본 유사’ 및 ‘극동 유사’에서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주변 유사’로 이행한 것임을 명백하게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 공백상태에 있었던 일본주변지역의 유사시에 대비하여 미·일은 주변공해 및 그 상공에서 자위대의 미군에 대한 광범위한 협력사항을 6개 분야에 40개의 검토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제2차 중간 개정작업이 진행되는 도중, 자민당 ‘안보조사회’(회장 카와라 前 방위청 장관)는 자위대의 미군지원 분야를 <표 11>과 같이 구별하기도 하였다.

<표 11> 자민당 분류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 분야

현행 헌법상 지원 가능 영역 (White Zone)	遺棄기뢰제거, 일본방위를 위해 수집된 정보제공, 재외일본인 구출을 위한 일본 항공기내 미군 동승, 불시착 미군기 연료보급, 주일 미군기지 경비 등
애매한 영역 (Gray Zone)	미국 함정·항공기 호위, 전투지역 부근 보급, 정비·수송활동, 전투지역내 의료활동, 탄약보급·보관, 초계감시정찰활동에 기초한 정보제공 등
불가능한 영역 (Red Zone)	전투행동참가, 전투해역기뢰제거, 전투지역내 후방 지원

79) 防衛協力小委員會(1997. 6. 7), 「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の見直しに関する中間とりまとめ」, ホノルル.

그리고 일본정부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의 제2차 중간보고안에 대한 국회 논의과정에서(1997. 6.~10. 16) 일본 주변해역에서의 미군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C) 최종보고안: 미·일 新 「방위협력지침」

1997년 9월 23일 뉴욕에서 개최된 ‘미·일 안전보장협의 위원회’⁸⁰⁾는 방위협력지침의 개정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최종보고안 즉 미·일 新 「방위협력지침」은 평시의 협력,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감행될 경우의 대처행동, 일본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사태에 대한 대응시 협력, 효과적인 방위협력의 추진을 위한 향후 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⁸¹⁾ 이와 같은 新 「방위협력지침」의 특징은 제2차 중간보고안과 비교해 볼 때, 첫째,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일본주변지역 유사시의 범위’를 지리적 개념이 아닌 ‘사태의 성질’에 의해 파악되는 상황적 개념으로 규정한 점이고, 둘째, ‘선박 임검’에 대해 “UN결의에 따라 실시한다”는 단서를 붙였다는 점이며,⁸²⁾ 셋째, ‘비전투원 수송’문제는 미·일이 각기 자국민의 소개에 우선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되, 적절하

80) 「미·일 안전보장협의 위원회」(SCC) 참가자

일본측	미국측
외무대신, 방위청 장관 등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1990년 12월 26일 이전까지는 주일 미대사, 태평양사령관이 참가하였음)

81) 미·일 新 「방위협력지침」의 全文은 1997년 9월 24일 「朝日新聞」에 게재된 것을 참조.

82) 미·일 新 「방위협력지침」의 후속조치로 일본은 유사법제의 정비를 추구하고 있었는데, 1999년 5월 24일 최종적으로 확정된 “주변사태법”의 원안에 선박검사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UN 안보리결의의 포함’문제와 관련하여 自民·公明黨과 자유당간의 의견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아 원안에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현재 일본정부는 급변사태시 선박을 공해상에서 검문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중에 있다.

다고 판단되는 사태시에는 양국이 협력토록 조정, 미국측의 협력을 명시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제2차 중간보고안에서 제안되었던 6개 분야 40개 항목을 검토하여 [별첨 1]과 같은 '일본주변 유사시 협력 항목'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新 「방위협력지침」의 특징은 1978년에 제정된 舊 「방위협력지침」과 비교해 볼 때 <표 12>과 같이 대비되는 것이다.

<표 12> 新·舊 방위협력지침의 비교

상황	舊 지침(1978. 11)	新 지침(1997. 9)
평상시 (침략미연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은 자위를 위한 필요한 범위내에서 방위력을 보유하고 미군시설의 안정적 사용을 위해 노력 ○미국은 핵억지력을 보유함과 동시에 즉각 대응부대 전방 전개, 증원병력 보유 ○양국은 무력공격 대비, 작전·정보·후방지원분야 협력 태세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은 자위력을 유지, 미국은 핵억지력과 전방전개 병력유지 및 지원병력 보유 ○국제정세 정보교환 확대, 방위정책·군사태세 관련 협의 및 공동 훈련 강화, 미·일간 협력 메커니즘 구축 ○PKO 및 인도적 국제구원활동 협력
일본 유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은 한정적·소규모 침략을 자력 격퇴하고 자체역량으로 격퇴, 곤란시 미국의 협력으로 격퇴 ○자위대는 주로 일본의 영역 및 주변해역 방어, 미군은 자위대 작전 지원 및 기능 보완 ○자위대와 미군은 각기 지휘계통에 따라 행동 ○보급·수송·정비·시설제공 등 후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은 주도적으로 침략을 조기 배제하며 미국은 일본에 대해 적절히 협력(최초 단계부터) ○左同 ○자위대와 미군은 적시에 적절하게 각기 방위력 운용 ○左同 및 C4I시스템(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 향상 노력

상황	舊 지침(1978. 11)	新 지침(1997. 9)
일본 주변 유사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이외의 극동지역사태가 일본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미군에 대한 편의제공방법 공동연구를 추진 - 구체적 협력방안 미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방위범위: 극동→일본주변 지역 - 주변사태 개념에 대해서는 대만문제개입을 우려하는 중국측 반발을 고려, 지리적 개념이 아닌 상황에 근거(not geographic but situational)함을 명시 ○주변유사시 협력내용 - 군사정보 제공, 영해 및 일본 선박의 안전향해 등을 위한 공해상 기뢰 소해, UN결의에 따른 수상한 선박 임검 실시 등 작전협력 - 기지·시설 추가 제공, 민간공항·항만사용, 보급·수송·정비·의료·경비 등 후방지원 - 일본 영토내 또는 전투지역에서 벗어난 해역에서 의 조난 병사 수색·구난 - 분쟁시 양국이 각자 자국민 소개를 우선하고 사태에 따라 양국이 협력하여 대응
향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국 정부는 공동작전계획, 상호협력계획에 대해서 검토하고, 공통의 기준과 실시요령 등을 확립하기 위해, 「포괄적인 메카니즘」을 구축함. 양국 정부의 관계기관이 관여함. ○양국 정부는 긴급사태시의 활동에 관한 조정을 위하여 평시부터 「조정 메카니즘」을 구축해둠.

(3)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와 한반도 급변사태

미·일 新 방위협력지침의 가장 큰 특징은 ① 미·일 방위협력의 중점이 종래의 '일본 유사' 및 '극동 유사'에서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주변 유사'로 이행한 것과 ② '주변지역 유사시의 범위'를 지리적 개념이 아닌 '사태의 성질에 파악하는 개념'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미·일이 양국의 방위협력을 종래의 '옛 소련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서 '중국 위협'이나 '대만 유사' 그리고 '한반도 유사'⁸³⁾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상황에 따라 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를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상황에 따라 탄력성을 가지고 확대될 수 있으며, 아울러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표 11>의 '헌법상 지원 가능 영역'(White Zone)도 확대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주변 유사시 일본 자위대는 1980년대 1000海里 Sea Lane방위 범위보다 훨씬 확대된 영역에서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 그와 같이 확대된 영역에서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하여 일본은 미·일 양국 정부의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메카니즘'을 설치하여 '공동작전계획(일본 유사시)' 및 '상호협력계획(일본주변 유사시)'의 수립에 착수하였고, 아울러 긴급사태시의 활동에 관한 조정작업을 평상시부터 준비하기 위하여 미·일 '조정 메카니즘'을 구축·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급변사태시,⁸⁴⁾ 미사와(三澤), 요코스카(横須賀), 사

83) 일본의 자민당 가토 고이치 간사장은 1997년 7월 16일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작업이 북한을 염두에 둔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동아일보」, 1997. 7. 17.

세보(佐世保), 이와쿠니(岩國) 등의 주일 미군기지에 주둔해 있는 해공군이 한반도로 출동하고 아울러 오키나와(沖繩)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해병대가 한반도 상륙작전을 펼 때, 일본 자위대는 <별첨 1>에 제시되어 있는 40개의 항목에서 미군과 협력하며 미군의 작전을 후방에서 지원한다.⁸⁵⁾ 즉 한반도 긴급사태시, 일본 자위대는 정보교환을 비롯하여 북한에 출입하는 선박에 대하여 임검을 실시하고, 주일 미군기지에 대한 테러에 대비하여 경비를 강화하며, 요코스카, 사세보 등 미 해군기지의 항구에 북한이 기뢰를 부설하는 것에 대비하여 경계경비를 강화하는 활동 등을 전개하는 것이다. 아울러 오키나와 기지의 해병대의 한반도 상륙작전 등을 위하여 공해상의 기뢰 제거작업 등을 펼치는 것이다.⁸⁶⁾

최근 일본 정부는 북한의 게릴라 활동 및 생화학 무기 사용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다. 1999년 8월 18일 러시아 방문중에 있던 노르타(野宮) 방위청 장관은 북한의 게릴라 활동 및 생화학 무기 사용에 대응하기 위해 2000년 예산안에 관련비 약 50억엔(對게릴라 대

84) 일본의 내각안전보장실은 1996년 5월 총리의 지시를 받고 한반도 긴급사태시의 대응책으로서 ① 일본인 보호·구출, ② 대량난민대책, ③ 연안중요시설 경비, ④ 대미지원조치의 4분야에 36항목을 작성한 바 있다. 「産經新聞」, 1997. 1. 7. 그리고 일본의 전략문제연구소는 1997년 8월말 자민당 정책연구회에 제출한 「주변지역 대응책」에서 북한사태를 ① 현 체제존속, ② 체제붕괴, ③ 무력남침, ④ 평화통일 등으로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한반도 급변사태와 관련한 일본정부의 공식문건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은 계속해서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5) 마일 新「방위협력지침」의 제정 이후 마일 양국은 처음으로 제179회 마일 합동 군사훈련을 대규모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 훈련에 일본의 해상자위대 함선 120척, 항공기 80대, 병력 3만 4천명이 참가하고, 아울러 대미 지원항목 가운데 정보제공과 해상자위대 보급함의 미 합정에 대한 해상 급유 등을 실시한다. 그리고 일본 항공자위대와 주일 미군간의 합동훈련에는 군산의 미 제8전투 항공단 F16 전투기 6기가 참여하였다고 한다. 「조선일보」, 1997. 11. 5 및 1997. 11. 7.

86) 일본은 33척의 소해정과 소해 헬리콥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뢰 제거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급이다.

책비 26억엔, 對生化학무기 대책비 24억엔)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는 ① 육상자위대에 '게릴라 대비 연구본부'의 신설, ② 게릴라전에 대비한 훈련시설의 정비, ③ 육상자위대에 생화학 무기에 대한 대응장비를 연구·개발하는 '부대의학실험대'의 신설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⁸⁷⁾ 이와 함께 북한 공작선의 해상침투에 대비하여 해상 경비체제를 강화하고 있다.⁸⁸⁾

또 일본 방위청은 1999년 5월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 관련 법안의 성립과 더불어 한반도 급변사태를 상정한 '주변사태'에 대비하여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즉 동년 8월 6~7일에는 제주도 남동부 東支那 해상에서 한국 해군과의 제1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였고, 이어 동년 10월 27일~11월 9일에는 한반도 급변사태를 상정한 대규모 기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해상훈련은 사전 도상훈련(9월 6~9일)와 더불어 함정 110척, P-3C 등 항공기 180대, 병력 3만 2,000명이 동원되는 대규모 실전훈련이었다. 그리고 2000년 2월로 예정된 '미·일 합동군사훈련'에서는 본격적인 '지휘소 연습'의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⁸⁹⁾ 이 '지휘소 연습'은 북한의 남침을 가상하고 이를 '주변사태'로 판단한 뒤 미군에 대한 병참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 공격과 무장 게릴라들이 원자력 발전소 등을 점거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다.⁹⁰⁾

요컨대 한반도 급변사태시, 일본 자위대의 주요 역할은 <표 1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① 일본 영해·공해상과 ② 국내에서 수행되는 것이다.

87) 「讀賣新聞」, 1999. 8. 19; 「東京新聞」, 1999. 8. 19.

88) 1999년 8월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 움직임을 보였을 때, 일본 정부는 미사일 추적·파괴 장치를 갖춘 이지스艦 4척을 동해기지에 집중 배치하여 순시활동을 증강하는 등 해상경비체제를 강화하였다.

89) 「讀賣新聞」, 1999. 11. 22.

90) '지휘소 연습'은 부대를 실제로 출동시키지 않고 컴퓨터망을 사용하는 도상훈련으로 '미일합동훈련'에서는 지난 1968년부터 모두 11회 실시되었다.

<표 13> 한반도 급변사태시 일본 자위대의 역할

일본 영해·공해상 역할	국내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검문·검색 ○ 기뢰 제거 ○ 게릴라 침투에 대비한 해상 경비 ○ 미군에 무기수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군에 인원·물자·연료 수송 ○ 미군의 공항·항만 이용 ○ 미군에 의료·통신 지원 ○ 미군 기지 등 주요시설의 경비 ○ 게릴라부대와 시가전 대비·대응

* 선박의 검문·검색을 위하여 현재 법안 마련 중에 있음

나. 일본의 군사적 활동의 증대와 군사력의 질적 증강

1970년대 말 국제환경이 신냉전 상황으로 전환되자 1980년대 일본의 군사력 정비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응하여 SEA LANE방위를 위한 해·공군력의 질적 증강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즉 해상방공체제를 지향하여 군사력을 정비하였다. 이는 ① SEA LANE 방위라는 일본의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고, 아울러 ② 섬나라라고 하는 전략 지정학적 견지에서 일본 본토에 대한 침략이 바다와 하늘을 경유하여 감행된다는 판단에 따라 적이 본토에 도착하기 전에 가능한 한 해상에서 격퇴한다는 전략적 목적에서 제공권·제해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해상방공체제를 지향하여 해·공군력의 증강에 역점을 두는 일본의 군사력 정비는 1990년대에도 지속되고 있다.

1990년대 전반의 군사력 정비계획인 1991 「中期防衛力整備計劃」(1991~95)은 국제환경의 일반적인 변화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고, 1980년대의 군사력 정비계획인 1981 「中期業務見積」이나 1986 「中期防衛力 整備計劃」에서 추진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해상방공체제를 지향하여 海·空의 방위력 증강에 역점을 둔다는 기본방침을 견지하면서 정보·지휘·통신능력의 충실에 중점을 둔 후방체제의 강화를 추구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1991 「中期 防衛力 整備計劃」에 나타난 군사력 정비의 방향성은 21세기를 향하여 1990년대에 전개될 일본 군사전략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인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무기의 하이테크와 더불어 첨단기술에 의한 군사력의 질적 증강을 추구한다는 점이었다.⁹¹⁾ 예컨대 다연장로켓시스템(MLRS) 및 C3I(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and Intelligence)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 최신 이지스(Aegis) 구축함의 건조, 공중경계관제기(AWACS)의 구입, FSX의 마일 공동개발 등은 일본이 재정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의 질적 증강을 꾀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일본이 군사력의 질적 증강을 추구하는 정책의 기초는 1995년 11월 28일의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平成 8년 이후 防衛計劃의 大綱」(이하 「新防衛大綱」이라고 약칭함)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1976년 防衛計劃의 大綱이 발표된 이후 19년만에 개정된 「新防衛大綱」은 1991 「中期 防衛力 整備計劃」의 검토, 총리의 사적 자문기관인 「防衛問題懇談會」의 보고서 「日本の 安全保障과 防衛力の 존재방식 - 21世紀를 향한 전망-」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국제환경을 맞이하여 일본이 추구해야 할 안보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기본 전략구도는 육·해·공의 자위대 병력을 20% 감축⁹²⁾하는 대신, 다양한 사태에 유효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① 합리화, ② 효율화, ③ 콤팩트화, ④ 기능의 충실과 질적 향상, ⑤ 탄력성 확보 등을 추구하여 군사력을 질적으로 증강시키고 아울러 정보·지

91) 배정호 “신국제질서기 일본의 정치대국화와 국가전략,” 이기택 외; 「전환기의 국제정치이론과 한반도」 (서울: 일신사, 1996).

92) 육상자위대의 경우는 사단과 여단의 개편과 더불어 18만명에서 16만명으로 삭감된다. 즉 육상자위대는 상설자위관 14만 5천명, 즉응예비자위관 1만 5천명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휘·통신능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新防衛大綱」에서 제시한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 일본은 24조 2,300억엔의 경비가 소요되는 1996 「中期 防衛力 整備計劃」(1996~2000년)을 추진하고 있다.⁹³⁾

1990년대의 군사력 정비계획 즉 1991 「中期 防衛力 整備計劃」과 1996 「中期 防衛力 整備計劃」의 추진으로 일본은 군사력의 상당한 질적 증강을 이루게 되었는데, 항모급 상륙함 ‘오스미’(8,000톤급), 조기경보기(E2C) 13대, 1척에 10억 달러 이상하는 최고의 전함 이지스 구축함을 4척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또 1996 「中期 防衛力 整備計劃」이 완료되는 2000년까지는 조기경계관제기(AWACS) 4대를 운용하게 되고,⁹⁴⁾ 2000년 3월부터는 최신예 지원전투기 F2 47기를 실전 배치하게 된다.⁹⁵⁾

이외에 일본은 1998년 8월의 북한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사건의 영향을 받아 첩보위성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로 하였고,⁹⁶⁾ ‘戰域 미사일 방어체제(TMD)’를 미국과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하였다.⁹⁷⁾ 즉 일본은 1995년 2월 미국측이 제의한 ‘戰域 미사일 방어체제(TMD)’의 공동연구에 참여한다는 기본방침을 결정한 데 이어, 1998

93) 1996 「中期防衛力整備計劃」의 예산은 1995년 12월 책정당시에는 25조 1,500억엔이었으나, 1997년 12월 10일에 열린 각의에서 9,200억엔 삭감되었다. 「内閣官房長官談話」(1997. 12. 19).

94) 「방위백서」 등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일본 방위청의 관련 관료들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은 1997년부터 AWACS를 시험비행을 시작하였음.

95) 1995년 12월 14일 일본 각료회의는 F2 130기의 국산 생산계획을 결정하였다.

96)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4~5년내에 군사시설의 정찰이 가능한 첩보위성 및 관련기술을 도입하여 방공체제(防空體制)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이를 일본 정부에 권고하였다. 따라서 1998년 11월 일본정부는 이를 토대로 각료회의에서 2002년까지 첩보위성 4기를 개발할 것을 결정하였다.

97) TMD 공동연구의 기간은 2년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각서의 유효기간이 5년간이므로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朝日新聞」, 1999. 8. 15.

년 9월에는 ‘미·일 안보협의회의’(2 + 2)에서 ‘海上 戰域 미사일 방어체제(NTWD)’ 분야의 기술을 개발할 것을 합의하였다.⁹⁸⁾

나아가 일본은 ‘차기 방위력 정비계획’ 기간(2001~2005)중에 전투기의 작전반경을 확대하기 위해 공중급유기 4기를 도입하고, UN 평화유지 활동 및 국제 긴급구조활동 등의 목적을 위해 항속거리 5,000~7,000km의 장거리 수송기를 자체 개발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또 비상사태시 미군에 대한 해상 보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3,500톤급 대형 수송함을 자체 건조하고,⁹⁹⁾ 해상 경비체제의 강화를 위하여 5,000톤급 호위함 4척을 10,000톤급으로 교체하며 아울러 2003년까지 신형 고속정 6척을 건조하여 동해기지에 배치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¹⁰⁰⁾

이와 같은 군사력의 증강은 ① 21세기를 향한 일본의 군사전략이 조기경계 및 전방대처를 위하여 전략지정확적 차원에서 해상방공체제의 강화와 더불어 미사일 방공체제의 구축을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울러 ②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확대·발전에 따른 일본의 역할 증대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역량을 갖추었음을 시사

98) NTWD는 이지스艦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여 대기권 밖에서 敵의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방어체제이다. TMD 유형에는 NTWD 이외에 ‘지상배치 戰域 高度 방어체제(THAAD)’, 대기권 미사일 요격(저층방어)체제로 ‘패트리어트 미사일·해상배치 방어체제(NAD)’ 등이 있다. 일본이 TMD에 참가하는 이유는 ① 북한 미사일뿐 아니라 중국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함이고, ② 핵무기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핵무기·생화학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99) 현재 일본은 수송함(LST) 8,900톤급 1척, 2,000톤급 4척, 소형 수송함(LSU) 590톤급 2척, 수송정(LSU) 420톤급 2척을 보유하고 있다.

100) 신형 고속정은 최고시속 44노트(80Km)의 200톤급으로서 對艦 유도 미사일, 76mm·127mm 소형 기관포 및 야간 적외선 투시경을 탑재하게 된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 신형 고속정을 3척 1개 편대로 마이루즈·사세보 기지에 배치시킴으로써 현재의 훗카이도 편대와 함께 3개 편대 운영체제를 갖출 계획인데, 2001년부터 2척씩 건조할 예정이다. 일본 방위청은 이를 위하여 1999년도부터 매년 방위예산에 190억엔을 배정하기로 하였다.

하는 것이며, 그리고 ③ 독자적 영역의 확대를 추구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의 군사적 역량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다. 확대된 군사활동의 지원과 법적·제도적 정비

일본은 미·일 안전보장체제가 광역화됨에 따라 확대된 군사적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법령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제도적 정비의 일환으로 먼저 1997년 1월 20일 종합정보기관인 ‘情報本部’를 발족시켰고, 1998년 12월 28일에는 ‘防衛情報會議’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1999년 1월 11일에는 ‘內閣 情報會議’를 발족시켰다. 통합막료회의 내에 설치된 ‘情報本部’(직원수 약 1,600명)는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방위청의 내국과 통합막료회의, 육·해·공 자위대의 정보부문 등 기존의 정보조직을 하나로 통합시킨 기관이고, ‘북한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사건’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에 따라 발족한 防衛廳의 ‘防衛情報會議’는 위기발생시 ‘情報本部’에서 수집·분석한 동북아전략정보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총리에게 자위대 출동여부를 신속하게 건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內閣 情報會議’는 현재 북한정세를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데 역점을 두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일본정부는 자위대의 ‘군사-정치’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법안 정비로서 지금까지 연구자재를 금기시해 왔던 유사법제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유사법제의 정비는 한반도나 극동유사시에 일본정부 및 자위대가 미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토지, 물자수송, 인력동원 등의 법제를 정비하는 것을 말하는 데, 1996년 10·20 총선에서 自民黨과 新進黨은 유사법제의 조속한 정비를 주장하였고 民主黨과

사키가케도 유사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특히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제2차 중간보고안이 발표된 직후, 1997년 7월에 발간된 「'97 防衛白書」에서는 일본 「防衛白書」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주변국가에 대한 자위대의 작전지침과 관련되는 긴급대응책을 언급하였고, 아울러 일본 주변유사에 대비한 유사법제의 정비를 서둘 것을 주장하였다.

미·일 新 「방위협력지침」이 실제상황에서 시행되려면 「자위대법」, 「유엔평화유지활동(PKO)법」, 「해상보안청법」, 「항만법」, 「항공법」 등 최소한 20여개의 법령을 개정하거나 제정해야 한다고 한다.¹⁰¹⁾ 따라서 1999년 4~5월경 自民·自由黨 연립정부는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과 관련된 3개의 법안을 성립시켰다. 즉 自民·自由黨 연립정부는 야당 公明黨과의 정책연대아래 ‘북한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사건’ 및 ‘북한 공작선의 영해 침투사건’을 계기로 일본내 대북한 위협인식이 상당히 제고되고 있는 분위기를 활용하여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 관련 3개 법안 즉 <표 14>와 같은 내용의 「주변사태법」, 「자위대법 개정안」, 「미·일 물품역무 상호제공 협정(ACSA) 개정안」을 4월 27일에 衆議院에서 통과시켰고, 5월 24일에는 參議院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이로써 일본 자위대는 한반도 급변사태시에 주일 미군의 병참지원 등 미·일 新 방위협력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40개의 항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미·일의 전략적 역할분담에 의한 대북한 역기능력의 강화이기도 하다.

101) 예컨대 자위대법의 경우는 제82조, 제83조, 제89조, 제93조, 제95조, 제99조, 제100조 6, 제100조 7, 제100조 8, 제100조 9가 개정될 것이다.

<표 14> 미·일 新 방위협력지침 관련 3개 법안의 주요 내용

法案명	法 案 主 要 内 容
周 邊 事 態 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치시 일본에 대한 직접 무력공격이 될 우려가 있는 등 주변지역에서 日本의 평화·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周邊事態)에 대응하여 일본이 실시하는 조치·절차 등을 규정해 美·日 안보조약의 효율적 운용에 기여(1조) ○총리는 주변사태시 後方地域支援, 搜索·救助 활동에 대해 종류·내역·범위 등을 명시하는 基本計劃을 마련(4조)하고 방위청장관은 同 계획에 의거 대응조치 실시(6·7·8조) ○총리는 自衛隊가 실시하는 後方地域支援, 수색·구조활동을 국회에 사전 승인받고 긴급시 사후승인 인정(5조) ○관계 행정기관장은 법령 및 기본계획에 의거, 지방공공단체장에게 필요한 협력을 요구(9조) ○주변사태 종료후 정부는 대응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10조)
自衛隊 改正案	<ul style="list-style-type: none"> ○有事時 외국거주 자국민 수송을 위해 政府專用機만 사용할 수 있는 규정(100조 8항)을 자위대 선박 및 선박에 탑재된 헬기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 ○자위대 수송활동시 自衛隊員 및 자국민 생명·신체보호를 위해 필요최소한의 무기사용이 가능하다는 조항 신설
美·日 ACSA 改正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시로 한정되었던 自衛隊와 美軍간 물품·서비스 상호제공 의무를 주변 사태시까지 확대 적용 ○무기·탄약의 공급은 제외

나아가, 일본정부는 '북한 공작선의 영해 침투사건'으로 드러난 영해·영토 방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상자위대에 '영역경비업무'를 새롭게 부여하는 방안과 함께 한반도 급변사태시 북한에 출입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검문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중에 있다.¹⁰²⁾ 아울러 自民·自由·公明 3黨의 聯立政權은 일본 有事時 자위대의 원활한 활동

102) 원래 선박검사조항은 「주변사태법」의 원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유엔안보리 결의 포함'문제와 관련하여 자민·공명당과 자유당간의 의견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음에 따라 원안에서 삭제되었다.

을 보장하는 '유사법제' 등 자위대 역할의 확대를 위한 법제 정비에 협력기로 합의하고,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별첨 1> 일본주변 유사시 협력대상이 되는 기능·분야 및 협력항목

기능·분야		협력항목의 예
미·일 양국 정부가 각자 주체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의 협력	구원활동 및 피난민 대응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지역으로 인원 및 보급품 수송 ○ 재해지역에서의 위생, 통신 및 수송 ○ 피난민 구호 및 수송활동, 피난민에 대한 응급 물자 지급
	수색·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영역 및 일본주변 해역에서의 수색·구난활동 및 이에 관한 정보교환
	비전투원을 대피시키기 위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교환, 비전투원과의 연락, 비전투원의 집합·수송 ○ 비전투원 수송용 미항공기·함선의 자위대시설 및 민간공항·항만 사용 ○ 비전투원의 일본입국시 통관, 출입국관리 및 검역 ○ 비전투원의 일본내 일시 숙박, 수송 및 위생에 관한 지원
	국제 평화안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에 입각하여 행하는 선박검사 및 선박검사에 관련된 활동 ○ 정보교환
미군의 활동에 대한 일본의 지원	시설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급 등을 목적으로 한 미항공기·선박의 자위대시설 및 민간공항·항만 사용 ○ 자위대시설 및 민간공항·항만에 있는 미국의 인원보호 및 물자하적에 필요한 장소 및 보관시설 확보 ○ 미항공기·선박사용을 위한 자위대시설 및 민간공항·항만 운용시간의 연장 ○ 미항공기의 자위대 비행장 사용 ○ 훈련·연습구역 제공 ○ 미군시설·구역내 사무소·숙박소 등 건설

기능·분야		협력항목의 예	
미군에 대한 일본의 지원	후방 지역 지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위대시설 및 민간공항·항만에서 미항공기·선박에 대한 물자(무기·탄약 제공) 및 연료·유지·유회유 제공 ○ 미군시설·구역에 대한 물자(무기·탄약 등은 제외) 및 연료·유지·유회유 제공
		수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물자 및 연료·유지·유회유를 일본국내에서 육상·해상·항공으로 수송 ○ 공해상의 미국선박에 대하여 인원, 물자, 연료·유지·유회유를 해상으로 수송 ○ 인원, 물자 및 연료·유지·유회유 수송을 위한 차량 사용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항공기·선박·차량의 수리·정비 ○ 수리부품 제공 ○ 정비용 기자재의 일시 제공
		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국내에 있는 상병자 치료 ○ 일본국내에 있는 상병자 수송 ○ 의약품 및 위생기구 제공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군시설·구역경비 ○ 미군시설·구역 주위의 해역 경계 감시 ○ 일본국내 수송경로 경비 ○ 정보교환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일양국 관계기관간의 통신을 위한 주파수(위성통신용 포함) 확보 및 기재 제공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선박출입항에 대한 지원 ○ 자위대시설 및 민간공항·항만에 있는 물자하적 ○ 미군시설·구역 오수처리, 급수, 급전 등 ○ 미군시설·구역 종업원의 일시 증원
운용 면서의 미·일 협력	경계감시	○ 정보교환	
	기뢰제거	○ 일본영역 및 일본주위의 공해 기뢰의 제거 및 기뢰 정보의 교환	
	해·공역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영역 및 일본주변해역의 교통량 증대에 대응한 해상운항 조정 ○ 일본영역 및 일본주변 공역에 있는 항공교통관제 및 공역 정비 	

3. 국교정상화와 대북한정책

국제사회에서의 양자간관계는 대체로 국내환경과 국제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전개되는데, 전후 북·일관계는 <표 15>에서 제시하는 5개 차원의 국내외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접근과 냉각'을 되풀이하면서 변천해 왔다.¹⁰³⁾

<표 15> 5개 차원의 국내외 환경과 전후 북·일관계

제1차원	북·일 양국의 국내환경 및 양자간 현안
제2차원	한반도와 일본: 남북한 관계, 한국의 대북한 정책, 한·일관계
제3차원	미·북관계
제4차원	동북아 지역의 국제환경
제5차원	글로벌(global) 수준의 국제환경

즉 냉전기의 북·일관계는 대체로 제5차원의 '동서대립'에 의한 긴장 또는 데탕트, 제2차원의 한국의 대북한정책 및 남북관계, 한·일관계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접근과 대화'를 시도하였지만, 제5차원의 동서 냉전구조에 의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국교정상화를 위한 관계개선까지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북·일관계의 개선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냉전체제가 붕괴하고 탈냉전시대가 도래하자, 북·일 양국은 국교정상화를 지향하여 전향적인 접근을 추구하게 되었다. 탈냉전기 북·일관계는 제5차원 및 제2차원의 영향 즉 동서대립구도의 붕괴에 따른 국제환경의 전환기적 변화와 한국의 전향적인 북방정책

103) 배정호, "탈냉전기 북·일관계의 변천과 일본의 대북한 '대화과 억지'정책," 『國際政治論叢』, 제39집 1호 (1999).

의 영향을 받아 국교정상화를 지향한 접촉을 전격적으로 추구하여 여덟 차례의 수교회담을 가지게 되었고, 제3차원의 미·북관계 등의 영향으로 수교회담이 좌절된 이후에는 '수면 아래' 또는 '수면 위'에서 접촉과 교섭을 벌이고 있다.¹⁰⁴⁾

이와 같은 탈냉전기 북·일관계의 변천에 관해서는 시기별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¹⁰⁵⁾

- 제1기 :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국교정상화를 지향한 북·일의 전향적 접근
- 제2기 : 정체상태의 북·일관계
- 제3기 : 국교정상화의 환경정비를 위한 북·일의 접근
- 제4기 : '갈등속의 접촉', '접촉속의 갈등' 상태의 북·일관계, 일본의 대북한 '대화과 억제'전략의 병용 추진

가. 탈냉전기 북·일관계의 변천

- (1) 제1기 :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국교정상화를 지향한 북·일의 전향적 접근

제5차원 즉 글로벌 수준의 국제환경은 1987년 12월의 미·소 수뇌회담에서 INF전폐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신냉전적 상황에서 대탕트적 상황으로 전환되었고, 1989년 동구 공산주의가 몰락함에 따라 알타체

104) 북·일관계가 냉각상태 또는 정체상태에 빠져 있을 때, 대체로 '수면 아래에서 교섭'이 전개되는데, 이는 북·일관계에 대한 연구를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기도 하다.

105) 배정호, 앞의 논문(1999).

제 붕괴의 조짐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1989년 12월의 몰타 미·소수뇌 회담을 계기로 냉전체제는 종언을 고하게 되었고, 1991년 소련의 해체와 더불어 전후 국제질서는 기본적 골격이 와해되었다. 요컨대 탈냉전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환경의 전환기적 변화 속에서 노태우대통령은 1988년의 '7·7 특별선언'을 통해 남북간의 '대결·불신·적대'관계를 극복하고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천명하였고, 아울러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반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¹⁰⁶⁾ 나아가 노태우정부는 한반도의 현상타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하여 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¹⁰⁷⁾

글로벌 수준의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전향적인 북방정책은 북한과 일본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일본으로 하여금 전후처리 외교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국교정상화를 이룩하도록 노력하게 하였고, 또 북한으로 하여금 생존전략의 차원에서 일본과의 국교수립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자극하였다.

따라서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직전 일본의 다케시다(竹下) 내각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제하였고, 나아가 일본의 가네마루(金丸信) 自民黨 前 부총재는 1990년 9월 24~28일에 自民黨과 社會黨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하였다.¹⁰⁸⁾ 한·소수교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북한을 방문한 가네마루는 관계개선을 위한 교섭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106) 「7·7특별선언」(서울: 국토통일원, 1990).

107) 노태우정부는 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990년 9월 30일에 한·소수교, 1992년 8월 24일에 한·중수교를 이룩하였다.

108) 일본의 자민당과 사회당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북한방문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田邊誠의 “日朝新時代の幕あげ, アジアの平和と南北統一のために.” 「月刊社會黨」(1990년 12월號) 참조.

이에 북한은 전격적으로 국교정상화를 제의하였고, 그 결과 일본의 自民黨, 社會黨과 북한의 노동당 사이에는 동년 9월 28일 '3당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으며, 북-일간에는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이 전개되었다.

일본의 대북한 접근은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이 전개되면서 정치권보다는 외무성을 통한 실무차원에서 이루어져 갔다. 북-일간의 국교정상화회담은 1990년 11월 중국의 베이징에서 세 차례에 걸친 예비회담을 가진 뒤 본 회담에 들어 갔다. 본회담은 1991년 1월 30~31일 제1차 회담을 평양에서 가진 뒤 제8차까지의 회담을 가졌다. 1992년 11월 5~6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8차 회담에서는 일본측이 '이해 조사문제'와 '핵문제'를 제기하자 북한은 추후일정을 결정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회담을 결렬시켰다.

제1차 회담에서 제8차 회담까지 일본-북한 양측은 <표 16>와 같은 주장을 펼치면서 대립하였다. 즉 일본과 북한간의 수교회담은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양측의 서로 다른 의견만 개진된 채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국교정상화를 위한 일본의 대북한 접근을 핵사찰 및 남북대화의 진전과 연계시키게 함으로써 수교회담의 틀에 제약을 가하고 아울러 일본의 대북한 접근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던 것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¹⁰⁹⁾

109) 당시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개선 및 국교정상화를 추구하는 전략적 목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하여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등을 정치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북한은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고 아울러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대한국 교섭능력을 제고시키는데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대미관계를 비롯한 대외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일본과의 관계개선 및 국교정상화를 경제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북한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획득할 수 있고,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일본기업들의 진출이나 자본 및 기술의 도입 등을 통한 경제

한국은 북·일의 급속한 접근을 견제하면서도 일본의 대북한 접근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3당 공동선언' 직후인 1990년 10월 18일에 서울을 방문한 가네마루 自民黨 前 부총재에게 '일본·북한 수교협상 5원칙'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었고, 미국도 일본의 대북한 접근을 핵사찰과 연계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제3차원의 미국 세계핵전략과 북·미갈등, 제1차원의 '이은혜 문제' 등으로 인하여 북·일 국교정상화 회담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제8회담 도중에 중단됨에 따라, 북·일관계는 소강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과 북한은 곧 수면 아래에서 국교정상화 교섭을 위한 비공개접촉을 베이징 등에서 가지면서 협상재개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갔다. 나아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설치 및 일본의 참여, 미·북간의 외교대표부 교환설치 합의 등이 이루어지면서 일본과 북한은 수교교섭의 재개를 위한 비공식·비공개적 접촉을 본격화하였다.

그와 같은 북·일간의 접촉은 일본이 대북한 국교정상화 교섭을 정당활동의 차원에서 정부차원의 대화로 정착시키면서 주로 일본 외무성의 동북아과장과 북한 외교부의 일본과장을 중심으로 하는 실무자 접촉으로 이루어졌는데, 일본정부는 국교정상화를 위한 비공식적 접촉을 전개하면서 아울러 한·미·일 공조체제의 틀 속에서 북한을 지원한 것이다.¹¹⁰⁾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110) 일본은 1995년에 북한에 쌀 50만톤을 지원하였고 1996년 6월에는 국제기구의 대북한 2차 지원때 6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표 16> 제1~8차 회담까지 일본·북한의 주장과 대립점

구 분	일 본	북 한
기본문제 (식민지, 관할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한때 불행한 과거가 있었다는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일·북간의 국교정상화는 실현화한다. ○ 북한이 남쪽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하는 북한과의 협상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사조약(1905), 정미조약(1907) 등은 일본에 의한 식민지배이다. 따라서 일본은 불법부당한 것이다. ○ 북한인민에게 일·북간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공적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 '조선'의 조선을 인정하는 것은 분단국가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피하되나, 이북의 사적체제를 인정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인정을 나타내므로 인정할 수 없다.
국제문제 (핵사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일·북간의 국교정상화에 커다란 장애요인이다. ○ 북한은 IAEA 핵안전협정을 준수하며,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실례를 보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무기 개발은 북한을 핵대국으로 만들며, 핵무기 보유는 북한을 핵대국으로 만들며, 핵무기 보유는 북한을 핵대국으로 만들며, 핵무기 보유는 북한을 핵대국으로 만든다. ○ 핵무기 보유는 북한을 핵대국으로 만들며, 핵무기 보유는 북한을 핵대국으로 만든다.
경제문제 (보상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과 북한은 교전상태가 아니므로 보상 배상할 수 없다. ○ 전후 45년 동안에 대한 배상 문제는 이미 구상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년 이전의 일본과 북한의 관계는 전쟁상태에 있었으므로 보상 배상할 수 없다. ○ 전후 45년 동안에 대한 배상 문제는 이미 구상하고 있다.

구 분	일 본	북 한
제문제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 재북 일본인배우자 고향방문)	○일본은 조총련 적대정책을 쓴일이 없다. 재일 조선인의 대우개선에 노력하겠다.	○재일 조선인의 국적을 인정하 고 외국인등록증의 상시휴대, 지문, 형벌을 폐지하라. ○민족교육의 권리를 인정지원 하라.

(2) 제2기: 정체상태의 북·일관계

1996년 9월에 발생한 '북한 잠수함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북·일관계는 다소 제2차원인 남북관계의 영향을 받았지만, 잠수함사건이 해결됨에 따라 북·일간의 주요 현안인 ① 일본의 대북한 쌀 지원문제, ② 과거청산을 위한 배상금문제,¹¹¹⁾ ③ 국교정상화를 위한 협상의 재개 등이 또 다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북·일간 주요 현안들의 재거론과 더불어 1997년 1월에 접어들면서 북한의 고위층 인사 상당수가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 시기에 북한의 노동당 비서 황장엽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다. 즉 황장엽은 북·일의 활발한 접촉이 재개되는 시점을 맞이하여 북·일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을 방문한 것이다 (1997. 1. 30~2. 11).

황장엽의 공식적인 방일목적은 "21세기와 인간의 지위에 관한 국제세미나"(「주체사상 국제연구소」 주최)에 참석하는 것이었지만, 自民黨의 야마자키 다쿠 정무조사회 회장 등을 비롯하여 정·관계의 주

111) 일본은 1996년 8월 28~29일 북경에서 개최된 북·일 실무자접촉에서 50억 달러의 청구권을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 50억 달러는 한국 정부가 지난 1965년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협정을 통해 받은 5억 달러를 현재 물가로 환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요 인사들을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그의 실질적인 방일목적은 식량지원, 수교교섭을 위한 협상의 재개, 김정일의 국가주석 취임식을 위한 조총련의 헌금문제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황장엽의 활동은 기대하였던 것과는 달리 지지부진하였다. 일본경제의 불경기로 인하여 조총련의 헌금문제에서도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게다가 북한 공작원에 의한 ‘일본 여자 중학생 요코다 메구미(横田めぐみ) 납치 의혹사건’의 발발로 인하여 대북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自民黨의 야마자키 다쿠(山崎拓) 정무조사사회장이거나 북한통인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간사장 등 정부·여당의 거물급 인사들은 만나지조차 못하였다.¹¹²⁾

즉 황장엽은 일본 정부·여당의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식량지원, 수교교섭의 재개 등을 위한 활동은 전혀 하지 못하고, 단지 社民黨의 이토 시게루(伊藤茂)간사장을 만나 국교정상화 협상재개를 촉구하는 정도의 활동밖에 못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황장엽은 12박 13일의 비교적 긴 체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① 식량문제, ② 국교정상화 재개문제, ③ 김정일의 국가주석 취임식을 위한 조총련 헌금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수행 못하고, 1997년 2월 11일 중국을 향하여 오후 2시 55분 차이나 에어라인(CA)편으로 나리다공항을 떠났다. 그리고 중국에 도착한 황장엽은 2월 12일 오전 베이징 주재 한국 총영사관을 찾아가 망명을 요청하였다.

황장엽의 망명신청의 소식을 접한 일본내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112) 북한 공작원이 납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여중생 요코다 메구미사건’이 일본 언론들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일본국내에서는 “자국민을 납치한 의혹이 있는 북한에 쌀지원이 웬 소리냐” 하는 여론이 비등해졌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일본의 한 TV 프로듀서가 북한 망명자들을 취재하다 아내 진술을 근거로 新進黨의 니시무라 신고 의원이 1997년 1월 하순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정치문제화시키면서 ‘제2의 이은혜사건’으로 부각되었다.

북한체제가 즉각 붕괴되지는 않겠지만, 황장엽의 망명으로 인하여 북한 내부는 심리적, 정치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아울러 황장엽 망명의 후유증은 남북관계를 긴장시키고 4자회담의 개최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북·일 수교교섭 등 일본의 대북한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았다. 황장엽의 망명사건후 일본은 대북한정책의 전개에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이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황장엽의 망명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남북관계 및 미·북관계는 비교적 순탄한 국면을 맞이하였지만,¹¹³⁾ 일본은 여전히 대북한정책의 전개에 소극적으로 임하였다.

특히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공작원 안명진(安明進)이 1997년 3월 12일 일본의 「산케이신문(産經新聞)」과의 인터뷰에 응하여 1988년 10월 평양근교에 있는 「김정일정치군사대학」에서 요코다 메구미를 목격한 상황 등을 증언함에 따라,¹¹⁴⁾ 일본정부는 대북한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악화, 야당 新進黨의 대북한정책 비판 등을 의식하여 대북한정책의 전개에서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였다.

그러므로 일본은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현안인 식량지원문제에서도 신중하게 응할 것임을 재표명하였다. 즉 1997년 2월 23일 일본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긴급 식량지원 계획에 동참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나아가 동년 3월

113) 황장엽의 망명사건 직후 남북관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북한의 보복테러가 우려되었다. 그러나 황장엽이 망명을 요청한지 닷새후인 2월 17일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비검자에 대해서는 갈테면 가라는 것이 공화국의 입장”이라고 발표하였다.

114) 1997년 3월 13일자 「産經新聞」에서는 요코다 메구미를 비롯한 일본인 납치·유괴사건을 1면 톱기사로 크게 보도하였다. 북한 공작원에 의한 일본인 납치·유괴사건은 요코다 메구미 사건을 포함하여 7건이 있다. 한편 북한은 1997년 3월 18일 평양방송을 통하여 「産經新聞」의 일본인 납치·유괴사건 보도에 대하여 “비열한 정치적 모략극”이라고 비난하였고 아울러 이 신문을 ‘정치적 시녀’, ‘쓰레기 언론’ 등으로 극렬히 비방하였다.

27일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족들이 연락모임을 결성한 것과 관련하여 “일본·북한 국교정상화 협상이 ‘이른해 문제’로 결렬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일본인 납치문제 때문에 식량지원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하였다.¹¹⁵⁾ 그리고 동년 4월 16일 이케다 유키히코 외상은 일본 국회의 한 위원회에서 북한에게 일본인 유괴의혹의 해명을 촉구하였음을 밝히는 한편, 대북한 식량지원문제에 관해서는 우방국들과 정보와 견해를 교환하면서 신중하게 대처해 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¹¹⁶⁾

이와 같은 일본의 대북한정책은 1997년 4월 9일의 북한선적의 화물선 ‘지성 2호’의 각성제 밀수사건과 4월 11일의 「산케이신문」과 NHK-TV의 노동 1호¹¹⁷⁾의 배치 보도로 한층 신중해졌다. 즉 북한 인민무력부의 공병국 제6국이 일본 관서지방의 폭력조직이 결탁하여 각성제 70kg(약 100억엔)을 미야기현(宮崎縣)의 호소시마(細島)항으로 밀반입을 시키려다 발각됨에 따라 일본의 북한에 대한 불신은 더욱 심화되었고, 또 작년 가을에 배치작업이 중단되었던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 1호가 동해안에 재배치되고 있다는 것을 보도함에 따라 더욱 신중해졌다.

요컨대, 북·일관계는 제1차원의 양자간 문제 즉 ① 북한 공작원에

115) 북한에 의해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일본인의 가족들은 ‘피해자 가족 연락회’를 결성한 뒤 1997년 3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정부에 신속한 진상규명과 함께 신병반환을 북한에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116) 이케다 외상은 대북한 식량지원문제에 관해서 “우방국들과의 정보와 견해를 교환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나갈지 심각히 고려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유엔의 호소에 따른 대북한 식량추가 지원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동참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YONHOP, 1997. 4. 17.

117) 노동 1호는 일본전역을 위협할 수 있는 사정거리 1천 3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데, 「産經新聞」과 NHK-TV는 그와 같은 미사일이 최근 이동식 발사대와 함께 3기 재배치되었고 게다가 곧 추가로 7기가 배치된다고 보도하였다.

의한 일본인 납치·유괴 의혹사건, ② 각성제 밀수사건, ③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 1호의 동해안배치 의혹사건 등으로 인하여 일본이 대북한정책의 전개에 신중을 기함에 따라 정체상태에 빠진 것이다.

(3) 제3기: 국교정상화의 환경정비를 위한 북·일의 접근

(가) 북·일간의 현안과 베이징 ‘심의관급 회담’

황장엽 사건후 북한 공작원에 의한 일본인 납치·유괴 의혹사건, 각성제 밀수사건,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 1호’의 동해안 배치 의혹사건 등으로 북·일관계가 정체상태에 빠지게 될 때에도 일본과 북한은 1996년 3월이래 비공식 과장급 실무회담을 계속 가졌다. 그 결과 1997년 8월 21~22일 베이징에서 ‘심의관급 회담’이 개최되었다.

베이징 ‘심의관급 회담’에서는 제1차원 즉 북·일 양자간의 주요 현안인 ① 일본인 납치사건, ② 대북한 식량지원 문제, ③ 각성제 밀수 의혹 사건, ④ 북송 일본인 처 방일문제, ⑤ 국교수교 본회담 조기 개최 등을 다루었다.

그 결과 북한이 부정하고 있는 일본인 납치·유괴 사건은 ‘계속 협의’ 형태로 뒤로 미루어졌지만, 대북한 식량지원 문제, 각성제 밀수 의혹사건, 북송 일본인 처 방일문제에 대해서는 기본 타결원칙이 마련되었고, 국교수교 본회담 조기 개최에 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나) 북한의 ‘북송 일본인 처 방일’과 일본의 ‘대북한 식량지원’ 결정

(A) 북송 일본인 처 방일

베이징 ‘심의관급 회담’의 합의에 따라 1997년 9월 9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북·일 적십자사 연락협의회에서는 북송 일본인 처 고향방문을 실현키로 합의하였다. 현재 일본 국적의 북송 일본인 처는 1,831명 정도 알려지고 있는데, 이 중 1진 15명이 1997년 11월 8일 일본에 도착하였다.

일본 언론들은 오랜 현안이었던 북송 일본인 처 전원의 일본방문 실현을 위한 첫발이 내디디졌다고 높이 평가하면서도, 1진 15명의 대부분은 북한당국에 의해 사상 및 행동을 검증받은 ‘모범생·우등생’이라고 꼬집었고, 나아가 북한이 북송 일본인 처 사업을 외교카드로 이용하거나 중단시킨다면 북·일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게이오대학(慶應大學)의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는 ‘북송 일본인 처’ 제1진의 방일은 북한측이 중단된 국교정상화 교섭의 재개 및 식량지원을 위하여 대일 외교카드 중 하나를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도쿄대학(東京大學)의 와다 하루키 교수는 제1진 명단이 일본의 대북한 식량지원이 결정되는 시점에 전달되었고 아울러 이들이 심한 감시하에 고향을 방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정치선전 도구에 불과하다고 비난하였다.

하지만, 북·일 양국 정부는 북송 일본인 처 제1진의 방일이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후속 제2진의 방일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1997년 12월에 북송 일본인 처의 고향 방문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2차 적십자사 연락협의회가 개최되었고, 그 결과 1998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제2진의 방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B) 일본의 대북한 식량지원

일본내 북한에 대한 여론이 나빠짐에 따라 대북한 식량지원에 냉

담한 반응을 보였던 일본정부는 앞서 언급한 1997년 8월의 베이징 심의관급 회담의 개최, 동년 9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북·일 적십자사 연락협의회의 북송 일본인 처 방일 합의 등을 계기로 대북한 식량지원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 9월 중순부터 일본의 정부여당이 2,700만 달러의 대북 식량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하였는데, 동년 10월 9일 일본 각료회의에서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2,700만 달러의 대북한 식량지원을 결정하였다. 즉 일본 각료회의에서는 WFP에 2,700만 달러를 기부하고, WFP가 이 자금으로 일본 재고미 6만 7,000톤을 구입하여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한 것이다.

(C) 연립 3여당 대표단의 방북과 국교정상화를 위한 환경 정비

‘연립 3여당 대표단의 방북문제’는 1997년 3월 이후 四民黨이 북한의 식량사정 및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연립여당 공동으로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대두되었다. 마침내 동년 7월 8일 四民黨의 주장에 응해 연립 3여당은 ‘공동 대표단 방북’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하시모토 총리가 바로 정당간 교류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함(7월 9일)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동년 8월에 들어 오면서 베이징 심의관급 회담의 개최, ‘북송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합의 등을 계기로 일본의 대북한 식량지원 문제가 결정되고, 북한은 이를 경직된 북·일관계가 다소 개선되기 시작하는 조짐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즉 북한은 북·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社民黨을 통해 自民黨측에 방북단 파견을 요청하였다.

북한의 요청으로 방북단 파견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개되어 1997년 10월 7일에 열린 自民·社民·사키카게 3당 간사장회의에서는 국교 수교 교섭의 재개를 위한 환경 정비 차원에서 연립 3당 합동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연립 3여당 간사장회의에서는 베이징 심의관급 회담, 북송 일본인 처 방일의 추진, 2,700만 달러의 대북 식량지원 결정 등으로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하고 방북 대표단 파견을 결정한 것이다.

자민당의 모리(森喜朗) 총무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방북 대표단은 1997년 11월 11일 북한을 방문하고 14일 귀국하였는데, 일본으로 출발하기 직전의 14일 평양 기자회견에서 모리 총단장은 “국교정상화를 위한 환경조성이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동년 11월 19일 오쿠라 가즈오(小倉和夫) 주일대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태도가 미래지향적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북·일 수교협상이 조속히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였다. 또 1998년 3월 28~31일 평양을 방문한 自民黨 방북단은 ‘요도호 납치범 일본송환’¹¹⁸⁾ 일본인 납치문제 등의 현안에 관하여 논의한 뒤, 북한측에 평양 연락사무소의 설치를 제안하였고, 4월 1일 도쿄(東京)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대북 식량지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¹¹⁹⁾

이처럼 1997년 중후반부터 1998년 3·4월까지의 북·일관계는 다소 진전되는 듯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북한이 북·일 수교협상의 재개에 매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고, 또 일본의 하시모토 정권이 한국·중국·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신뢰회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유라시아 외교’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므로, 북·일간에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

118) 요도호 납치사건은 1970년 일본 赤軍派 9명이 JAL기 요도호를 납치한 뒤, 여의도를 경유하여 북한으로 망명한 사건을 의미한다.

119) 「AERA」, 1999. 2. 15.

섭이 조만간에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하였다. 요컨대 북한측이 '일본인 납치의혹'에 대해서 "일반 행방불명자로서 조사하겠다"고 답변함에 따라, 북·일간의 남은 주요한 문제는 이제 '배상 및 보상'에 관한 문제만 남게 된 것이다.

(4) 제4기: '갈등속의 접촉', '접촉속의 갈등'상태의 북·일관계

북·일 수교협상은 모리 총단장의 평양 기자회견이나 오쿠라 주일대사의 언급처럼 조속히 재개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1998년 5·6월경에 들어오면서 북·일관계는 제1차원의 북한의 일본인 납치의혹 해명과 북송 일본인 처 제3진의 방일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면서 또 다시 냉각상태로 빠지기 시작하였다. 즉 1998년 6월 북한 적십자사가 담화를 통하여 납치의혹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일본정부에 통보함에 따라, 일본의 대북한 불신·반목은 한층 깊어지게 되었고, 아울러 북송 일본인 처 제3진의 방일이 중단되었다.

게다가 1998년 8월의 북한의 '광명성 1호' 즉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사건을 계기로 하여 최악의 상태로 악화되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국내에서 대북한 강경론이 확산됨에 따라, 일본정부는 식량지원 중단, 직항 전세기의 운항 중단,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협력의 일시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북한 당국 또한 일체의 대화장구를 폐쇄하였다. 즉 북·일관계는 거의 단절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처럼 극히 냉각된 북·일관계는 1999년 3월의 북한 공작선 영해 침투사건, 동년 6~8월의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재발사 움직임 등으로 인하여 지속되다가, 동년 9월 베를린 미·북 고위급회담 결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게 됨으로써 다소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동년 10월 18~20일에 북·일 양국 정부는 싱가포르에서 재차 외교 당국자간 접촉을 가졌고,¹²⁰⁾ 동년 11월 2일 일본정부는 북한-일본간의 전세기 운항 동결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또 무라야마 전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초당파 국회의원단은 동년 12월 1~3일에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측과 ①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 및 예비회담 연말 개최, ② 북·일 적십자사 및 정부수준에서 인도적 문제 협의, ③ 북·일간 교류와 왕래의 강화 등을 합의하였다.¹²¹⁾

이로써 북·일관계는 1992년 11월의 제8차 회담 이후 중단된 국교정상화 교섭의 재개와 더불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표 16>과 같은 입장차이 특히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하여 다소 진통을 겪었지만, 1999년 12월 19·21일의 적십자 회담 및 21일의 국교정상화 예비회담을 베이징에서 가지게 되었다.

요컨대, 북·일관계의 제4기에 접어들어 북한은 일본에 대하여 '접근과 협박전략'을 병용하였고,¹²²⁾ 일본은 북한에 대하여 대화와 억지전략을 동시에 전개하였으며, 북·일관계는 '갈등속의 접촉', '접촉속의 반목'을 되풀이 하면서 국교정상화를 지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120) 일본 외무성의 우메모토 가즈요시(梅本和義) 동북아 과장과 북한의 외교부 송일호 일본과장, 당 외교 당국자 등 3명이 참석하는 비공식회담을 가졌으나 별다른 진전은 나타내지 못했다.

121) 「동아일보」, 1999. 12. 3, 12. 4; 「朝日新聞」, 1999. 12. 1, 12. 2, 12. 3, 12. 4.

122) 북한은 대일본 '접근 및 대화와 협박전략'에 따라 1999년 8월 10일 「중앙통신」을 통하여 일본이 과거청산을 통해 관계개선을 희망해 올 경우 기꺼이 응하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대일본 3원칙'이 포함되어 있는 정부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북한이 대외관계에 관한 정부성명을 발표한 것은 1993년 NPT탈퇴 발표 성명 이래 처음인데, 이는 일본의 대북한 강경정책에 대응하려는 '대화 및 협박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북한의 대일본 3원칙 >

1. 일본은 북한에 대한 압살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2. 일본은 북한에 범한 과거의 죄에 대한 성실한 사죄와 철저한 보상을 해야 한다.
3. 일본이 끝까지 협의의 대결로 나온다면 북한도 상응하는 대응책을 선택할 것이다.

<표 17> '정부간 대화'에 임하는 북·일 양측의 입장

	일본	북조선
국교정상화 교섭 (지금까지의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일은 전쟁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보상을 할 수가 없음. ○ 청구권에 의거한 보상요구는 피해의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전국간의 배상형태와 재산권 청구형태를 적용해야 함. ○ 위안부, 강제연행, 일본제국주의 통치시대의 인적 피해, 전후의 피해와 손실도 보상해야 함.
미사일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미사일문제, 공작선의 침투 등은 심각한 위협이고, 「페리보고서」에 의거, 위협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고 주장. ○ 1999년 9월의 북·미회담에서는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고 표명.
인도적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건 10인의 일본인 납치의혹문제,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문제, 식량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인도적 문제로서 일괄적으로 취급함. ○ 일본: 인도적 문제에 관한 정부·적십자 회담을 국교정상화 교섭과 병행하여 전개할 것을 주장함. ○ 북한: 인도적 문제에 관한 정부·적십자 회담을 국교정상화 교섭 이전에 개최할 것을 주장함. 	

나. 일본의 대북한정책: '대화과 억지'정책의 병용

북·일관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냉전체제가 붕괴하고 탈냉전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한국의 북방정책이 전향적으로 전개하게 되자, 일본은 전후처리 외교차원에서 북·일수교를 지향한 대북한 '접근 및 대화'전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되었다. 정치권의 주도로 시작된 일본의 대북한 접근은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이 전개되면서 외무성을 통한 실무수준에서 추진되었다.

그와 같은 일본의 대북한 접근정책과 관련하여 일본의 전략적 의

도 및 이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북·일 국교정상화는 일본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전후처리 및 결산을 나타내는 것이다. 북·일수교가 이루어질 경우, 일본은 '20세기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를 '대외적 차원에서의 전후결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둘째, 북·일관계 및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질 경우, 일본은 북한지역에 아시아대륙 및 시베리아 진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는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증대로 귀결될 수 있고, 따라서 '21세기 정치대국 일본'을 위한 국가전략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대북한 접근은 제1차원의 북·일 양자간의 갈등보다 제3차원의 북·미 갈등 때문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즉 일본의 대북한 전략은 북·미관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자율성의 한계로 인하여 한·미·일 공조체제의 틀 속에서 현상유지 수준에서 전개되었다.

그리고 1998년 8월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사건을 계기로 하여 그와 같은 현상유지 수준의 대북한정책은 또 다시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즉 일본열도가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 아래 놓이게 되고, 일본내 대북한 위협론이 확산됨에 따라 일본정부는 대북한 위협론의 확산에 대한 대응, 신뢰할 수 있는 대북한 채널 확보, 미·북관계의 진전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북한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제1차원의 일본내 대북한 위협론의 확산, 제2차원의 한국정부의 대북한 포용정책의 전향적인 추진, 제3차원의 미·북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화과 억지'를 동시에 전개하게 되었다.

요컨대, 북한이 ① 대일본 관계개선을 위한 접근을 추구하여 '대화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②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에 의한 '잠재적 협박전략'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① 접근과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 정책을 전개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② 군사적 역할 증대 및 군사력의 정비를 바탕으로 하는 대북한 강경 조치를 취하면서 ③ 북한 미사일문제 등과 관련하여 '대북한 압박외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일본은 대북한 강·온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억지를 바탕으로 한 대화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1) 접근과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 정책

경색된 북·일관계를 타파하기 위해 일본은 1998년 7월 30일 오부치(小淵) 내각의 발족과 더불어 노나카(野中廣務) 관방장관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였고, 북한 역시 대일본 비난을 자제하면서 동년 8월초 '교직원 일·조(日·朝) 우호친선 대표단', '치바현(千葉縣) 의회 대표단' 등을 초청하는 등 관계개선을 모색하려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사건으로 일본 국내에서 대북한 강경론이 확산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식량지원 중단, 직항 전세기의 운항 중단,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협력의 일시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북한도 일체의 대화 창구를 폐쇄하게 되었다. 즉 북·일관계는 거의 단절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이 북·일관계가 재차 접근과 대화의 관계로 전환되면서 '수면 아래' 또는 '수면 위'의 접촉을 가지게 된 것은 1998년 12월경부터이다. 즉 북한과 일본은 1998년 12월에 뉴욕에서 일본 외무성 동북아 과장이 북한의 이근 유엔 대표부 차석대사와 접촉을 가졌고, 이어 1999년 1월경 自民黨의 나카야마 마사아키(中山正輝) 衆議院 예산위원장이 북한의 송호경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접촉을 가졌다.

그와 같은 접근과 더불어 오부치(小淵惠三) 총리는 금년 1월 19일의 시정연설에서 북한에게 미사일발사 위협 등이 제거될 경우 대화와 교류를 통한 관계개선의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고, 베이징 주재 북·일 양국 대사관도 접촉을 가졌으며, 나아가 동년 4월 싱가포르에서는 일본 외무성의 고레시게(阿南惟茂) 아시아국장과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고위 당국자간에 수교회담의 재개 등 현안 논의를 위한 비밀접촉이 이루어졌다.¹²³⁾

또 오부치 총리는 동년 5월 3일 워싱턴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한·미·일 3국이 대화와 억지 전략을 병행하여 공동대응을 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아울러 회담후 가진 회견에서는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개설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¹²⁴⁾ 이어 오부치 총리는 동년 5월 14일 총리관저에서 한국의 신문·통신·방송사 정치부장들과 가진 모임에서 “앞으로 북·일관계가 정상화돼 경제협력 문제가 나오면 적극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언급하였다.¹²⁵⁾

그리고 동년 8월 10일 북한이 「중앙통신」을 통하여 ‘대일본 3원칙’ 즉 ① 일본의 대북한 압살정책 중지, ② 힘에 의한 대결의 중지, ③ 과거 죄악에 대한 성실한 사죄·보상의 제시와 더불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온 것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북한의 대일본 자세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는 다소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면서 미사일 발사의 저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대북한 접근과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¹²⁶⁾

123) 「동아일보」, 1999. 5. 13.

124) 「동아일보」, 1999. 5. 5.

125) 「한겨레신문」, 1999. 5. 15.

126) 「朝日新聞」, 1999. 8. 11; 「産經新聞」, 1999. 8. 11.

따라서 동년 9월의 베를린 미·북 고위급회담 결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중단되자, 동년 10월 18~20일에 일본 외무성의 우메모토 가즈요시(梅本和義) 동북아과장은 싱가포르에서 북한 외교부의 송일호 일본과장 및 당 외교 당국자와 비공식회담을 가졌고, 이어 일본정부는 북한에 대한 불신감으로 인하여 대북한 제재 해제조치에 대하여 신중한 태도를 표명하면서도 동년 11월 2일 북한-일본간의 전세기 운항 동결을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동년 12월 1~3일에 무라야마 전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초당파 국회의원단을 평양에 파견하였다. 일본 국내의 분위기는 대북한 위협론의 확산과 더불어 '先 납치의혹 해결, 後 수교교섭'을 주장하는 '入口論'이 '납치의혹과 수교교섭의 동시 논의'를 주장하는 '出口論'보다 우세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국교정상화 교섭을 재개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초당파 국회의원단'의 평양방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出口論'을 택하였던 것이다.

초당파 국회의원단의 방북의 성과로서, 동년 12월 3일 북·일 양국 정부에게 국교정상화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즉 초당파 국회의원단과 북한 노동당은 ① 국교정상화 교섭의 조기 재개, ② 양국 정부의 협력아래 적십자사를 통한 인도적 문제의 협의·해결, ③ 교류와 왕래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동년 12월 20일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위한 국장급 예비회담을 베이징에서 개최하고 2000년 초에 대사급 본회담을 개최하는 방침을 제시하였으며,¹²⁷⁾ 아울러 식량지원, 납치

127) 「동아일보」, 1999. 12. 6, 12. 13 및 「朝日新聞」, 1999. 12. 11. 「朝日新聞」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예비회담에서 지난 1992년 11월 이후부터 시작된 본 교섭의 의제를 ① 국교정상화에 관한 기본문제, ② 재산권 청구권 등 경제적 제문제, ③ 핵사찰 등 국제문제, ④ 기타문제 등 네 가지로 제안

의혹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장급 예비회담과 비슷한 시기에 북·일 적십자 협의를 개최하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¹²⁸⁾ 또 일본 정부는 언론을 통하여 대북한 식량지원 금지의 해제조치를 세 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것을 시사하였고,¹²⁹⁾ 나아가 동년 12월 14일에는 대북한 제재조치를 전면 해지한다고 발표하였다.¹³⁰⁾ 즉 일본 정부는 ① 국교정상화 교섭과 인도적 문제의 협의를 병행하려는 전략과 더불어 ② 주요한 ‘교섭의 전략적 카드(bargaining chip)’ 가운데 하나인 식량지원을 교섭의 진전과 연계시키려는 전략적 의도를 표명한 것이다.

요컨대, 북·일관계는 초당파 국회의원단의 방북을 계기로 1992년 11월 이후 중단된 국교정상화 협상의 재개와 더불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일본은 대북한 관계개선정책을 북·일간의 주요 현안의 처리와 국교정상화 교섭의 재개를 위해 신뢰할 만한 대화채널의 확보를 지향하여 전향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일본인 납치문제, 대포동 2호 발사 파문 등에 의한 대북한 불신감으로 인하여 신중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1999년 12월 19·21일의 베이징 적십자 회담 및 20일의 국교정상화 예비회담에 임하여 ‘일본인 납치문제’로 북

하고, 본교섭 1차 개최지는 평양으로 한다는 점을 북한에 제시할 것이라고 한다.

128) 「朝日新聞」, 1999. 12. 11.

129) 「교토통신」, 1999. 12. 6. 「교토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첫 번째 단계 조치로서 대북한 식량지원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두 번째 단계조치로서 세계식량기구(WFP) 등 국제기관을 통하여 북한에 식량을 보내며, 세 번째 단계의 조치로서 직접 북한에 식량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한다.

130) 일본의 대북한 제재조치는 ① 국교정상화 교섭 중단, ② 대북 식량지원 동결, ③ KEDO 분담금 동결, ④ 대북한 전세기 운항 금지 조치 등이었는데, KEDO 분담금 동결 및 대북한 전세기 운항 금지 조치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표명한 직후 해제되었다. 이로써 전면해제 조치의 결과, 국교정상화 교섭 중단과 대북 식량지원 동결 등 두 개의 조치가 해제되었다. 「동아일보」, 1999. 12. 15.

한과 갈등을 빚게 되자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기도 하였다.¹³¹⁾

(2) 대북한 억지력 강화정책

1998년 8월 초순 일본의 코우치현(高知縣) 쿠보카와 앞바다에서 또 다시 북한산 각성제의 대량 밀수사건(약300kg, 180억엔)이 적발됨에 따라 일본 공안당국의 북한에 대한 경계의식이 강화되었는데,¹³²⁾ 동년 8월 31일 북한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사건의 발생과 더불어 일본내 대북한 잠재적 위협인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증폭하게 되었다. 즉 북·일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북한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사건 직후, 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동년 9월 7일 한국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일본의 안전보장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사태”라고 강조하였고, 노나카 관방장관은 동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설사 인공위성을 쏘았다고 해도 이는 추진력을 갖고 있는 물체(로켓)에 위성이 달려 있었는데, 탄두가 달려 있었는데의 차이일 뿐”이라며 일본의 군사적 위협에는 마찬가지로서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은 일본 지도부의 대북한 인식은 1991년 1월 3일 노로타 호세이(野呂田芳成) 방위청 장관으로 하여금 “심각한 북한의 위협이

131) 1999년 12월 19일의 적십자회담 도중 일본측이 ‘납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북한측이 반발하여 20일 회담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20일의 국교정상화 예비회담도 무산되게 되었다. 이에 일본이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자 북한은 적십자 회담에 재차 응하게 되었고, 국교정상화 예비회담도 21일 개최되게 되었다. 21일의 적십자회담에서는 일본의 대북한 식량지원의 조기 개시, 2000년 봄에 ‘북송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 재개, 북한의 해당기관에 의한 일본인 행방불명자의 신원 및 소재 조사 등이 합의되었다. 「동아일보」 1999. 12. 22, 23. 및 「朝日新聞」 1999. 12. 21, 22.

132) 미국의 정보당국자 및 언론은 북한이 각성제 밀수출의 최대 표적으로 50만 명 이상의 고객이 있는 일본을 대상으로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SAPIO」, 1999. 4. 14.

있을 경우, 일본은 북한의 군사기지에 대해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국민들의 대북한 및 조총련에 대한 인식도 매우 악화되기 시작하였는데,¹³³⁾ 일본정부는 일본 국내의 대북한 위협론의 확산을 명분으로 자위대 전력의 질적 강화, 한·일 해상 합동군사훈련의 실시,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한 대북한 억지력의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아울러 ‘대북한 압박외교’를 전개하게 되었다.¹³⁴⁾

즉 앞장에서 언급한 바 같이, ‘21세기의 군사·정치대국’을 지향하여 전력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일본 방위청은 북한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사건을 계기로 정보수집 및 초기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칩보위성 4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것을 결정하였고, 아울러 미국과의 ‘TMD 공동연구’에 참여하여 ‘해상전역미사일 방어체제(NTWD)’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일본 방위청은 북한 공작선의 영해 침투사건을 계기로 자위대 함정에 소구경 기관총 등 장비

133)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 사건을 계기로 일본국내 대북한 여론이 악화되자 조총련계 상공인들은 대북한 투자에 대해 상당한 거부반응을 나타내었다. 예컨대, 조총련 고지현(高知縣) 상공회는 북한이 계속해서 제일교포들의 생활을 고려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와 같은 정책을 시행한다면 대북한 경제지원 및 투자를 거부할 것이라는 항의문을 조총련 본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요컨대 일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무모한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 사건후, 일본내 대북한 및 조총련에 대한 여론이 극히 악화되고, 그에 따라 생활에 위협을 받게 된 조총련계 교포들의 대북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배정호,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서울, 통일연구원, 1999.) 또 1999년 5월 27일 후지-TV의 여론조사발표에 의하면, 일본국민의 85%가 북한을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34) 현재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문제와 관련하여 한·미·일 3국 가운데 가장 강경한 대북한 제재입장을 표명하였는데, 즉 일본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지원을 동결하고 추가제재를 가하는 방침을 시사하였다. 또 일본은 한·미·일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외교를 전개하는 한편, 중국 등 주요 국가들과의 정상회담, 각료급 회담, 동아시아의 주요 국제회의 등에서 북한의 미사일문제를 비중 있게 거론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를 보강하고 해상보안청 항공기에 중화기를 탑재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최고 44노트(약 80km) 속도를 낼 수 있고 소형 고속정을 정선시킬 수 있는 신형 고속정 6척을 2003년까지 도입하는 등 해상자위대의 질적 증강을 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방위청은 대북한 억지력 강화의 일환으로써 한·일 안보대화의 활성화와 더불어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비한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 방위청은 1999년 8월 6~7일 제주도와 나가사키(長崎)縣 고토(五島) 열도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최초로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였고,¹³⁵⁾ 이어 동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한반도 급변사태를 상정한 대규모 기동 해상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해상훈련은 사전의 도상훈련(9월 6~9일)과 함께 함정 110척, P-3C 등 항공기 180대, 병력 3만 2,000명이 동원되는 대규모 실전훈련이었는데, 훈련상황을 한반도정세 긴급상황(전반부)과 북한 남침으로 인한 주변사태 발발상황(후반부)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¹³⁶⁾ 이밖에 동년 11월 30일 북한 공작선의 영해 침범을 가정한 '선박 정선 훈련'을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공동훈련으로

135) 한·일간의 첫 합동훈련은 인도적 훈련이라는 조건부로 실현되었는데, 한국 측에서는 도입하지 얼마되지 않은 P-3C 초계기 및 잠수정의 운용방법 등을 해상자위대로부터 배울 계기로 활용하고자 하였고, 일본의 해상자위대 측은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 관련법의 성립으로 가능하게 된 '자위대 함선에 의한 자국민 수송활동' 등을 실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한국 해군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첫 교류는 1990년 환태평양 합동 군사훈련을 계기로 이루어졌고, 이어 1991년에 한국 유학생이 해상자위대의 간부학교에 과견되어졌으며, 1994년부터는 연습함대의 상호방문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8년 12월 북한 반잠수정 격침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국방부와 일본의 방위청, 海上幕僚僚簡間に 3루트 핫라인이 신설되게 되었다.

136) 한반도정세의 긴박시를 대비한 훈련에서는 한국내 체류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구출을 위해 대형 수송함과 이를 호위하기 위한 전투함들이 요코스카·마이즈루 기지 등으로부터 출항하였고, 주변사태의 발발에 대비한 훈련에서는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 관련법에 근거하여 해상자위대가 작전 중인 미군에게 연료·물자를 보급하고, 인원을 수송하는 등 후방지원을 행하였다.

실시하였고, 2000년 2월에는 ‘북한 기습남침에 따른 주변 급변사태’를 상정한 대규모 ‘미·일 합동 도상훈련’을 계획하고 있다.¹³⁷⁾ 이 훈련에서는 본격적인 지휘소 연습이 실시될 예정인데, 지휘소 연습은 북한의 남침을 가상해 이를 주변사태로 판단한 뒤, ① 미군에 대한 병참 지원 실시, ② 북한의 미사일 공격 및 무장 게릴라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 점거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도상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 일본 방위청은 1997년 1월 20일 종합정보기관인 ‘정보본부’의 설치에 이어 북한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에 자극을 받아 1998년 12월 28일 ‘방위정보회의’의 신설을 결정하였다. 방위정보회의는 북한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 사건 직후 일본정부내 정보 전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 데 대한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발족하게 되었는데, 위기발생시 정보본부에서 수집·분석한 동북아 군사정보 등 전략정보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총리에게 자위대 출동여부를 신속하게 건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나아가 일본정부는 내각관방(內閣官房)의 종합전략기능 및 위기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11일 ‘내각정보회의’를 발족시켰다. 내각정보회의는 북한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사건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에 따라 현재 북한정세를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보능력 및 위기관리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일본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사건 및 북한 공작선의 영해 침투사건을 계기로 대북한 위협론의 확산되는 분위기를 활용하여 자위대의 군사·정치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유사법제의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自民·自由黨 연립정부와 야당 公明黨과

137) 『讀賣新聞』, 1999. 11. 22.

의 정책연대아래 <표 14>와 같은 내용의 주변사태법, 자위대법 개정안, 미·일 물품역무 상호제공 협정(ACSA) 개정안이 성립되었다. 나아가, 일본정부는 북한 공작선의 영해 침투사건으로 드러난 영해·영토 방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상자위대에 '영역경비업무'를 새롭게 부여하는 방안과 함께 또 다른 유사법제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 한반도 급변사태시 북한에 출입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검문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중에 있다.¹³⁸⁾

이처럼 일본은 자위대 전력의 질적 증강과 더불어 정보기관의 강화, 유사법제의 정비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대북한 역기능력의 증강이기도 하다.

(3) 북한의 미사일 문제와 일본의 대응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8년 8월 미사일 운반체계를 시험발사하여 일본을 크게 자극하였던 북한은 1999년 6, 7월에 접어들어 또다시 중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시험발사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즉 북한 정권의 창건일인 9·9절 이전에 사정거리 약 4,000~6,000km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것이었다.¹³⁹⁾

북한의 이와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일본은 한·미·

138) 원래 선박검사조항은 「주변사태법」의 원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유엔안보리 결의 포함문제와 관련하여 自民·公明黨과 自由黨간의 의견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음에 따라 원안에서 삭제되었다.

139) 1998년 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던 함경남도 화대군·무수단리 소재 미사일기지에서 20m 높이의 발사대를 33m 또는 60m 수준으로 올렸다고 하는데, 이 발사대의 높이를 분석하면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약 4,000~6,000km로 추정된다고 한다. 북한은 이와 같은 미사일의 탄두에 인공위성체를 장착하여 미사일 발사로 인한 주변국의 비난과 경제제재를 교묘히 피해 나가려는 방법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통일정보신문」 1999. 7. 21; 「産經新聞」, 1999. 8. 3.

일 3국 가운데 가장 강경한 대응책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열도 전역이 사정권에 아래 놓여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은 1999년 6월 6일 베이징 비공식 외무실무자 접촉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재발사할 경우 북·일관계개선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는데, 대처방안으로서 ① 군사적 차원에서는 전투기에 의한 미사일 기지의 폭격 방안, 첩보위성 및 TMD체제에 의한 대응 등을 강구하였고, ② 국제법적 차원에서는 「유엔해양법조약」 및 「시카고조약」을 근거로 하여 제재방안을 검토하였으며, ③ 경제적 차원에서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10억 달러의 지원자금 동결, 조총련의 대북한 송금 중단, 식량지원 중단 등의 제재를 고려하였다.¹⁴⁰⁾ 그리고, ④ 외교적 차원에서는 한·미·일 공조대응의 공고화를 중심으로 대북한 압박 외교를 추진하였다. 즉 일본은 1999년 6월 20일의 G8(선진 7개국 + 러시아)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미사일 확산에 대해 깊이 우려하는 내용이 담기도록 하였고, 동년 7월 9일의 중·일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가 일본의 안전은 물론 동북아 평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를 나타내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동년 7월 26일 개최된 아세안지역포럼(ARF)의 의장성명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이 표명되도록 하는 외교공작을 전개하였다.¹⁴¹⁾ 그리고 동년 7월 28일 코언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하였

140) 아무런 사전통고도 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① 해역사용에 대해 “연안국의 권리에 대한 타당한 고려를 기울인다”고 규정된 유엔 해양법 조약 및 ② 항공기의 안전항공을 정한 시카고조약에 저촉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북한이 유엔해양법조약 및 시카고조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지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해사기구(IMO)에 참가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근거로 제재수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日本經濟新聞』, 1999. 7. 12.

141) 1999년 7월 26일 고부라 마사히코 일본 외무장관은 탕자쉬엔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ARF의 의장 성명에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에 대해 우려한

을 때에는 북한의 미사일의 발사저지를 위해 한·미·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합의를 도출하기도 하였다.¹⁴²⁾

일본의 이와 같은 사전 대응 노력과 더불어 사후조치로서 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재발사하였을 경우에는 미사일의 항적을 포착할 수 있도록 최신예 이지스함 3척을 동해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고, 또 ② 미사일이 일본 영토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재해파견’규정을 적용해 자위대를 파견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③ 연속 착탄으로 무력공격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방위출동’을 명령할 방침을 세웠다.¹⁴³⁾

이와 같은 일본의 적극적이고도 강경한 대처는 미국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저지를 위한 전방위 외교노력과 공조를 이루면서 북한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 주었다. 즉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1999년 9월의 베를린 미·북 고위급회담 결과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에 대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였다. 즉 오부치 총리는 1999년 9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미사일 재발사 동결이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제재조치의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고무라 외상도 “본인 납치의혹 문제 등을 포함하여 북한 측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한 후 각종 제재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였다.¹⁴⁴⁾ 일본언론들도 사실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신중한 대응을 촉구하였다. 「산케이신문」(産經新聞)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포기하지 않았고 많은 과제를 연기한 잠정적인 타협에 불

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 결과 1998년 8월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최근의 미사일 발사 관련 활동이 한반도와 지역안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긴장을 고조시킬 것에 대해 우려한다는 내용이 ARF의장성명을 통하여 표명되었다.

142) 「朝日新聞」, 1999. 7. 29.

143) 「동아일보」, 1999. 8. 9.

144) 「産經新聞」, 1999. 9. 14.

과하므로, 최소한 미사일 발사대의 해체정도는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¹⁴⁵⁾ 「니혼케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 자주권 문제라고 주장함으로써, 교섭카드를 남긴 채 경제제재 완화 등 보상조치만을 수중에 넣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였으며,¹⁴⁶⁾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향후 과제는 한·미·일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며, 아울러 이번 합의를 북한의 미사일 개발 중지로 연결시킨 후 제재조치를 해제하고 대화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⁴⁷⁾

따라서 일본정부는 1999년 11월 2일 일본정부는 북한-일본간의 전세기 운항 동결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하면서도, 식량지원 동결이나 수교교섭 동결 등 다른 대북한 제재 해제조치에 대해서는 북·미회담의 진전 여부, 북·일간 현안에 대한 북한측의 대응 등을 지켜보면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일본의 북한에 대한 불신감이 여전함을 나타내며, 아울러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상당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북한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잠재적 협박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일관계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채널’을 확보하는 이상의 수준으로 발전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무라야마 초당파 방북단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이 재시될 경우에도, 대량살상무기와 납치의혹문제는 가장 주요한 현안인 동시에 난제로서 교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5) 「讀賣新聞」, 1999. 9. 14.

146) 「日本經濟新聞」, 1999. 9. 14.

147) 「朝日新聞」, 1999. 9. 14.

IV. 결 론

1. 일본 국내정치변동의 대외정책에로의 투영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국제정치와 국내정치가 連動하는 영역이 급격하게 증대되면서 국제정치와 국내정치간의 浸透현상도 급증하고 있다.

일본 정치도 탈냉전시대의 도래에 따른 국제환경 및 일본사회의 변화, '정책-정치'공간의 확대와 自民黨 정권의 한계성 등으로 인하여 커다란 변동을 겪게 되었다.

그와 같은 정치변동은 미시적 차원에서는 정계개편을 향한 권력게임의 산물이지만, 거시적 차원에서는 '21세기의 정치대국 일본'을 지향하여 새로운 정치적 틀, 국가체제를 형성해 가는 가운데 수반되는 정치적·역사적 의미를 지닌 진통이기도 하다.

즉 동서냉전시대의 55년체제가 '통상국가 일본'을 '경제대국 일본'으로 발전시켰다면,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7·18총선을 계기로 형성되는 새로운 체제는 '경제대국 일본'을 '정치대국 일본'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고, 따라서 정치변동 속에서 '강한 일본'을 주창하면서 부상한 '쇼와세대의 신보수세력'은 21세기의 도전에 대비하여 국가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신보수세력의 정치대국화를 위한 전략은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글로벌 차원, 아시아-태평양 차원, 국내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것인데, ① 일본의 대외정책은 ㉞ 글로벌 차원의 전략, 즉 유엔 중시 전략에 따라 유엔개혁·예산분담·PKO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꾀하고 있고, ④ 아시아-태

평양 차원에서는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발전에 따른 증대된 일본의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의 영향력 확대와 더불어 독자적 영역의 확보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리고 ② 일본의 국내정치는 확대된 대외활동 및 군사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정비 및 군사력의 질적 증강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국내정치와 대외정책이 연계되는 부문이며, 국내정치의 변동이 대외정책의 변화에 투영되는 부문이기도 하다.

위에서 언급한 바 같이, 일본의 정치변동은 미시적 차원에서는 권력게임의 산물이지만, 거시적 차원에서는 ‘21세기의 정치대국 일본’을 위한 정치적·역사적 의미를 지닌 진통인데, ‘국내정치의 변동과 대외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정책의 연관, 浸透現象 등에 관하여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부분이 주목되는 특징이다.

첫째, 自民黨정권이 붕괴하고 연립정권의 시대가 전개되면서 공산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당이 여당 경험을 가지게 되는데, 그와 같은 일본정당의 국정운영의 경험은 현실적인 정책지향형 정당을 추구하도록 하면서, 정치공간에서의 보수·우경화 부문이 확대되도록 하였다. 이는 일본이 정치대국화와 더불어 국제사회에서의 군사적 역할의 증대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정치적 환경의 조성에도 순기능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7·18총선 이후 일련의 정치적 변화 속에서 쇼와세대의 신보수세력이 일본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신보수세력의 ‘21세기 정치대국 일본’을 지향하는 정치노선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론’의 제시와 더불어 일본의 대외정책에 투영되고 있다.

셋째, 10·20총선후 自民黨정권이 부활하게 되면서 신보수세력은 自民黨을 중심으로 재결집하게 되는데, 이는 집권기반의 강화와 더불어

‘21세기의 정치대국 일본’을 지향할 수 있는 법적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自民·自由黨 聯政의 수립과 더불어 그 동안 미해결의 난제로 남아 있던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관련 세 개의 법안 즉 「주변사태법」, 「자위대법 개정안」, 「미·일 물품 역무 상호제공 협정(ACSA)」이 국회에서 가결되도록 하였고, 히노마루·기미가요를 국가·국가로 공식화하는 「國旗·國家法」을 성립시켰으며, 아울러 행정개혁·정치개혁 관련 법안인 「정비조직 개편법」, 「지방분권 정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였다. 「정비조직 개편법」의 성립으로 총리의 리더십 및 내각의 위기관리 기능이 강화되게 되었고,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관련 세 개 법안의 성립과 더불어 한반도 유사시 및 일본 주변 유사시를 상정한 대비책이 일본, 한·일협력, 미·일협력 수준에서 활발하게 강구되고 있다.

넷째, 신보수세력은 1998년 8월 북한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 이후 일본내 확산되고 있는 북한 위협론을 ① 직접적으로는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관련 세 개 법안의 성립, 군사력의 질적 증강, 등을 추구하는 데 전략적으로 활용하였고, ② 간접적으로는 보수세력의 결집을 도모하는 데 활용하였다. 아울러 ③ 대북한 ‘대화과 억지’ 병용 정책이 ‘억지를 바탕으로 한 대화’정책으로 질적 전환이 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특징들은 ① 일본의 국내 정치변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신보수세력이 일본정계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하였고, ② 일본정치의 주도세력인 신보수세력이 21세기 일본의 진로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국내 정치변동이 대외정책에 투영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국내의 환경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지도자의 리더십과 결단력, 정치주도세력의 비전 및 정책수행 의지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2.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 증대와 한반도

21세기 정치대국화를 위한 일본의 대외전략은 제2차원 즉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강대국을 지향한 역할증대의 추구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일본은 1996년 4월 17일에 발표된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 과 그 후속조치인 미·일 新 「방위협력지침」의 제정을 통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보장체제를 강화 및 광역화시키면서, 군사적 역할의 증대와 독자적 영역의 확보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군사적 활동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데, '한반도 급변사태' 시에도 주일 미군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1998년 8월 북한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사건 이후, 일본은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고, 아울러 한·일 군사협력, 자위대의 대규모 기동훈련, 미·일 합동 군사협력 등을 통하여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증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사전에 억제하고 사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증대가 일본의 정치대국화 전략에 따른 것이기도 하므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증대로 귀결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또 미·일의 군사협력강화는 '미·일 대 중국의 대립구도'의 조성 등으로 동북아지역내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¹⁴⁸⁾ 동북아지역에서 '미·일 대 중국'을 축으

148) 제2차 중간보고안 발표 이후 중국은 미·일안보체제의 대상범위 확대에 강한 경계감을 표출하였고, 최종안 발표후에는 매우 민감하고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1997년 9월 25일 중·일 뉴욕 외무장관 회담에서 중국의

로 하는 군사적 대립구도의 형성은 한반도의 통일환경 조성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21세기의 정치대국을 지향한 일본의 대외전략은 대북한정책에도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일본은 ① 전후결산, ②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증대, ③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증대, ④ 환동해지역의 발전 및 대륙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등을 위하여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및 국교정상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① 정치대국화 전략에 따른 군사적 역할의 증대, ② 군사활동의 증대와 군사력의 질강 증강 등이 대북한정책에도 투영되어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의 강화와 함께 대북한 억지력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대북한정책은 강·온전략인 ‘대화과 억지’전략의 병행 추진에 따라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억지전략의 추진과 더불어 신중하게 전개되고 있다.

1999년 12월 1~3일 초당파 국회의원단의 방북을 계기로 북·일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함과 더불어, 북·일 양국이 주요 현안의 처리와 국교정상화를 위해 ‘수교회담’을 향해 전향적인 자세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잠재적 협박’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일관계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채널’

교부장은 일본외상에게 “대만 해협이 적용범위 대상일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나아가 중국은 미·일 新 「방위협력지침」을 ‘중국포위망’ 구축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미·일 견제를 위한 러시아와의 전략적 연대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에 러시아는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일본과의 경제협력에만 최대한의 관심을 표명하였다. 또 동남아국가들은 중국과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영토분쟁을 겪고 있으므로, 일본의 세력확대보다는 미·일에 의한 중국견제효과를 더 크게 평가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중·일 수교 정상화 25주년을 맞이하여 1997년 11월 11~17일 방일한 리펑(李鵬) 중국 총리와 회담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에 따른 중국 측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각료급 방위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일본은 정상외교 및 각료급 교류를 전개하여 정치·외교·군사·경제 등 여려분야에서 중·일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을 확보하는 이상의 수준으로 발전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북·일관계는 양자간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미·북관계, 남북한관계, 동북아지역의 전략환경 등의 영향을 받는데, 북·일관계 진전의 제약 요인에 대해서 <표 15>와 같이 다차원적으로 고찰해 보면, <표 17>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18> 북·일관계의 다차원적 인식과 제약요인

제1차원	일본인 납치문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제2차원	한국 대북한 포용정책의 좌절, 남북관계의 긴장·완화
제3차원	미국의 세계핵전략과 북한 핵·미사일문제
제4차원	'미·일 대 중국'의 대립구도에 의한 '한·미·일 대 중·북'의 대립 구도

3. 정책적 함의

가. 21세기를 주도할 개혁세력의 구축

국내외 환경의 전환기적 변화 속에서 일본이 21세기를 위한 개혁과 체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① 일본의 정치 주도세력인 신보수세력의 21세기를 향한 비전과 의지, ② 조정형 리더십에도 불구하고 내려지는 총리의 결단, ③ 21세기를 향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와 국론형성 등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도 21세기를 향한 개혁을 주도해 갈 수 있는 ① 개혁철학, 비전, 의지를 지닌 '국정운영 주도세력'을 형성·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② 통합시스템의 운영·강화와 더불어, ③ 지도자의 합리적 이고도 민주적인 리더십이 발휘되는 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과 6자회담

미·일안전보장체제의 확대·발전에 따른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증대는 ① ‘미·일 대 중국의 대립구도’의 조성에 의한 동북아시아의 갈등 조장, ② 동북아시아의 갈등·대립에 따른 남북한관계의 불안정, ③ 한국 안보의 일본에 대한 의존과 더불어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증대로 귀결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북·일관계도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잠재적 협박전략’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북아시아는 역내 군사적 갈등요인 즉 중·일 군사력 경쟁,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다자간 안보협력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과의 안보대화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중국·러시아와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군사교류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미·일·중·러와의 양자간 차원에서 조성되는 신뢰관계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시스템의 창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즉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 틀 내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아울러 중국, 일본 등 관계국가들의 군사력 및 국방정책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안보협력 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역내 국가들간의 인적 교류, 정보교류, 안보관련 세미나의 개최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군사력 및 군사정책의 투명성 제고, 신뢰조성 및 구축에 기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과 병행하여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력을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다자간 경제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할 경우, 이는 동북아 다자간 경제협력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안보협력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을 절실하게 인식하게 되고, 따라서 다자간 안보협력 시스템의 구축을 촉진시키는 ‘축매 기능’을 할 것이다. 즉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신기능주의적 접근을 하는 것이다.

최근 한·일 양국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6자회담도 21세기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다자간 협력 시스템의 구축’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은 6자회담을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하여 일본이 역할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로 간주하고 있는데, 한국으로서는 일본으로 하여금 ① 동북아 다자간 협력 시스템의 구축과 ②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환경조성이라는 양차원에서 6자회담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동북아 다자간 협력 시스템의 구축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환경조성’ 차원에서 6자회담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한국 통일외교의 주요한 과제이다. 즉 6자회담을 통하여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다자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북한에게 ① 동북아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場을 제공하고, 아울러 ②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남북관계, 북·일 및 북·미 양자간 관계의 한계성을 극복토록 해 주는 것이다.

다. 대북한 공조체제의 강화와 공동이익의 개발·확대

‘국내 정치변동의 대외정책에로의 투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미국과 일본에서 야기되는 국내정치의 변동은 한·미·일 공조체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2000년의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일본의 대북한정책 및 한국의 대북한 포용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정부가 대북한 강경정책을 취하

게 되고 이로 인해 북·미간에 갈등이 야기될 경우, 한·미간의 입장 차이와 더불어 한·미·일 공조체제에 갈등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는 한국은 일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한·미·일 공조체제의 갈등을 극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즉 한국은 일본과의 공조체제를 강화시키고, 북한과 관련된 한·일 공통의 이익을 개발하며, 이를 확대시키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한·일간에는 북한의 도발 및 한반도의 급변사태의 발발에 대한 억지력 강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처, 대량의 해상난민에 대한 대책, 조총련에 대한 대책 등 상호협력을 필요로 하는 주요한 현안들이 있다. 아울러 한·일간에는 2000년 월드컵 공동개최에 따른 상호이익의 도모, 대북한 투자환경의 개선 및 투자시 한·일 컨소시엄의 형성, 환동해 경제협력권의 형성과 상호이익 확대, 동북아 다자간 협력 시스템의 구축과 6자회담 등 공통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과제들이 있다.

라. 국가안전보장회의 강화와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설립

21세기와 새 천년의 도래, 즉 전환기의 시대는 국제관계를 ‘과거의 갈등’에만 얽매이는 ‘부정적 사고’보다는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오늘의 협력과 내일의 발전’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보도록 하고 있으며, 남북한관계도 ‘냉전적 사고’보다도 ‘화해와 협력을 통한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한반도 경영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 있어서 21세기의 도전과 변화는 ‘포괄적 안보’ 또는 ‘총합안보’(comprehensive security)를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 즉 탈 냉전 시대 21세기의 도래와 더불어 국가의 생존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안보영역이 다양화되고 있고, 안보수단 역시 다각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에 대해 감정적 차원의 대응에서 벗어나, 일본의 국력과 전략에 관한 냉철하고도 총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知日, 用日, 克日 차원에서 대응하여야 할 것이며, 공동이익의 개발과 더불어 대칭적 상호의존관계를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에 주요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국가전략 차원에서 대응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대북한 전략도 ① 한반도 경영 및 ② 민족발전을 지향하는 국가전략(Grand strategy) 차원에서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전략 차원의 통일정책 및 대북한정책은 ① 국제적 차원, ② 국내적 차원, ③ 남북한 차원, ④ 자조적 차원에서 전개된다.

이와 같은 국가전략을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강화되어야 하며, 국가경영전략을 연구하는 연구원의 설립이 필요하다. 즉 ① 21세기의 도전과 변화 속에서 한민족의 발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국가전략의 수립과 더불어, ② 국가전략의 틀 속에서 각 부처의 정책들이 정합성과 총합성을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부처관련 연구기관들을 조정·총괄하면서, ③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정책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좌하는 국가경영연구원의 설립이 필요하며, 포괄적 안보를 추구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강화가 필요한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곽태환 외.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7.
- 국토통일원. 「7·7특별선언」. 서울: 국토통일원, 1990.
- 김달중 편저. 「외교정책의 이론과 이해」. 서울: 오름, 1998.
- 김용호. 「현대북한외교론」. 서울: 오름, 1996.
- 박영호·배정호 외. 「남북한관계와 주변 4국의 대한반도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1998.
- 배정호 외. 「국제갈등의 이해」. 서울: 한국국제교류재단, 1999.
- 배정호.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1999.
- 이기택 외. 「전환기의 국제정치이론과 한반도」. 서울: 일신사, 1996.
- 전동진. 「일본의 대북한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1993.
- 정진위 외. 「새로운 동북아질서와 한반도」. 서울: 법문사, 1998.
- 허문영.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서울: 통일연구원, 1998.
- 橋本龍太郎. 『VISION OF JAPAN』. 東京: KKベストセラーズ, 1993.
- _____. 「政權奪回論」. 東京: 講談社, 1994.
- 武貞秀士. 「北朝鮮深層分析」. 東京: KKベストセラーズ, 1998.
- 防衛研究會編. 「防衛廳·自衛隊」. 東京: かや書房, 1996.
- 防衛問題懇談會. 「日本の安全保障と防衛力のあり方-21世紀へ向け ての展望」. 1994.
- 兵頭二十八. 「日本の防衛力再考」. 東京: 銀河出版, 1995.
- 石黒聲. 「國際政治經濟の理論」. 東京: 勁草書房, 1998.

- 船橋洋一編. 「日本戰略宣言」. 東京: 講談社, 1991.
- 細川護喜. 「日本新黨 責任ある變革」.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1993.
- 小此木政夫·小島朋之. 「東アジア危機の構圖」.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1997.
- 小川和久. 「新北朝鮮と日本」.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1994.
- 小澤一郎. 「日本改造計劃」. 東京: 講談社, 1993.
- 神谷不二. 「戦後史の中の日米關係」. 東京: 新潮社, 1989.
- 室山義正. 「日米安保體制(上下)」. 東京: 有斐閣, 1992.
- 猪口孝. 「現代日本國際政治と日本」. 東京: 筑摩書房, 1991.
- 佐藤誠三郎·松岐哲久. 「自民黨政權」. 東京: 中央公論社, 1986.
- 田中明彦. 「安全保障」. 東京: 讀賣新聞社, 1997.
- 草野厚·梅本哲也. 「現代日本外交の分析」.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5.
- 花井等. 「新外交政策論」.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1998.
- Buckley, Roger. *US-Japan Diplomacy 1945-199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Calder, Kent E. *Pacific Defense*.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Inc., 1996.
- Curtis, Gerald L. ed. *Japan's Foreign Policy After the Cold War Coping with Change*. New York: An East Gate Book, 1993.
- Inoguchi, Takashi. *Japan's Foreign Policy in an Era of Global Chang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3
- Katzenstein, Peter J. *Cultural Norms & National Security: Police and Military in Postwar Japan*. Ithace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 Mochizuki, Mike M. ed. *Toward A True Alliance: Restructuring U.S.-Japan Security Relation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7.

2. 논문

- 배정호. “國際環境의 變化와 日本의 防衛戰略 - 1980년대의 日本의 방위전략.” 「한국정치학회보」 26집 1호, 1992.
- _____. “전후일본의 방위전략.” 「戰略論叢」, 第1輯, 1993.
- _____. “일본의 정치대국화와 국가전략.” 이기택 외. 「전환기의 국제정치이론과 한반도」. 서울: 일신사, 1996.
- _____. “한반도 평화체제와 일본.”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7.
- _____. “미·일안보장체제의 광역화에 따른 일본의 군사적 역할증대와 한반도 급변사태.” 「한국정치학회보」 32집 1호, 1998 봄.
- _____. “신국제질서기 일본의 동북아정책.” 정진위 외. 「새로운 동북아질서와 한반도」. 서울: 법문사, 1998.
- _____. “탈냉전기 북·일관계의 변천과 일본의 대북한 ‘대화과 억지’ 정책.” 「국제정치논총」 제39집 1호, 1999.
- 배정호·임승빈. “일본의 권력구조.” 국제평화전략연구원. 「한국권력구조의 논쟁」. 서울: 풀빛, 1997.
- 허문영. “북·일관계 전망과 대응정책 방향.” 「정책연구」 제2호, 1995.
- 加藤淳子. “政權形成の理論と96年日本の選舉.” 「Leviathan」. 1998 春.
- _____. “96年日本における政黨の政策と閣僚ポスト.” 「Leviathan」. 1999 春.
- 武村降夫. “私が政權と訣別した眞の理由.” 「文藝春秋」, 1994年 6月號.
- ピーター・マア・阪野智一. “日本の政界再編の方向.” 「Leviathan」. 1998 春.

- 山本剛士. “日朝國交正常化の焦點.” 「世界」, 1992年 4月號.
- 信田智人. “橋本行革の内閣機能強化策.” 「Leviathan」 1999 春.
- 玉城素. “日朝國交正常化交渉の歴史的意味.” 「海外事情」, 第39卷 4號.
- _____. “日本の對北朝鮮經濟協力.”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 東京: 日本貿易振興會, 1991. 12.
- _____. “北朝鮮の合弁事業と經濟特區.”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 東京: 日本貿易振興會, 1992. 12.
- 猪口孝. “新族議員大望論.” 「中央公論」, 1994年 3月號.
- 田邊誠. “日朝新時代の幕あげ, アジアの平和と南北統一のために.” 「月刊社會黨」, 1990年 12月號.
- 田中喜與彦. “日朝經濟關係.”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 東京: 日本貿易振興會, 1993. 12.
- _____. “日朝經濟關係.”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 東京: 日本貿易振興會, 1995. 3.
- _____. “日朝經濟關係の現狀と展望.”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 日本貿易振興會, 1996. 12.
- 眞淵勝. “變化なき改革, 改革なき變化.” 「Leviathan」 1999 春.

3. 기타

- 「自衛隊裝備年鑑」. 東京: 朝雲新聞社, 各年度.
- 「防衛白書」. 東京: 大藏省出版局, 各年度.
-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 東京: 日本貿易振興會, 各年度.
- 「北朝鮮の現況」. 東京: 財團法人 ラジオプレス, 各年度.
- 日本 外務省編. 「外交青書」. 東京: 大藏省印刷局, 各年度.

平和・安全保障研究所編. 「アジアの安全保障」. 東京: 朝雲新聞社, 各年度.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毎日新聞」.

「産經新聞」.

「日本經濟新聞」.

「朝日新聞」.

「AERA」.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저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저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저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용	저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정영태	저	6,000원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김국신	저	4,000원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여인곤·김영춘·신상진의 공저		10,000원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안 연구	오승렬	저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저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저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저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저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저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전성훈	저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저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김영운·이우영	공저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저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저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공영	저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저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정영태·오승렬	공저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저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저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이현경	저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저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저	5,500원
96-29 한·중 안보협력방안 연구	최춘흙	저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저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저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저	7,000원
97-04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저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손기웅	저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배정호·신상진·조한범 공저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김수암 공저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저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저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저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계: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저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저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저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저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저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저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저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계 정영태 저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저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저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저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저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윤 저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헌경	저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저	5,500원
97-26	북한의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허문영	저	7,0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김병로·김성철	공저	6,500원
98-04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저	4,000원
98-05	북한 외자유치 법령의 문제점	채성호	저	6,500원
98-06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합의	이교덕	저	4,500원
98-08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관희	저	4,000원
98-09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	박종철	저	6,000원
98-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신상진	저	4,000원
98-11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임강택	저	7,500원
98-12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전략	박영호	저	5,500원
98-13	통일독일의 균통합 사례연구	손기웅	저	5,500원
98-14	한반도 문제를 위요한 미행정부와 의회의 협력과 갈등	육대환	저	4,500원
98-15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조한범	저	4,000원
98-16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김규륜	저	3,500원
98-17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8-18	북한의 해운산업 현황과 해운분야 남북한 협력 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8-19	중·대만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최춘흠	저	3,000원
98-20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배정호	저	4,000원
98-21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 연구: 북·일관계정상화와 남북한관계	김영춘	저	3,500원
98-22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재고전략: 점진적·포괄적 구상	전성훈	저	7,500원
98-23	미국의 4자회담 전략과 한국의 대응책	이헌경	저	5,000원
99-01	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	제성호	저	5,000원
99-02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이금순	저	5,000원
99-03	한반도의 비핵화실현과 남북한·일본 3국비핵지대창설	전성훈	저	6,000원
99-04	탈냉전기 일본의 국내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배정호	저	6,500원
99-05	남북 경제교류·협력 발전방안 연구: 추진성과 평가 및 발전대책	김규륜	저	5,500원
99-06	북한의 인사행정	최진욱	저	4,500원
99-07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구동독 지역 적용에 관한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99-08	김정일의 퍼스낼리티·카리스마·통치스타일	김성철	저	5,000원
99-09	북한경제의 변화와 인센티브구조: 비공식부문의 확산에 따른 개혁 전망	오승렬	저	5,500원
99-10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경제부문 중심	최수영	저	5,000원
99-11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이우영	저	5,000원

99-12	북한의 지역자립체제	김병로	저	7,000원
99-13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평가와 발전방향	조한범	저	4,500원
99-14	클린턴 행정부와 의회 관계: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김국신	저	4,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육태환·전현준·제성호의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i>	육태환·전현준·제성호의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송정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i>	김병로·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송정호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8</i>	최의철·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9	최의철·서재진·제성호의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9</i>	최의철·서재진·제성호의 공저	\$9.90
북한인권백서 2000	제성호·최의철·서재진의 공저	7,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96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6~1997	6,000원
----	-------------------------	--------

97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7~1998	5,000원
98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8~1999	5,000원
99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9~2000	6,5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남북한관계 현황 및 '97년 정세 전망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98-05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5,500원
98-06 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2,500원
99-01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5,500원
99-0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7,000원
99-03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6,500원

99-04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방향	5,500원
99-05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적응 개선방안	5,0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	10,000원
96-02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하)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통일연구논총,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1998.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8권 1호 (1999)	7,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5 (1996)</i>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6 (1997)</i>	9,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7 (1998)</i>	8,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 기타

북한의 위기상황인식에 관한 연구

목정균 저 5,500원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을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 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을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본원 홈페이지에서 모든 발간물에 대한 초록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1998년~1998년 발간물은 원문을 온라인 상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관회원의 경우 담당자 1인만 가능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